

연구보고서 2025-21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김은정
이지혜·김은지·조선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5-21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공감과어울림 세종인쇄정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096-0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21>

발|간|사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구조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 출산율 하락 속도는 과거와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혼인과 출산, 가족 형성과 관련된 인구동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저출생을 다룬 연구는 축적되어 왔으나, 혼인·이혼·자녀 수별 출산율 등 핵심 인구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하락 국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이확률 기반 인구모형을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혼인, 이혼,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출산탄력성 분석과 분해분석을 통해 출산율 변화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조사를 병행하여 최근 인구동태 변화의 배경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혼인의 영향이 가장 크며, 최근에는 첫째 자녀 출산과 관련된 유배우 출산율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저출생 정책이 혼인 이행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 해소와 함께, 첫째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보고서가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근거에 기반한 인구

정책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 수행에
힘써 주신 연구진과 귀중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출산율 변화 선행연구 검토	17
제1절 출산율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9
제2절 출산율 변화 분석 방법 검토	22
제3절 소결	25
제3장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추세변화	27
제1절 혼인 동태의 변화	29
제2절 이혼 동태의 변화	39
제3절 출생 및 출산 동태의 변화	46
제4장 인구동태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	59
제1절 Yip & Chen(2016) 전이확률 (합계)출산율 모델	61
제2절 출산탄력성 분석	81
제3절 분해분석	89
제4절 소결	97



제5장 인구동태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 조사 ... 101

제1절 조사 개요 103

제2절 조사 결과 104

제3절 소결 152

제6장 결론 157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59

제2절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161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7

참고문헌 171

Abstract 179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3-1〉 혼인 건수 및 혼인율	30
〈표 3-2〉 연령별·성별 일반 혼인율	32
〈표 3-3〉 혼인 종류별 혼인 비중	33
〈표 3-4〉 결혼에 대한 인식	36
〈표 3-5〉 재혼에 대한 인식	38
〈표 3-6〉 이혼 건수 및 이혼율	39
〈표 3-7〉 연령별·성별 일반 이혼율	42
〈표 3-8〉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44
〈표 3-9〉 미성년 자녀 수별 이혼	44
〈표 3-10〉 이혼에 대한 인식	46
〈표 3-11〉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합계출산율	47
〈표 3-12〉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49
〈표 3-13〉 연령대별 유배우 출산율	50
〈표 3-14〉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51
〈표 3-15〉 기혼여성 45세~49세1) 출산 진도비2)	52
〈표 3-16〉 주 출산연령 기혼여성 무자녀 비중	53
〈표 3-17〉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55
〈표 3-18〉 기혼 가임연령1) 여성의 이상 자녀 수	56
〈표 3-19〉 기혼 가임연령1) 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57
〈표 3-20〉 혼외 출생에 대한 인식	58
〈표 4-1〉 인구 동태별 전이확률 정의 및 산식	66
〈표 4-2〉 인구 동태 전이확률 산출 사용 자료	70
〈표 4-3〉 연도별·연령별 인구동태별 전이확률	74
〈표 4-4〉 전이확률 합계출산율 및 통계청 합계출산율	80
〈표 4-5〉 연도별·연령별 인구동태 출산탄력성 계수	85
〈표 4-6〉 출산탄력성 분석 및 분해분석 비교	91
〈표 4-7〉 2000년~2020년 합계출산율 분해분석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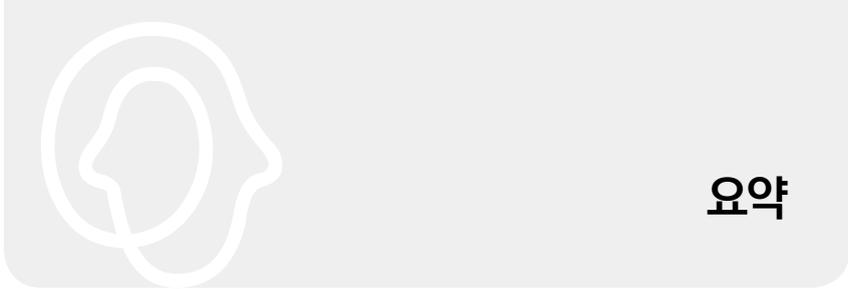
〈표 4-8〉 2000년~2015년 및 2015년~2020년 합계출산을 분해분석	96
〈표 5-1〉 전문가 조사 패널 특성	104
〈표 5-2〉 혼인 감소 요인 (10점 척도)	105
〈표 5-3〉 출생 감소 요인 (10점 척도)	110
〈표 5-4〉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급락 원인 (중복 가능)	115
〈표 5-5〉 연도별 주택매매가격 지수 (2021.6=100)	115
〈표 5-6〉 혼인 이행 지연·포기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 중요도 (10점 척도)	123
〈표 5-7〉 출생 이행 지연·포기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 중요도 (10점 척도)	130
〈표 5-8〉 2019년 맞벌이 가구 남녀 시간 사용	133
〈표 5-9〉 정부 다자녀 자녀 지원 정책 현황	137
〈표 5-10〉 다자녀 중심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9
〈표 5-11〉 전문가 조사 주요 결과 요약	146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연도별 추이	11
[그림 1-2] 연구 체계도	15
[그림 3-1] 평균 초혼 연령	35
[그림 3-2] 미혼 남녀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	37
[그림 3-3] 평균 이혼 연령	43
[그림 3-4]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49
[그림 3-5] 신혼부부(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무자녀 비율	53
[그림 3-6]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54
[그림 4-1] Yip & Chen(2016)에서 제시한 출산 전이 과정 모형	65
[그림 4-2] 전이확률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 산출 과정 도식화(2020년 예시)	69
[그림 4-3]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혼인 전이확률	71
[그림 4-4]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이혼 전이확률	72
[그림 4-5]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유배우 첫째 자녀(0→1자녀) 전이확률	73
[그림 4-6]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유배우 둘째 자녀(1→2자녀) 전이확률	73
[그림 4-7]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유배우 셋째 자녀 이상(2→3+자녀) 전이확률 ...	74
[그림 4-8] 연령별(14세~49세) 여성의 혼인 및 자녀 수별 분포	78
[그림 4-9] 전이확률 합계출산율 및 통계청 합계출산율	80
[그림 4-10] 연도별 인구동태 출산탄력성 분석 결과	85
[그림 4-11] 연도별·연령별 인구동태 출산탄력성 계수	88
[그림 4-12] 2000년~2015년 vs 2015년~2020년 인구동태별 합계출산율 감소 기여 (명수)	95
[그림 5-1] 연도별 주택매매가격 지수 (2021.6=100)	116
[그림 5-2] 연도별 비수도권 순유출 및 수도권과의 격차	1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 급락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8년 연속 감소하였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약 37.9% 감소하여, 5년 주기로 살펴본 결과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국가데이터처, 2025a).

그동안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지만,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혼인, 이혼,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혼인, 이혼,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율을 중점으로, 2000년~2020년 이들 요인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15년~2020년 사이 출산율 하락에 초점을 두고, 2000년~2015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혼인 및 출산 등 주요 인구동태 요인의 감소 원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내용

가. 인구동태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결과

Yip & Chen(2016)은 전이확률 모델을 활용해 2000년~2020년 동안 혼인, 이혼,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부 분석 방법으로는 출산탄력성 분석과 분해분석을 활용하였다.

출산탄력성 분석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인으로,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혼인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 첫째 자녀 출산의 양향력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둘째 자녀(1→2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더 크거나 비슷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연령대별 영향력에도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전에는 25세~29세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면, 2020년에는 30세~34세 연령대의 영향력이 25세~29세를 역전하게 된다.

분해분석 결과, 2000년~2015년 사이의 합계출산율 하락과 2015년~2020년 사이의 합계출산율 하락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00년~2015년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 전이확률 감소가 주요 원인이고, 해당 기간 유배우 출산율은 상승하여 오히려 혼인 전이확률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2020년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 전이확률 감소(약 56%)가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인 가운데, 유배우 출산율도 동시에 하락하여 합계출산율 하락(약 31%)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감소가 가장 크게 기여(약 19%)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인이며,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대비 2020년 유배우 출산율, 그중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영향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은 과거 출산율 하락 양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2015년 이전에는 혼인이 줄어도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 합계출산율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해주었다면, 2015년 이후에는 혼인 하락과 유배우 출산율(특히 첫째 자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완충 장치가 소멸하여 합계출산율이 급락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인구동태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혼인과 출산율 감소의 원인,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동태적 요인들이 급격히 하락한 배경, 그리고 향후 인구동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혼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 시장 이중구조와 좋은 일자리 부족”,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주택가격이 연속적으로 상승하여, ‘패닉바잉(panic buying)’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연속 상승은 특히 첫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이 컸는데,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주거 등 새로 생활 기반을 구축해야 하므로, 초기 준비 비용 부담이 둘째 자녀 출산보

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첫째 자녀 출산의 감소가 두드러짐에 따라 향후 자녀 출생 및 양육 지원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전문가가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다자녀 차등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는 비금전적 지원(예: 주거 지원 등)은 보편주의로 확대·전환하되, 금전적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금전적 지원은 복지 평등적 관점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돌봄 부담 누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자녀 수별 차등지원보다는 자녀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체계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급여 유형별 차등지원 및 보편화의 적정 범위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자녀 정책이 지극히 국가 중심적 정책으로, ‘평등’과 ‘행복’에 기반한 아동의 기본권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고, 정책의 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관련 법적·가치관적 논쟁들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출산 경로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혼인·이혼·자녀 수

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2000년~2020년까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출산탄력성과 분해분석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개별 인구동태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실증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동안 담론적 수준에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에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은 많았으나, 이를 실증자료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넷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에 더해 전문가 조사를 병행하였다. 지금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나 정책 수요조사는 다수 존재했지만,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지난 20년간 혼인 및 출산의 하락 요인과 2015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나.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한국에서 합계출산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혼인이다. 따라서 정부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혼인으로 이행을 지연 및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해소해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학업→일자리→혼인→출산]의 생애사건적 순차적 이행을 완화(탈표준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좋은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자녀를 충분히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아동수당,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형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독일 및 네덜란드의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제도가 좋은 사례이다. 향후 해외 심층 사례연구 등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주거 안정성은 출산의 진입인 첫째 자녀 출산과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50.3%)', '전세자금 대출지원(29.0%)',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5.7%)' 순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4). 즉, 공공주택보다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사실 혼 관계의 법적 혼인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바,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 증가를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자녀 출생 및 양육 지원 정부 정책은 다자녀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자녀 양육 경험은 둘째 자녀 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속 출산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에서부터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전문가마다 어떤 정책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보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급여 유형별 차등지

원 및 보편화의 적정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다자녀 차등 지원 정책이 아동의 기본권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법적·가치관적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요 용어: 합계출산율, 혼인, 이혼,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율, 출산탄력성, 분해분석, 전문가 조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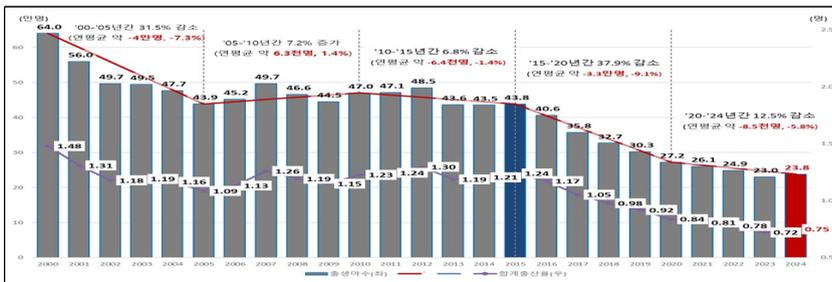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국가데이터처, 2025a).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들어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 1.48명, 2010년 1.48명, 그리고 2018년에 처음으로 1.0명 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하락하여 8년 연속 감소하였다. 2015년~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약 37.9% 감소하여, 5년 주기로 살펴본 결과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만에 소폭 반등했으나, 증가폭이 0.03명에 불과해 그 의미를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1-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연도별 추이



주: 2024년 수치는 잠정치임.

출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2월 발행예정, 총괄보고서에서 발췌, 인용함.

그동안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다룬 연구는 적지 않지만,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혼인, 이혼, 자녀 수별 출산율 등 주요 인구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혼인 및 이혼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분석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철희(2018) 연구는 유배우율(전체 여성 인구 중 유배우 여성 비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유배우율은 혼인과 이혼의 효과가 결합된 지표이므로 두 요인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정책적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 또한 해당 연구는 분석 기간이 2000년~2016년에 한정되어 있어,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출산율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녀 수별로 출산율을 분석하지 않아 어느 순위에서 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졌는지를 알 수 없다.

한편, 이철희(2023)는 여성인구, 유배우 출산율, 자녀 수별 출산율 등이 1992년~2021년 출생아 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해당 연구는 합계출산율이 아닌 인구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출생아 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분석기간을 2012년~2021년으로 분석했기에 2015년을 기점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합계출산율을 분석하는 것은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합계출산율 감소가 유배우 출산율 하락이 아니라 혼인을 감소에 더 기인한다면, 정부는 기혼 여성의 출산 장려 정책보다 혼인을 제고 정책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합계출산율 감소가 유배우 출산율 가운데서도 특정 출생순위(예: 둘째 자녀)의 출산율 하락에 특히 크게 기인한다면, 이는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정책 지원의 정책적 근거 및 기초 자료가 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인구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인, 이혼,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율을 중점으로 두고, 2000년부터 2020년¹⁾까지 이들 요인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15년~2020년 사이 출산율 하락에 초점을 두고, 과거(2000년~2015년) 출산율 하락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인구동태 요인의 변화 원인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혼인 및 출산 하락 요인, 그리고 2015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앞선 실증분석이 인구학적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전문가 조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함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1) 그동안의 인구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2) 전문가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저출생 대응 정책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1) 보고서를 작성하는 2025년 12월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는 2020년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2025년 자료는 2026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국내 출산율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출산율 변화 분석에 활용된 국내외 주요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혼인, 이혼, 출생으로 구분하여 관련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혼인율, 이혼율 등 행태적 지표뿐 아니라 인식 지표도 함께 검토하여, 변화 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제4장에서는 혼인, 이혼, 자녀 수별 출산율 등 주요 인구 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출산탄력성 그리고 분해분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다각적으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결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1) 문헌자료 검토 (2) 2차자료 분석 (3)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제2장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서는 문헌자료를 살펴보았다.

둘째, 제3장 및 제4장을 위해서는 2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는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혼인, 이혼, 출생 관련 주요 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출산탄력성과 분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인구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셋째, 제5장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체계도

장 구성	주요 내용	연구 방법
제 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배경 및 목적 소개 • 연구 내용 및 방법 소개 	
제 2장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출산율 변화 선행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출산율 변화 분석 방법 검토 	문헌 조사
제 3장 인구동태 및 출산율 추세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관련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검토 • 이혼 관련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검토 • 출생 관련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검토 	기초통계 분석 (2차 자료 분석)
제 4장 인구동태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동태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 	출산탄력성 & 분해분석 (2차 자료 분석)
제 5장 인구동태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 원인과 정책 대응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전문가 조사
제 6장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결과 요약·정리 • 학술적·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출산율 변화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출산율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출산율 변화 분석 방법 검토

제3절 소결

제 2 장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출산율 변화 선행연구 검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관점에서 한국 출산율 변화를 다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활용한 출산율 변화 분석 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장의 목적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방법론을 검토하고, 그 한계와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탐색하는 데 있다.

제1절 출산율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저출산 연구는 인구 구조(여성 인구 수, 연령별 인구 분포 등)와 인구 동태(혼인, 출산, 이혼, 사별 등)의 관점에서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이다(최슬기, 2015).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을 활용하여 유배우율(전체 여성 인구 중 유배우 여성 비율), 유배우 출산율 등 개별 요인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한 연구들이다²⁾.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삼식 외(2005), 이철희(2012, 2018), 오진호(2019)가 있다.

이삼식 외(2005)는 1995년~2004년 합계출산율 하락을 유배우율 그리고 유배우 출산율로 나누어 아래처럼 분해분석하였다. 이삼식 외

2) 이외에도 템포효과(tempo effect)와 퀀텀효과(quantum effect)를 분석한 연구(한국인구학회 2016, Yoo&Sobotka 2018, 민인식, 유예림, 2020)들이 있으나, 해당 연구들은 다양한 인구 동태 요인 및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보다는 출산 지연 효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즉 출산 시기 지연에 따른 합계출산율 왜곡 효과의 크기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2005)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다음의 식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B는 출생아 수, P는 가임 여성 수, M은 유배우 부인수, S는 미혼 여성수, a는 총 출생아 수 중 유배우 부인이 낳은 출생아 비율을 의미한다.

$$\frac{B}{P} = a \left(\frac{B}{M} * \frac{M}{P} \right) + (1-a) \left(\frac{B}{S} * \frac{S}{P} \right)$$

이삼식 외(2005)에 따르면, 1995년~1999년 합계출산율 하락(0.23명)은 유배우율 변화가 102.0%, 유배우 출산율 변화가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 기간 유배우율 감소가 합계출산율을 견인했으며, 유배우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유배우율 감소로 인한 합계출산율 감소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9년~2004년 출산율 하락(0.25명)의 경우 유배우율 감소가 50.9%,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49.1%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철희(2012, 2018)에서는 유배우율, 유배우 출산율, 무배우 출산율로 나누어 1991년~2009년(이철희, 2012), 2000년~2016년(이철희, 2018) 합계출산율 하락을 분해분석하였다. 이철희(2012, 2018)에서는 합계출산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여기서 t는 연도, a는 연도, TFR은 합계출산율, P는 여성인구, M은 유배우 여성인구, BM은 유배우 여성 출산아 수, BN은 무배우 여성 출산아 수, m은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 fm은 유배우 출산율, fn은 무배우 출산율을 의미한다.

$$TFR_t = \sum_{a=15}^{49} \left[\left(\frac{M_t^a}{P_t^a} * \frac{B_{M,t}^a}{M_t^a} \right) + \left(1 - \frac{M_t^a}{P_t^a} \right) \left(\frac{B_{N,t}^a}{P_t^a - M_t^a} \right) \right] = \sum_{a=15}^{49} \left[(m_t^a f_{m,t}^a) + (1 - m_t^a) f_{n,t}^a \right]$$

이철희(2012, 2018)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하락에 유배우율 하락의

기여는 큰 반면, 유배우 출산율 하락의 기여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배우 출산율의 경우 가장 기여도가 컸던 기간(2012년~2016년)은 약 6%로, 상대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호(2019)는 이철희(2012)의 방법에 근거하여 1981년~2025년까지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오진호(2019) 연구에서는 2017년까지는 실제 관측된 합계출산율 자료를,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추계(예측) 합계출산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요인이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체 기간을 1981년~2005년, 2006년~2015년, 2016년~2025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 합계출산율이 감소-증가-감소하는 3단계 변화를 살펴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합계출산율이 일정 기간(3년 이상) 연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구간을 기준으로 1981년~1987년, 1988년~1992년, 1995년~1999년, 2010년~2012년, 2016년~2025년으로 구분하여 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2016년~2025년 감소 구간에서는 유배우율의 하락이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 역시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배우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여 하락폭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오진호(2019)는 이러한 결과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 판단이 어렵다.

이외에도 이철희(2023)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1992년~2005년, 2005년~2012년, 2012년~2021년) 기간을 구분하여 출생아 수 변화를 가임기 여성 인구 수, 유배우율, 유배우 출산율, 무배우 출산율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임기 여성 인구 수의 감소와 유배우 출산율

의 하락이 최근 시기로 올수록 출생아 수 감소에 미치는 기여도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생아 수는 전체 인구 규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출산율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23명에서 1.24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출생아 수는 47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감소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국가데이터처, 2025a).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주로 유배우율 감소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유배우 출산율 감소의 영향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배우 출산율의 기여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예컨대, 이삼식 외(2005)는 1999년~2004년 합계출산율 하락분 중 유배우율 감소가 50.9%,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49.1%를 차지하여 두 요인의 기여도가 거의 유사하다고 분석한 반면, 비슷한 시기인 2000년~2005년을 분석한 이철희(2018)는 각각 77.0%, 11.6%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또한, 오진호(2019)의 연구에서도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2016년~2025년 유배우 출산율의 기여도가 양(+) 또는 음(-)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출산율 감소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분석 기준연도나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불과 1년 차이만으로도 기여도의 방향과 크기가 변동되는 등 일관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제2절 출산율 변화 분석 방법 검토

다음은 출산율 변화(특히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국내외 분석 방법을 살펴본 결과,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을 활용한 연구가 주류

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활용한 출산탄력성(fertility elasticity) 분석 등 새로운 접근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은 합계출산율(TFR) 등 출산지표의 변화분을 미리 정의한 요인(예: 연령구조 변화, 출산 시기 지연, 행태 변화 등)별로 정량적으로 분리하고, 각 요인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인구분석 방법이다(민인식, 유예림, 2020). 이 방법은 Kitagawa(1955)가 처음 제시하였고, Das Gupta(1993)가 이를 인구요인 분석에 체계적으로 적용·확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응용되어 인구 및 사회통계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앞서 제1절에서 소개한 국내 선행연구들이 이 방법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해분석의 기본 원리는 특정 요인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 합계출산율(가정치)을 산출한 뒤, 이를 실제 합계출산율과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이 출산율 변화에 미친 기여 정도를 추정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이철희(2018)는 합계출산율을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 무배우율과 무배우 출산율로 분해했는데, 만약 2010년 유배우율이 50%였다고 가정할 때, 2015년에 실제로는 30%로 감소했지만 50% 수준이 유지되었을 시 가상 합계출산율을 계산하고, 이를 실제 합계출산율과 비교하여 유배우율 변화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2015년 유배우율 유지 시 가상 합계출산율이 1.4명, 실제 합계출산율이 1.2명이라면, 유배우율 감소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0.2명(1.4명-1.2명)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해분석은 변화 요인으로 인한 변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해석이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1절에서 언급했듯이, 기준연도의 설정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고, 요인 간 상호작용(교호효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이철희, 2023).

둘째,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활용한 출산탄력성(fertility elasticity) 분석은 개인 또는 집단이 미혼-기혼-자녀 수별 상태로 전이하는 확률을 기반으로, 다단계 전이행렬(multistate transition matrix) 모형을 구성하여 출산행태의 동태적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혼-기혼-자녀 수별 상태 변화를 전이확률과 행렬 계산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연구로는 Caswell(2001), Schoen(2006), Yip & Chen(2016), Chen 외(2018a, 2018b), Choi 외(2023)³⁾ 등이 있다. 전이확률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또는 집단의 상태 변화(예: 미혼, 기혼, 자녀 수별 상태)를 확률적 이동(transition) 과정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출산행태의 동태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Caswell, 2001). 앞서 국내 연구들(이삼식 외, 2005; 이철희, 2012, 2018; 오진호, 2019)은 정태적 관점에서 특정 시점의 유배우율, 유배우 출산율, 무배우 출산율 등을 분석하여, 혼인·이혼·재혼(무배우↔유배우) 및 자녀 수 변화(0자녀→1자녀→2자녀 등)를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전이확률 모형은 출산 경로를 보다 현실적으로 모사하는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한편, Yip & Chen(2016)과 Chen 외(2018a, 2018b)는 각각 대만, 싱가포르, 호주를 대상으로 혼인-이혼-자녀 수별 출산 전이확률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추정하고, 출산탄력성(fertility elasticity) 개념을 도입하여 각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탄력성이란 개별 인구동태 요인이 1% 변화할 때 합계출산율(TFR)이 몇 %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혼인율이 1%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몇 % 변화하는지를 분석함으

3) 앞의 연구들은 외국 사례인 반면, Choi 외(2023)는 전이확률 방식을 통해 한국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연구이다.

로써 각 요인의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Yip & Chen(2016)과 Chen 외(2018a, 2018b)는 이러한 출산탄력성 계수를 추정하여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policy target priorities)를 도출하였다. 출산탄력성은 회귀분석의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와 유사한 개념으로, 분해분석과 달리 기준연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Yip & Chen(2016)과 Chen 외(2018a, 2018b)의 출산탄력성의 산출 방식과 수리적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출산율 변화 분석에 활용된 국내외 주요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본 장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결과 및 동향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탐색하는 데 있다.

먼저, 국내 선행연구 검토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주로 유배우율의 하락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배우 출산율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오히려 상승하여 출산율 하락을 부분적으로 상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유배우 출산율의 영향력은 비록 1년 차이여도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히, 기존 연구 중 어느 것도 2015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을 인구학적 요인 측면에서 분석하지 않아, 2015년 전후의 변화 양상을 비교·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분해분석을 사용하여 합계출산율 변화

를 규명하였는데, 분해분석의 특성상 기준연도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 연구들 모두 유배우율을 분석했는데, 제1장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배우율은 혼인율과 이혼율의 복합지표로, 두 요인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더 유용하다. 또한, 기존 연구 중 이철희(2023)를 제외하면 자녀 수별 출산율을 분석한 연구가 없었는데, 이철희(2023)는 합계출산율이 아닌 출생아 수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데 점에서 지표로서 한계를 가진다.

넷째, 국내 연구들 모두 동태적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을 분석하지 못했다. 국외 연구를 검토한 결과, 최근에는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활용한 출산탄력성(fertility elasticity) 분석 등 새로운 접근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이확률 분석을 사용하여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고, 전통적인 분해분석과 더불어 출산탄력성 분석을 활용하여 혼인, 이혼,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하락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4장을 참조하길 바란다.



제3장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추세변화

제1절 혼인 동태의 변화

제2절 이혼 동태의 변화

제3절 출생 및 출산 동태의 변화

제 3 장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추세변화

제3장에서는 혼인·이혼·자녀 출생으로 구분하여 관련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장의 목적은 제4장 실증분석에 앞서, 한국의 주요 인구동태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본 장에서는 혼인율, 이혼율 등과 같은 행태적 지표뿐 아니라, 인식 지표까지 함께 검토함으로써, 혼인·이혼·출생의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장에서는 2000년 이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시계열적 추이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1절 혼인 동태의 변화

1. 혼인 건수 및 혼인율

먼저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 약 33만 2천 건에서 2005년 약 31만 4천 건, 2010년 32만 6천 건, 2015년 약 30만 3천 건, 2020년 21만 4천 건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15년~2020년 사이 감소폭이 89,326건으로 매우 컸다. 2023년에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으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2024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을 살펴보면, 2000년 인구 1천명당 7.0건, 2005년 6.5건, 2010년 6.5건, 2015년 5.9건, 2020년 4.2건으로 하락 추세이고,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하락 폭(1.7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조혼인율도 202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2024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성·여성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의 경우, 2000년에 남성은 17.85건, 여성은 17.51건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0년에는 남녀 모두 1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2년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나, 2023년부터 남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어 각각 8.60건, 8.47건이었고, 2024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종합해보면, 혼인 건수 그리고 (조·일반)혼인율 모두 하락세이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에는 혼인 건수 및 혼인율 증가세로 전환되어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혼인 건수 및 혼인율

(단위: 건, 해당인구 1천 명당 건수)

연도(년)	혼인 건수	조혼인율 ¹⁾	일반혼인율 ²⁾	
			남성	여성
2000	332,090	7.0	17.85	17.51
2001	318,407	6.7	16.94	16.62
2002	304,877	6.3	16.07	15.77
2003	302,503	6.3	15.82	15.52
2004	308,598	6.4	16.00	15.70
2005	314,304	6.5	16.13	15.84
2006	330,634	6.8	16.77	16.49
2007	343,559	7.0	17.21	16.94
2008	327,715	6.6	16.20	15.96
2009	309,759	6.2	15.11	14.91
2010	326,104	6.5	15.72	15.53
2011	329,087	6.6	15.69	15.50
2012	327,073	6.5	15.44	15.25
2013	322,807	6.4	15.09	14.91
2014	305,507	6.0	14.16	13.98
2015	302,828	5.9	13.91	13.74

연도(년)	혼인 건수	조혼인율 ¹⁾	일반혼인율 ²⁾	
			남성	여성
2016	281,635	5.5	12.84	12.68
2017	264,455	5.2	11.99	11.84
2018	257,622	5.0	11.63	11.48
2019	239,159	4.7	10.75	10.61
2020	213,502	4.2	9.56	9.43
2021	192,507	3.8	8.59	8.47
2022	191,690	3.7	8.53	8.41
2023	193,657	3.8	8.60	8.47
2024 ³⁾	222,412	4.4	9.86	9.70

주: 1)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

2) 15세 이상 남성/여성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

3) 2024년 수치는 잠정치임

출처: “인구동향조사(혼인건수, 조혼인율)[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3에서 2025.6.26. 인출함;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c,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에서 2025.6.2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연령별로 나누어 (일반)혼인율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연령대 혼인율 순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모두 25세~29세 각각 70.7건, 74.9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 2010년부터 30세~34세가 58.5건으로 25세~29세 혼인율(49.6건)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여성의 경우 2021년부터 30세~34세 혼인율(40.8건)이 25세~29세 혼인율(38.2건)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혼인 연령 상승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표 3-2〉 연령별·성별 일반 혼인율

(단위: 해당인구 1천 명당 건수)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성	여성																
15세~19세	1.0	4.4	0.6	3.9	0.4	3.5	0.5	2.2	0.2	1.2	0.2	0.7	0.2	0.9	0.2	1.2	0.2	1.3
20세~24세	12.3	44.8	7.5	26.2	5.9	21.5	5.2	15.5	2.9	8.0	2.6	6.6	2.6	7.0	2.5	7.0	2.6	7.4
25세~29세	70.7	74.9	54.5	76.9	49.6	79.1	41.2	72.9	25.2	44.9	22.0	38.2	20.4	35.7	19.2	34.2	22.8	40.3
30세~34세	39.0	17.4	46.0	26.3	58.5	42.0	62.4	51.8	47.6	44.0	42.1	40.8	40.3	41.3	40.1	42.7	48.3	51.9
35세~39세	11.2	7.8	15.7	10.2	21.7	12.2	25.1	15.7	20.5	14.3	19.5	13.8	20.9	15.0	22.5	16.3	26.7	19.2
40세~44세	6.1	5.0	9.0	7.4	9.6	6.4	9.9	6.5	8.2	5.5	7.5	5.4	8.1	5.6	8.7	5.9	9.4	6.2
45세~49세	4.5	3.4	7.0	5.4	6.2	5.0	5.4	4.5	4.4	3.5	4.0	3.4	4.4	3.4	4.7	3.4	4.7	3.4
50세~54세	3.5	2.0	5.7	3.6	4.6	3.3	4.0	3.5	3.2	2.9	3.0	2.8	3.2	2.7	3.3	2.8	3.2	2.6
55세~59세	2.5	1.0	4.1	1.7	3.5	1.9	3.1	2.3	2.5	2.0	2.4	2.0	2.5	2.0	2.6	2.0	2.6	2.0
60세~64세	1.5	0.5	2.3	0.6	2.5	1.0	2.2	1.3	1.8	1.2	1.8	1.2	1.8	1.2	1.9	1.3	1.9	1.3
65세~69세	1.0	0.2	1.3	0.4	1.4	0.5	1.4	0.6	1.1	0.7	1.1	0.7	1.1	0.7	1.2	0.7	1.2	0.8
70세~74세	0.8	0.1	0.9	0.2	0.9	0.2	1.0	0.3	0.9	0.4	0.9	0.5	0.8	0.5	0.9	0.5	0.9	0.6
75세 이상	0.5	0.0	0.6	0.0	0.6	0.1	0.5	0.1	0.6	0.2	0.6	0.2	0.6	0.2	0.7	0.2	0.7	0.2

주: 2000년~2020년은 5년 간격, 2020년 이후는 1년 간격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성/연령별 혼인율)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에서 2025.6.26. 인출함.

2. 혼인 종류별 혼인 비중

혼인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여성 초혼-남성 초혼’ 비중은 81.9%, ‘여성 재혼-남성 재혼’은 9.6%, ‘여성 재혼-남성 초혼’은 4.9%, ‘남성 재혼-여성 초혼’은 3.4% 순이었다. 이후 순위 변동은 없으나, ‘여성 초혼-남성 초혼’ 비중은 감소하여 2023년 77.3%까지 하락한 반면, 재혼 비중들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4년에 ‘여성 초혼-남성 초혼 비중’은 80.4%로 다시 높아져, 200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3〉 혼인 종류별 혼인 비중

(단위: %)

			남편의 혼인종류			
			총계	초혼	재혼	미상
아내의 혼인 종류	2000년	총계	100.0	86.8	13.1	0.2
		초혼	85.3	81.9	3.4	0.0
		재혼	14.5	4.9	9.6	0.0
		미상	0.2	0.0	0.0	0.1
	2005년	총계	100.0	80.3	19.0	0.7
		초혼	78.0	73.8	4.2	0.0
		재혼	21.2	6.4	14.7	0.1
		미상	0.8	0.1	0.1	0.6
	2010년	총계	100.0	83.7	16.3	0.0
		초혼	82.3	78.1	4.3	0.0
		재혼	17.6	5.6	12.0	0.0
		미상	0.0	0.0	0.0	0.0
	2015년	총계	100.0	84.7	15.3	0.0
		초혼	82.5	78.7	3.9	0.0
		재혼	17.4	6.0	11.5	0.0
		미상	0.0	0.0	0.0	0.0

34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남편의 혼인종류			
			총계	초혼	재혼	미상
2020년	총계		100.0	84.3	15.6	0.1
	초혼		82.0	78.2	3.7	0.1
	재혼		17.8	6.0	11.8	0.0
	미상		0.2	0.1	0.1	0.0
2021년	총계		100.0	83.7	16.1	0.1
	초혼		81.3	77.5	3.7	0.1
	재혼		18.5	6.1	12.4	0.0
	미상		0.2	0.1	0.1	0.0
2022년	총계		100.0	83.5	16.3	0.2
	초혼		81.4	77.4	3.9	0.1
	재혼		18.3	5.9	12.3	0.1
	미상		0.4	0.2	0.1	0.0
2023년	총계		100.0	83.5	16.3	0.2
	초혼		81.3	77.3	3.9	0.1
	재혼		18.2	5.9	12.2	0.1
	미상		0.5	0.3	0.2	0.0
2024년	총계		100.0	85.7	14.1	0.2
	초혼		84.1	80.4	3.6	0.1
	재혼		15.4	5.0	10.4	0.1
	미상		0.5	0.3	0.2	0.0

주: 2000년~2020년은 5년 간격, 2020년 이후는 1년 간격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부부의 혼인종류별 혼인)[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1에서 2025.7.2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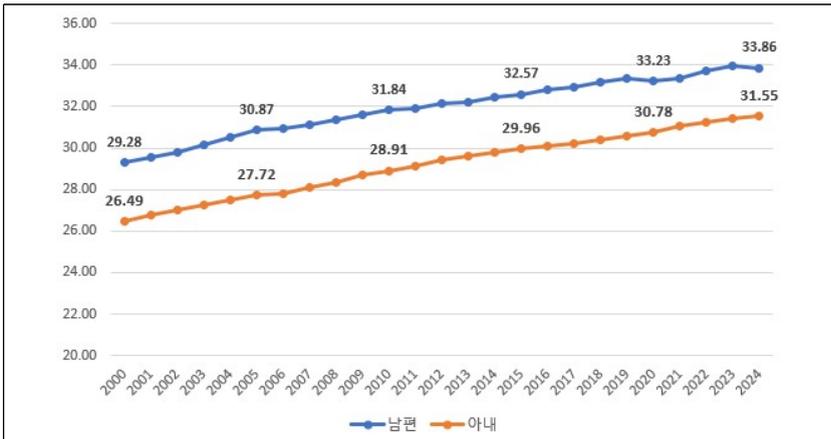
3. 초혼 연령

평균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29.28세, 여성은 평균 26.49세였다. 2020년은 각각 33.23세, 30.78세까지, 2024년에는 각각 33.86세, 31.55세로 계속 증가 추세이다. 다만, 그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 2000년~200

5년 남녀 초혼 연령 차이는 각각 1.59세, 3.03세였으나, 2015년~2020년에는 각각 0.66세, 0.82세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림 3-1] 평균 초혼 연령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별 평균초혼연령)[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f,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에서 2025.11.0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4. 혼인 관련 인식

가. 결혼에 대한 인식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2008년 기준 결혼을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68.0%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48.1%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51.2%로 증가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 50.1%로 감소하고 2024년 52.5%로 증가했다.

다만, 주목할 점은 2014년과 2016년은 전 조사 연도 대비 각각 5.9%p,

5.0%p 크게 떨어졌고, 특히 남성 응답자에서의 결혼 긍정 인식 비율 감소(각각 7.5%p, 5.2%p)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여성 4.3%p, 4.7%p).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결혼 긍정 비율이 남성보다 항상 낮은 반면, 부정 비율은 더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선호도가 확연히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해야 한다 ¹⁾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²⁾			잘 모르겠다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8	68.0	74.6	61.6	27.7	21.9	33.3	2.9	2.2	3.6	1.4	1.3	1.5
2010	64.7	70.5	59.1	30.7	25.7	35.6	3.3	2.6	4.0	1.3	1.2	1.3
2012	62.7	69.0	56.6	33.6	27.7	39.4	1.8	1.3	2.2	1.9	2.0	1.8
2014	56.8	61.5	52.3	38.9	34.4	43.2	2.0	1.7	2.4	2.2	2.4	2.0
2016	51.8	56.3	47.6	42.9	38.9	46.7	3.1	2.5	3.8	2.2	2.3	2.0
2018	48.1	52.8	43.5	46.6	42.3	50.8	3.0	2.3	3.8	2.3	2.7	1.9
2020	51.2	58.2	44.3	41.4	35.4	47.3	4.4	3.0	5.6	3.0	3.3	2.8
2022	50.1	55.8	44.4	43.2	37.7	48.7	3.6	2.8	4.4	3.2	3.8	2.6
2024	52.5	58.3	46.8	41.5	36.0	46.8	3.3	2.5	4.1	2.7	3.1	2.3

주: 1) “해야 한다”는 ‘하는 것이 좋다’와 ‘해야 한다’를 합한 수치

2)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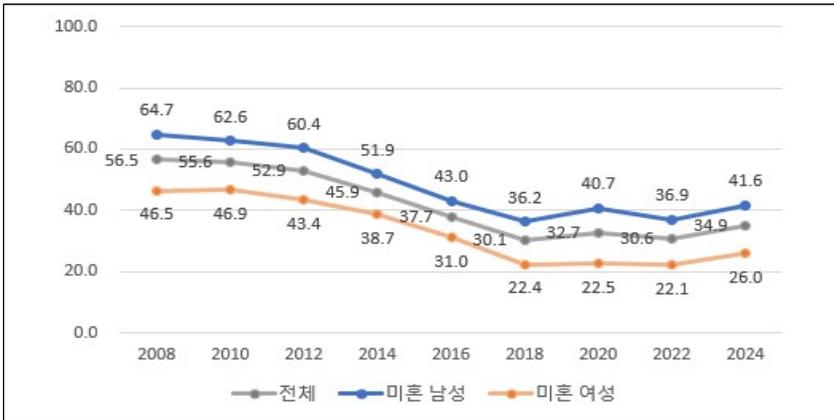
3) 2년 주기로 조사 결과 제공함.

출처: “사회조사(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4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60R에서 2025.7.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추가로, 혼인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만을 별도로 살펴본 결과, 2008년에는 56.5%가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 30.1%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소폭 등락을 거쳐 2024년 34.9%를 기록하였다.

주목할 점은 [그림 3-2]를 보면, 2008년~2012년까지는 결혼에 대한 긍정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하락세(기울기)가 가팔라지는데, 여성 미혼자의 하락세가 남성 미혼자보다 더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8년까지 남성은 40.1%, 여성은 48.3% 하락하였다.

[그림 3-2] 미혼 남녀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



주: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

출처: “사회조사(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4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60R에서 2025.7.1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나. 재혼에 대한 인식

다음은 재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재혼에 대해 중립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감소했다.

2008년 기준 재혼을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한다’ +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2.7%,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55.0%, “하지 말아야 한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하지 말아야 한다’)는 15.3%,

“잘 모르겠다”는 6.9%였다.

2024년 “해야 한다”는 비중은 8.4%까지 감소하여, 2008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67.0%로, 크게 증가(12.0%p)하였다. 한편,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 응답은 16.1%로, 0.8%p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주목할 점은, 재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2008년~2024년 사이 약 3분의 1 수준(약 67%)으로 감소하여, 남성보다 감소율(약 60%)이 더 컸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의 확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5〉 재혼에 대한 인식

(단위: %)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8	22.7	26.8	18.9	55.0	53.8	56.1	15.3	11.9	18.6	6.9	7.5	6.4
2010	21.3	25.2	17.3	58.0	56.5	59.4	14.1	10.9	17.1	6.8	7.3	6.3
2012	19.4	23.6	15.2	61.1	59.5	62.6	13.2	10.3	16.0	6.4	6.6	6.2
2014	16.5	19.9	13.3	60.0	59.1	60.9	15.5	12.4	18.5	8.0	8.7	7.3
2016	14.2	17.2	11.2	62.3	61.7	62.8	16.4	13.2	19.4	7.2	7.9	6.5
2018	12.4	15.7	9.2	64.6	64.1	65.1	14.9	11.4	18.3	8.1	8.8	7.4
2020	8.4	10.9	5.9	64.9	65.6	64.2	17.2	13.1	21.4	9.4	10.4	8.5
2022	8.1	10.1	6.1	67.5	68.0	66.9	14.9	11.5	18.1	9.6	10.4	8.8
2024	8.4	10.6	6.1	67.0	67.6	66.4	16.1	12.6	19.5	8.6	9.2	7.9

주: 1)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

2)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

3) 2년 주기로 조사 결과 제공함.

출처: “사회조사(재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4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80R에서 2025.7.28.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제2절 이혼 동태의 변화

1. 이혼 건수 및 이혼율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00년 약 11만 9천 건에서 2005년 약 12만 8천 건, 2010년 11만 7천 건, 2015년 약 10만 9천 건, 2020년 10만 6천 건으로 감소 추세이다. 2024년에는 약 9만 1천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을 보면, 2000년 2.5건에서 2005년 2.6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10년 2.3건, 2015년 2.1건, 2020년 2.1건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2024년 기준 1.8건으로, 2022년부터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이혼율(15세 이상 남성·여성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의 경우, 2000년 남성 6.42건, 여성 6.30건에서 2005년 각각 6.57건, 6.45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남성 4.04건, 여성 3.98건으로 집계되었다.

종합해보면, 이혼 건수 및 이혼율 모두 200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3-6〉 이혼 건수 및 이혼율

(단위: 건, 해당인구 1천명당 건수)

연도(년)	이혼 건수	조이혼율 ¹⁾	일반이혼율 ²⁾	
			남성	여성
2000	119,455	2.5	6.42	6.30
2001	134,608	2.8	7.16	7.03
2002	144,910	3.0	7.64	7.50
2003	166,617	3.4	8.71	8.55
2004	138,932	2.9	7.20	7.07

40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연도(년)	이혼 건수	조이혼율 ¹⁾	일반이혼율 ²⁾	
			남성	여성
2005	128,035	2.6	6.57	6.45
2006	124,524	2.5	6.32	6.21
2007	124,072	2.5	6.21	6.12
2008	116,535	2.4	5.76	5.68
2009	123,999	2.5	6.05	5.97
2010	116,858	2.3	5.63	5.56
2011	114,284	2.3	5.45	5.38
2012	114,316	2.3	5.40	5.33
2013	115,292	2.3	5.39	5.32
2014	115,510	2.3	5.35	5.29
2015	109,153	2.1	5.02	4.95
2016	107,328	2.1	4.89	4.83
2017	106,032	2.1	4.81	4.75
2018	108,684	2.1	4.91	4.84
2019	110,831	2.2	4.98	4.91
2020	106,500	2.1	4.77	4.70
2021	101,673	2.0	4.54	4.47
2022	93,232	1.8	4.15	4.09
2023	92,394	1.8	4.11	4.04
2024 ³⁾	91,151	1.8	4.04	3.98

주: 1)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

2) 15세 이상 남성/여성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

3) 2024년 수치는 잠정치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이혼건수, 조이혼율)[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g,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4에서 2025.7.28. 인출함;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c,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에서 2025.6.2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연령별로 남녀 (일반)이혼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0대(초반 그리고 후반 모두), 여성은 30대 후반~40대 초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 이후 큰 변화는 없다.

남성의 경우 2000년 35세~39세 12.2건이 가장 높았고, 이어 40세~

44세(12.1건)으로 높았다. 2005년부터는 순위가 역전되어 40세~44세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고, 2015년부터 45세~49세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2000년 35세~39세 이혼율이 12.6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세~34세(12.2건)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5년부터 40세~44세 이혼율이 계속 높게 나타났다.

〈표 3-7〉 연령별·성별 일반 이혼율

(단위: 해당인구 1천명 당 건수)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5세~19세	0.0	0.2	0.0	0.3	0.0	0.3	0.0	0.1	0.0	0.1	0.0	0.1	0.0	0.0	0.0	0.1	0.0	0.1
20세~24세	0.9	3.3	0.8	2.7	0.5	2.5	0.6	1.9	0.4	1.4	0.4	1.2	0.4	1.1	0.3	0.9	0.3	0.9
25세~29세	5.0	9.6	3.9	8.3	2.5	5.7	2.0	4.9	1.8	3.8	1.6	3.4	1.6	3.2	1.4	3.0	1.3	2.6
30세~34세	10.0	12.2	9.3	12.5	6.3	9.3	5.1	7.7	4.3	6.9	3.9	6.5	3.6	6.0	3.6	6.0	3.3	5.6
35세~39세	12.2	12.6	12.0	12.7	8.9	10.6	7.4	8.9	6.7	8.2	6.2	7.6	5.9	7.5	5.9	7.7	5.6	7.5
40세~44세	12.1	10.4	12.2	11.1	10.4	10.4	8.7	9.6	7.8	8.6	7.1	7.8	6.9	7.6	7.1	7.9	7.1	8.0
45세~49세	10.0	6.6	10.2	8.0	10.0	8.6	9.2	8.7	8.0	8.3	7.4	7.7	6.8	7.1	7.2	7.2	7.2	7.3
50세~54세	6.9	3.7	7.7	4.9	8.0	6.0	8.0	6.3	7.7	6.8	7.1	6.7	6.5	6.0	6.6	5.9	6.6	5.9
55세~59세	4.1	1.9	5.4	2.9	6.0	3.6	6.0	4.2	6.3	5.1	6.2	5.1	5.4	4.4	5.2	4.4	5.3	4.3
60세~64세	2.4	0.8	3.5	1.6	4.4	2.1	4.3	2.6	5.1	3.9	5.2	4.1	4.5	3.6	4.3	3.3	4.2	3.3
65세~69세	1.4	0.4	2.2	0.7	2.9	1.1	3.1	1.6	4.2	2.4	4.5	2.7	3.7	2.4	3.4	2.2	3.4	2.4
70세~74세	1.0	0.1	1.3	0.3	1.9	0.5	2.2	0.7	2.9	1.3	3.0	1.4	2.7	1.2	2.5	1.2	2.6	1.3
75세 이상	0.7	0.0	0.8	0.1	1.0	0.1	1.0	0.2	1.4	0.3	1.5	0.3	1.3	0.3	1.2	0.3	1.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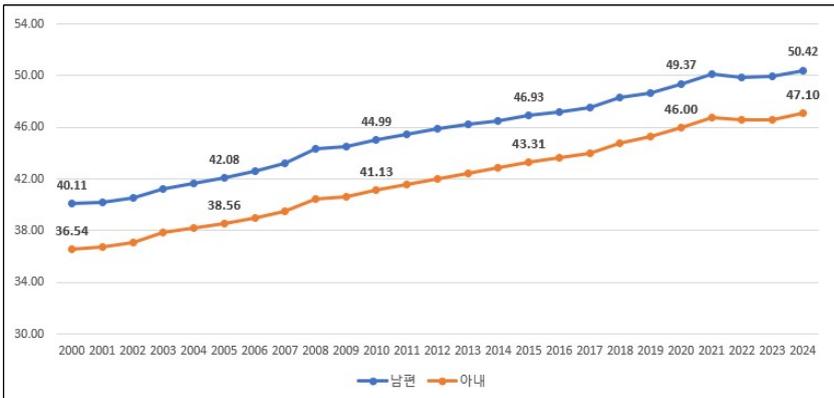
주: 2000년~2020년은 5년 간격, 2020년 이후는 1년 간격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성/연령별 이혼율)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h,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9에서 2025.8.20. 인출함.

2. 평균 이혼 연령

평균 이혼 연령을 살펴보면 2000년에 남성은 40.11세, 여성은 36.54세였다. 이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에 남성 44.99세, 여성 41.13세, 2020년에 남성 49.37세, 여성 46.00세로 나타났고, 2024년에 남성 50.42세, 여성은 47.10세를 기록하였다.

[그림 3-3] 평균 이혼 연령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평균 이혼 연령)[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i,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11에서 2025.11.01.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4.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현황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0~4년이 2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9년(22.3%), 10~14년(18.7%), 15~19년(15.4%), 20년 이상(14.2%) 순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는 혼인 기간 20년 이상 황혼 이혼이 단기(0~4년) 이혼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2024년 혼인

44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기간 20년 이상이 36.2%로 가장 많고, 이어 5~9년(18.0%), 0~4년(16.7%), 10~14년(15.8%), 15~19년(13.3%) 순이다.

〈표 3-8〉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단위: 건, %)

	계(건)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2000	119,370	29.4	22.3	18.7	15.4	14.2
2005	128,035	25.9	22.3	18.4	14.8	18.6
2010	116,858	27.0	18.8	15.9	14.5	23.8
2015	109,153	22.6	19.1	13.6	14.8	29.9
2020	106,500	19.8	17.3	14.5	11.1	37.2
2021	101,673	18.8	17.1	14.3	11.1	38.7
2022	93,232	18.6	18.0	14.8	12.0	36.7
2023	92,394	18.0	18.1	15.6	12.7	35.6
2024	91,151	16.7	18.0	15.8	13.3	36.2

주: 2000년~2020년은 5년 간격, 2020년 이후는 1년 간격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별 이혼)[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j,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6에서 2025.7.28. 인출함.

5.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현황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현황을 보면, 무자녀 이혼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 무자녀 이혼 비중은 28.0%였으나, 2010년 45.9%, 2020년 55.1%, 2024년 55.7%로 증가하였다.

〈표 3-9〉 미성년 자녀 수별 이혼

(단위: 건, %)

	계(건)	무자녀	유자녀	미상
2000	119,455	28.0	70.5	1.5
2005	128,035	35.5	63.4	1.1

	계(건)	무자녀	유자녀	미상
2010	116,858	45.9	53.8	0.2
2015	109,153	50.9	48.5	0.7
2020	106,500	55.1	42.3	2.6
2021	101,673	56.9	40.5	2.6
2022	93,232	54.9	41.7	3.4
2023	92,394	53.2	42.9	3.9
2024	91,151	55.7	42.8	1.5

주: 2000년~2020년은 5년 간격, 2020년 이후는 1년 간격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미성년자녀 수별 이혼)[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k,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7에서 2025.7.28. 인출함.

6. 이혼에 대한 인식

다음은 이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어떤 이유라도 해서는 안 된다’ +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31.9%,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7.1%, “잘 모르겠다”는 2.4%였다.

이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4년 26.6%로 약 절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49.2%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4년에는 소폭 하락해 48.2%로 나타났다. 또한,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계속 증가해 2024년 20.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표 3-10〉 이혼에 대한 인식

(단위: %)

	해서는 안 된다 ¹⁾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8	58.6	63.8	53.7	31.9	27.8	35.8	7.1	5.7	8.3	2.4	2.6	2.2
2010	56.6	61.1	52.2	33.4	29.6	37.1	7.7	6.5	8.8	2.4	2.8	2.0
2012	48.7	54.1	43.3	37.8	33.6	41.8	10.9	9.3	12.5	2.7	3.0	2.4
2014	44.4	49.1	39.8	39.9	36.1	43.6	12.0	10.3	13.5	3.7	4.5	3.0
2016	39.5	45.0	34.2	43.1	39.5	46.6	14.0	11.5	16.4	3.4	4.1	2.8
2018	33.2	37.9	28.6	46.3	43.3	49.3	16.7	14.5	18.8	3.8	4.3	3.2
2020	30.3	34.8	25.8	48.4	45.4	51.2	16.8	14.3	19.2	4.6	5.4	3.8
2022	27.1	31.0	23.4	49.2	47.2	51.1	18.7	16.1	21.3	5.0	5.8	4.2
2024	26.6	30.3	23.1	48.2	46.7	49.7	20.5	17.9	23.1	4.6	5.2	4.1

주: 1)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

2) 2년 주기로 조사 결과 제공함.

출처: “사회조사(이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4c,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에서 2025.8.20. 인출함.

제3절 출생 및 출산 동태의 변화

1. 출생 건수 및 출산율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00년 약 64만 명에서 2005년 약 43만 9천 명, 2010년 약 47만 명, 2015년 약 43만 8천 명, 2020년 약 27만 2천 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에는 약 23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23만 8천 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살펴보면, 2000년 인구 1천명당 13.5건, 2005년 9.0건으로 감소 후 2010년 9.4건으로 약간 증가한 뒤

2015년 8.6건, 2020년 5.3건으로 다시 하락 추세이다. 그러나 2023년에 4.5건, 2024년에 4.7건으로 전년 대비 0.2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출산율(15세~49세 가임기 여성 1천 명당 출생아 수)의 경우, 2000년에 46.67건으로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긴 하였지만 2015년에 34.26건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 2023년에는 20.54건을 기록하였으나 2024년에는 21.68건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2000년에 1.480명, 2005년에 1.085명, 2010년에 1.226명, 2015년에 1.239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그동안은 소폭 등락을 반복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8년 연속 감소 추세를 지속하였다. 2024년은 8년 만에 증가로 전환, 0.750명으로 전년 대비 0.029명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출생 건수 및 3대 출산율 지표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15년 이후부터는 8년 연속 감소하였다. 2024년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 건수 및 출산율 모두 소폭이나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표 3-11〉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합계출산율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명, 여성 1천 명당, 여성인구 1명당 명)

연도(년)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일반 출산율	합계출산율
2000	640,089	13.5	46.67	1.480
2001	559,934	11.7	40.65	1.309
2002	496,911	10.3	36.05	1.178
2003	495,036	10.2	35.98	1.191
2004	476,958	9.8	34.74	1.164
2005	438,707	9.0	32.09	1.085
2006	451,759	9.2	33.18	1.132
2007	496,822	10.1	36.59	1.259
2008	465,892	9.4	34.43	1.192
2009	444,849	9.0	33.05	1.149
2010	470,171	9.4	35.23	1.226

48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연도(년)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일반 출산율	합계출산율
2011	471,265	9.4	35.66	1.244
2012	484,550	9.6	37.00	1.297
2013	436,455	8.6	33.57	1.187
2014	435,435	8.6	33.73	1.205
2015	438,420	8.6	34.26	1.239
2016	406,243	7.9	32.04	1.172
2017	357,771	7.0	28.58	1.052
2018	326,822	6.4	26.55	0.977
2019	302,676	5.9	25.04	0.918
2020	272,337	5.3	22.97	0.837
2021	260,562	5.1	22.42	0.808
2022	249,186	4.9	21.85	0.778
2023	230,028	4.5	20.54	0.721
2024	238,300	4.7	21.68	0.750

주: 1)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2) 가임기 여성(15세~49세)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3) 2024년 수치는 잠정치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에서 2025.11.02. 인출: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4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에서 2025.8.20. 인출: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2023~)) [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_1에서 2025.8.20. 인출하여 저자 작성함.

2.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모(母)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체 출산 수준이 내려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연령대별 출산율 순위에는 변화가 관찰된다.

2000년(150.3명) 및 2005년(92.1명)까지는 25세~29세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30세~34세 출산율(112.4명)이 가장 높아지고, 35세~39세 출산율(32.6명)이 크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는 35세~39세

출산율이 25세~29세 출산율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는 출산 연령 상승 현상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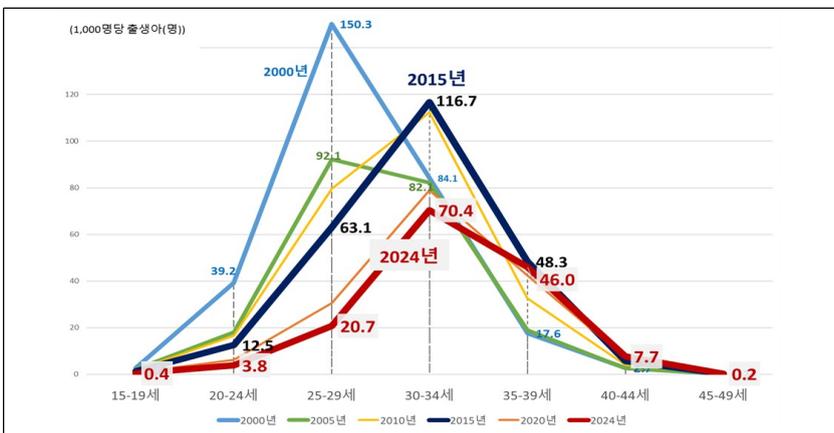
〈표 3-12〉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여성 인구 천명당 명)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0	2.6	39.2	150.3	84.1	17.6	2.7	0.2
2005	2.2	18.0	92.1	82.1	19.0	2.5	0.2
2010	1.8	16.5	79.7	112.4	32.6	4.1	0.2
2015	1.4	12.5	63.1	116.7	48.3	5.6	0.2
2020	0.7	6.2	30.6	78.9	42.3	7.1	0.2
2021	0.4	5.0	27.5	76.1	43.5	7.6	0.2
2022	0.4	4.1	24.0	73.5	44.1	8.0	0.2
2023	0.3	3.8	21.4	66.7	43.0	7.9	0.2

주: 2000년~2020년은 5년 간격, 2020년 이후는 1년 간격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에서 2025.7.30. 인출함.

〔그림 3-4〕 모(母)의 연령대별 출산율 추이



출처: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2월 발행예정, 총괄보고서에서 발췌, 인용함.

3. 유배우 출산율

주 출산 연령(25세~44세) 유배우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0년~2015년 사이 유배우 출산율은 상승하였고, 2015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5년 대비 2020년 유배우 출산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으나, 특히, 25세~29세(39.5% 하락) 그리고 30세~34세(23.0% 하락)에서의 출산율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표 3-13〉 연령대별 유배우 출산율

(단위: 해당 연령 유배우여성 인구 천명당 명)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00	271.7	103.8	19.5	2.9
2005	238.4	110.4	22.3	2.8
2010	277.8	168.9	41.2	4.8
2015	293.4	201.6	64.1	7
2020	177.4	155.2	60.4	9

출처: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국가데이터처, 2025.

4.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및 출산 진도비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이 내려감에 따라 모든 출산순위 출산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율 감소가 두드러졌다.

2000년~2023년 사이 첫째아 합계출산율은 0.276명(0.710명→0.434명), 둘째아는 0.382명(0.616명→0.234명) 하락하였다.

주목할 점은 2000년~2005년, 2015년~2020년 사이 출산율이 크게 하락했는데, 2000년~2005년 기간의 경우 특히 둘째아(0.206명 하락),

2015년~2020년 기간의 경우는 특히 첫째아(0.187명 하락)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

〈표 3-14〉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

(단위: 여성인구 1명당 명)

	첫째아 출산율	둘째아 출산율	셋째아 출산율	넷째아 출산율	다섯째아 이상 출산율	합계출산율
2000	0.710	0.616	0.139	0.013	0.003	1.481
2005	0.576	0.410	0.088	0.009	0.002	1.085
2010	0.627	0.471	0.11	0.013	0.003	1.224
2015	0.666	0.458	0.099	0.012	0.002	1.237
2020	0.479	0.292	0.057	0.007	0.002	0.837
2021	0.454	0.286	0.058	0.008	0.002	0.808
2022	0.455	0.263	0.052	0.007	0.002	0.779
2023	0.434	0.234	0.044	0.007	0.002	0.721

주: 1) 2000년~2020년은 5년 간격, 2020년 이후는 1년 간격임.

2) 출산순위별 출산율을 합산하면 합계출산율임.

출처: "Total fertility rate (By birth order)[데이터 세트]," Human Fertility Database, 2025.
<https://www.humanfertility.org/Country/Country?cntr=KOR>에서 2025.7.30. 인출

또 다른 대표적인 출산순위별 출산 지표인 출산 진도비(특정 자녀 수를 가진 여성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자녀 수로 출산을 이어갈 확률)를 살펴 보면, 출산생애를 거의 종료한 45세~49세 기혼 여성을 기준으로, 2000년~2020년 사이 특히 제1출산(1명→2명) 진도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0.8938→0.7512). 한편, 최근 2015년~2020년의 경우 저순위 출산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제0 출산진도비: 0.022 감소, 제1 출산진도비: 0.061 감소).

52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표 3-15〉 기혼여성 45세~49세¹⁾ 출산 진도비²⁾

(단위: 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제0 출산진도비($PPR_{0,1}$)	0.9778	0.9696	0.9784	0.9577	0.9351
제1 출산진도비($PPR_{1,2}$)	0.8938	0.8391	0.8353	0.8124	0.7512
제2 출산진도비($PPR_{2,3}$)	0.3992	0.2175	0.1872	0.1768	0.1669
제3 출산진도비($PPR_{3,4}$)	0.2465	0.1692	0.1344	0.0960	0.0847
제4 출산진도비($PPR_{4,5}$)	0.2315	0.1798	0.0534	0.1463	0.1640

주: 1) 출산 생애를 대체로 종료한 45세~49세 기혼 여성의 출산진도비임.

2) 진도비란 특정 자녀 수를 가진 여성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자녀 수로 출산을 이어갈 확률을 의미함.

3) 2000년~2010년은 인구총조사 여성·아동 10% 표본을, 2015년~2020년은 인구총조사 여성·아동 20% 표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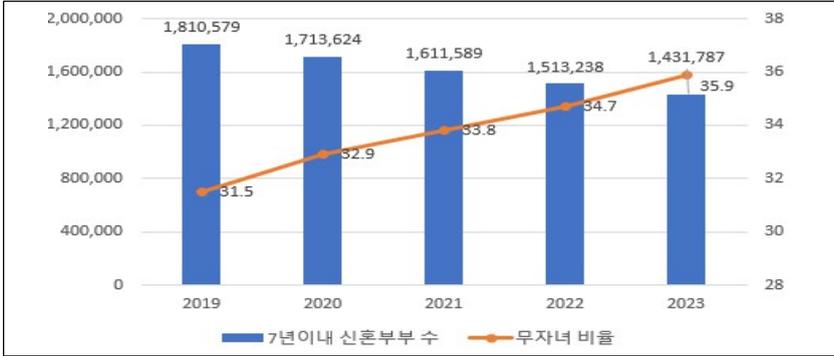
4) 출생순위 미상 자녀 제외하고 산출함.

출처: “인구총조사(연령별/출생자녀 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 이상-시도)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F2001에서 2025.11.02. 각 연도 자료 인출하여 저자 작성함.

5. 기혼 부부 무자녀 비중

기혼 부부 중 무자녀 비중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먼저, 신혼부부(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무자녀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31.5%였는데, 매해 증가하여, 2023년에는 35.9%로 증가하였다.

[그림 3-5] 신혼부부(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무자녀 비율



출처: “신혼부부통계[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n,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sub/showStblGams3.do?stts_cd=H003001에서 2025.11.01. 인출함.

또한, 주 출산 연령대인 25세~44세 기혼 여성 중 무자녀 비중을 살펴 보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7.9%, 2005년에는 9.6%, 2010년에는 7.4%로 감소했으나, 다시 2015년에 13.7%로 크게 증가하고, 2020년에 17.9%가 무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주 출산연령 기혼여성 무자녀 비중

(단위:%)

	전체 (25세~4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2000	7.9	24.4	6.9	3.5	2.8
2005	9.6	34.8	11.5	4.6	3.3
2010	7.4	26.4	11.1	4.1	2.5
2015	13.7	40.8	22.9	9.8	5.9
2020	17.9	47.5	30.6	14.1	8.7

주: 2000년~2020년 5년단위 표본조사(유배우는 사실혼 포함, 일반/집단/집단지식 가구 내 내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포함), 2023년과 2024년은 인구등록센서스(유배우는 법률혼, 내국인 대상) 기준임. 2000년과 2010년은 10% 표본, 2015년과 2020년은 20% 표본임. 2023년 자료는 혼인상태만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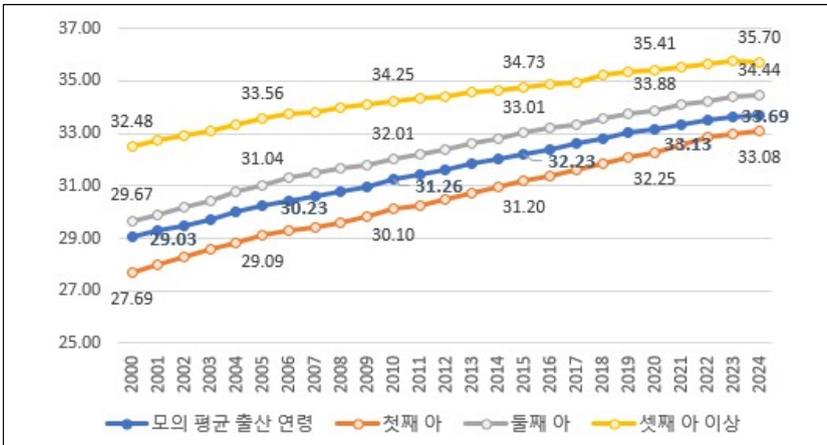
출처: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2월 발행 예정, 총괄보고서에서 발췌, 인용함.

6. 평균 출산 연령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살펴보면, 2000년에 29.03세, 2010년에 31.26세, 2020년에 33.13세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4년에는 33.69세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을 살펴본 결과, 첫째아 출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둘째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 연령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2000년 대비 2024년 첫째 출산 연령은 평균 5.39세 (27.69세→33.08세), 둘째 출산 연령은 평균 4.77세(29.67세→34.44세), 셋째 출산 연령은 3.23세(32.48세→35.70세) 증가하여, 특히 초산 출산 연령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 3-6]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출산연령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5o,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에서 2025.11.01. 인출하여 저자 작성함.

7.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현황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을 살펴보면, 혼외 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에 전체 출생아 수 중 혼인 중은 98.5%, 혼인 외는 1.2%, 미상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혼인 중 95.3%, 혼인 외 4.7%, 미상 0.0%였다. 해당 기간 혼인 중 출생아는 3.2%p 감소한 반면, 혼인 외 출생아는 3.5%p 증가하였다.

〈표 3-17〉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단위: 명, %)

	계(명)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미상
2000	640,089	98.5	1.2	0.3
2005	438,707	97.5	1.8	0.7
2010	470,171	97.5	2.0	0.4
2015	438,420	98.1	1.9	0.1
2020	272,337	97.4	2.5	0.0
2021	260,562	97.0	2.9	0.0
2022	249,186	96.0	3.9	0.0
2023	230,028	95.3	4.7	0.0

주: 2000년~2020년은 5년 간격, 2020년 이후는 1년 간격임.

출처: “인구동향조사(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4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에서 2025.7.30. 인출함.

8. 자녀 출생 관련 인식

가. 이상 자녀 수

기혼 가임연령 여성을 대상으로 이상 자녀 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이상 자녀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25명에서 2018년 2.16명으로, 다시 2021년에는 1.98명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확인된다.

〈표 3-18〉 기혼 가임연령¹⁾ 여성의 이상 자녀 수

(단위: 명, %)

	평균	1명 이하	2명	3명	4명	모르겠음
2015	2.25	7.2	65.9	19.9	5.7	1.3
2018	2.16	10.3	63.6	17.0	4.1	5.0
2021	1.98	14.5	69.7	9.0	1.7	5.0

주: 1) 2015년과 2018년은 기혼여성 15세~49세를 대상으로, 2021년에는 조사대상을 변경하여 기혼여성 19세~49세를 조사함.

출처: 2015년과 2018년 자료는 “가족과 출산조사(기혼여성(15~49세)의 이상 자녀 수)[데이터 세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a,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304에서 2025.7.23. 인출함; 2021년 자료는 “가족과 출산조사(기혼여성(19~49세)의 이상자녀 수)[데이터 세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b,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I038에서 2025.7.23. 인출함.

나.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혼 가임연령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와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60.2%로 절반 이상이였으나, 2018년 49.9%, 2021년 38.0%로 감소하였다. 반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해당 기간 각각 29.0%, 32.8%, 39.1%로 증가했고, “없어도 무관하다”도 각각 10.6%, 16.9%, 20.4%로 증가했다.

〈표 3-19〉 기혼 가임연령¹⁾ 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음
2015	60.2	29.0	10.6	0.1
2018	49.9	32.8	16.9	0.4
2021	38.0	39.1	20.4	2.6

주: 1) 2015년과 2018년은 기혼여성 15세~49세를 대상으로, 2021년에는 조사대상을 변경하여 기혼여성 19세~49세를 조사함.

출처: 2015년과 2018년 자료는 “가족과 출산조사(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데이터 세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c,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308&conn_path=12; 2021년 자료는 “가족과 출산조사(기혼여성(19~49세)의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데이터 세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I029에서 2025. 7.23. 인출함.

다. 혼외 출생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혼외 출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혼외 출생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혼외 출생에 대해 동의(‘전적’+‘약간’) 비중은 21.5%였으나, 2018년 30.2%로 증가하였고, 2024년은 37.2%까지 상승하였다.

〈표 3-20〉 혼외 출생에 대한 인식

(단위: %)

	전적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 반대
2008	2.4	19.1	33.0	45.6
2010	2.7	17.9	36.1	43.3
2012	3.4	19.0	34.2	43.4
2014	3.7	18.7	33.7	43.8
2016	4.5	19.7	34.5	41.3
2018	6.3	23.9	38.0	31.7
2020	7.2	23.4	36.2	33.1
2022	8.3	26.4	36.2	29.2
2024	9.2	28.0	35.7	27.1

출처: “사회조사(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국가데이터처, 2024f,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에서 2025.8.2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제4장

인구동태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

제1절 Yip & Chen(2016) 전이확률 (합계)출산율 모델

제2절 출산탄력성 분석

제3절 분해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인구동태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실증 분석

제4장에서는 2000년~2020년 인구동태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Yip & Chen(2016)이 제시한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출산탄력성(fertility elasticity) 개념을 활용해 주요 인구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셋째,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을 통해 인구동태 요인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동에 기여한 정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제1절 Yip & Chen(2016) 전이확률 (합계)출산율 모델

1. 다양한 (합계)출산율 산출 방법

합계출산율의 사전적 개념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다(국가데이터처, 2025p).

합계출산율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는 방법이다(국가데이터처, 2025p). 통상 합계출산율이라 하면 이 방식을 가리키며, 각국 통계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는 방식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산출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출산 시기 및 출산 이행 경로와 같은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한국인구학회, 2016).

- 통계청 합계출산율 = $\sum_{x=15}^{49} \frac{B_x}{P_x^f}$ (B_x : x 세 가임기 여성 인구가 출산한 출산아 수,
 P_x^f : x 세 가임기 여성 인구)

이에, 대안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산율 산출 방식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아래는 대안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첫째, 조정합계출산율(Tempo-adjusted Total Fertility Rate)은 템포 효과(tempo effect)를 보정한 합계출산율로, Bongaart & Feeney(1998)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조정합계출산율은 모의 평균 출산연령 값을 이용해 출산 지연으로 인한 효과를 보정한다(Bongaart & Feeney, 1998). 통계청 합계출산율은 출산이 늦추어지면, 당해 연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정의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에 따르면, 출산 시기가 늦춰지더라도 평균 자녀 수 자체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즉, 여성이 1명의 자녀를 30세에 낳는 대신 35세 낳더라도 합계출산율 정의에 의하면 자녀 수는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정합계출산율은 이러한 출산 시기 지연(tempo delay)으로 인한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실제 출산 행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보정 지표라 할 수 있다.

- 조정합계출산율 = $\sum_1^i adjTFR_i$
 $(adjTFR_i = \frac{TFR_i}{1-r_i}, r_i = \frac{MAC_i(t+1) - MAC_i(t-1)}{2}, i: \text{출산순위}, MAC_i(t): \text{당해 연도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둘째,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은 특정 코호트에 속한 여성이 가임기를 마친 시점까지 실제로 출산한 평균 자녀 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앞서 통계청 연령별 출산율을 합하는 방식의 경우 해당 연령의

출산율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한국인구학회, 2016). 예컨대, 2020년의 20세 여성이 10년 후 30세가 되었을 때 2020년의 30세 출산율을 그대로 따른다고 가정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상 또는 합성 지표(synthetic indicator)라고도 불린다. 반면, 완결 출산율은 가임기가 끝난 여성을 대상으로 그녀들이 실제 출산한 평균 자녀 수를 구해,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다.

$$\bullet \text{ 완결출산율} = \frac{\text{특정 코호트 여성이 가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출산한 총 자녀 수}}{\text{특정 코호트 여성 총 수}}$$

셋째,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에 기반한 합계출산율 산출 방식은 특정 자녀 수(parity)를 가진 여성이 다음 출산(parity+1)으로 이행할 확률, 즉 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를 적용하여 출산 경로를 동태적으로 추적하는 방식이다(Schoen, 2006). Schoen(2006)은 자녀 수별 전이확률을 토대로 출산이행생명표(Parity Status Life Table)를 제시하였으며, 이 방법은 각 출산 단계의 진도비를 누적함으로써 가임기를 종료한 코호트의 평균 출산 자녀 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상태전이 행렬과 조건부 확률 구조를 통해 연령, 혼인상태, 출산순위 등 하위집단별 출산행동 변화가 전체 출산지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화하여 정책타깃 집단의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데 장점이 있다.

예시로, Chen et al.(2018)는 연령·혼인상태·출산순위별 출산율 구조를 활용하여 출산집단별 합계출산율 기여도와 비용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셋째아(출산순위 3) 출산지원 정책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가장 비용효율적인 정책 타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출산 효과는 주로 30~39세 기혼여성 집단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Chen et al., 2018:9-10). 이처럼 전이확률 방식은 저출산 현상 시 그 이유가 ‘첫째 자

녀 출산의 지연·포기'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둘째·셋째 자녀 기피'에서 기인하는지 등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정책연구에서 특히 유용하다(Choi et al., 2023; Schoen, 2006; Yip & Chen, 2016).

전이확률 방식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확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변형된 방식 중 하나인 Yip & Chen(2016)의 전이확률 모형을 적용하여 출산율을 산출하였다. 이하에서는 Yip & Chen(2016)의 방법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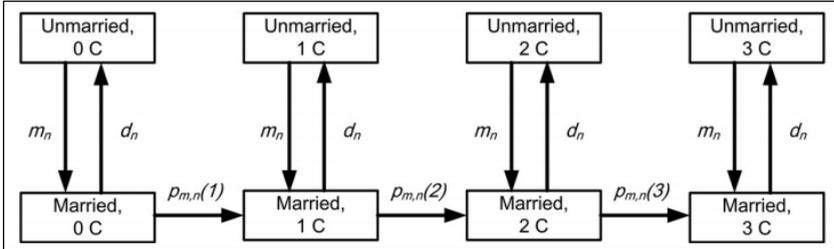
2. Yip & Chen(2016) 전이확률 (합계)출산율 모델

가. Yip & Chen(2016) 전이확률 모델 소개

Yip & Chen(2016)에서는 전이확률 모델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Yip & Chen(2016)은 출산을 하나의 '전이 과정(transition process)'으로 보고, 여성의 특정 시점에서의 혼인 상태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현재 자녀 수 상태에서 다음 시점(1년 후)에 다른 자녀 수 상태로 전이할 확률을 이용해 합계출산율을 산출한다.

Yip & Chen(2016)은 결혼, 이혼, 유배우 및 무배우 상태, 그리고 자녀 수별 과정을 [그림 4-1]과 같이 모형화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결혼과 이혼을 통해 여성의 혼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하며, 자녀 수가 0자녀에서 1자녀, 2자녀, 3자녀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모형화하였다.

[그림 4-1] Yip & Chen(2016)에서 제시한 출산 전이 과정 모형



주: 1) 혼외출산은 없다고 가정함.

2) 사별을 통한 무배우로의 이동은 없다고 가정함.

3) 동일 연도 내에서는 결혼·이혼·출산 중 하나의 사건만 발생할 수 있음.

4) m_n = 혼인 전이확률, d_n = 이혼 전이확률, $p_{m,n}(N)$ =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 전이확률

출처: "An elasticity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ronatalist measures in Taiwan" Yip & Chen, 2016, Asian Population Studies, p281. Figure6에서 인용함.

Yip & Chen(2016) 모형은 대만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으로, 대만의 경우 혼외출산 비중이 2010년 기준 전체 출산의 약 5%에 불과하여 혼외출산을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Chen 외(2018b)의 호주 분석에서는 혼외출산을 포함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모형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추정 오차 범위가 확대되므로, 통계학에서는 모형의 단순성(parsimony)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한국의 경우 분석기간(2000년~2020년) 동안 혼외출산 비중이 평균 1.9%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3-17〉 참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을 위해 대만의 Yip & Chen(2016) 모형을 준용하여 혼외 출산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Yip & Chen(2016) 모형에서는 동일 연도 내에서 결혼·이혼·출산 중 하나의 사건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실제로 결혼과 출산 등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별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이 가임연령(15세~49세) 여성 인구임을 감안할 때 사별을 통한 무배우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상 평균 혼인 및 이혼 전이확률을 적용했는데, 자녀 유무 및 수에 따라 혼인(재혼 포함) 및 이혼 전이확률이 상이할 수 있다. Yip & Chen(2016) 연구에서는 자녀 수별로 상이한 혼인 및 이혼 전이율을 적용하였으나, 한국 인구동향조사(혼인 데이터)에서는 자녀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자녀 수별 혼인 전이확률을 산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Yip & Chen(2016) 모델은 출산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며, 이전까지 살펴보지 못한 혼인 및 이혼,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하다.

각 인구 동태별 전이확률은 아래 <표 4-1>과 같이 정의된다.

먼저, 혼인 전이확률(m)은 무배우에서→유배우로 전이할 확률로, 당해연도 무배우 여성 인구에서 혼인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둘째, 이혼 전이확률은 유배우에서→무배우로 전이할 확률로, 당해연도 유배우 인구에서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셋째,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은 유배우 N 자녀에서→ $N+1$ 자녀로 전이할 확률로, 당해연도 유배우 N 자녀 여성 인구수에서 혼인 중 출생한 ($N+1$) 출생아 수이다.

<표 4-1> 인구 동태별 전이확률 정의 및 산식

인구 동태 전이확률	정의	산식
혼인 전이확률(m)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전이할 확률	$\frac{\text{여성 혼인 건수}}{\text{무배우여성 인구수}}$
이혼 전이확률(d)	유배우에서 무배우로 전이할 확률	$\frac{\text{여성 이혼 건수}}{\text{유배우여성 인구수}}$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P_{m,n}(N)$)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 (유배우 N 자녀에서 → 유배우 $N+1$ 자녀로 전이할 확률)	$\frac{\text{혼인 중 출생한 } (N+1) \text{ 출생아 수}}{\text{유배우 } N \text{ 자녀 여성 인구수}}$

출처: 연구진 작성

Yip & Chen(2016)은 초기 14세(π_{14})에 모든 여성이 무자녀 무배우 상태(Unmarried 0C)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후 연령에서부터는 아래 식(4-1)의 전이확률 행렬(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에 따라 매년 다음 상태로 전이한다고 가정하였다.

$$\pi_{n+1} = \begin{pmatrix} \pi_{u,n+1}(0) \\ \pi_{m,n+1}(0) \\ \pi_{u,n+1}(1) \\ \pi_{m,n+1}(1) \\ \pi_{u,n+1}(2) \\ \pi_{m,n+1}(2) \\ \pi_{u,n+1}(3) \\ \pi_{m,n+1}(3) \end{pmatrix} = T_n \begin{pmatrix} \pi_{u,n}(0) \\ \pi_{m,n}(0) \\ \pi_{u,n}(1) \\ \pi_{m,n}(1) \\ \pi_{u,n}(2) \\ \pi_{m,n}(2) \\ \pi_{u,n}(3) \\ \pi_{m,n}(3) \end{pmatrix} = T_n \pi_n \dots\dots\dots \text{식(4-1)}$$

식(4-1)에서 n 은 연령을 의미하며, π_n 은 해당 연령에서 여성의 상태별 비율을 의미한다. 기호 u 는 무배우(unmarried), m 은 유배우(married)를 의미하며, 괄호 안의 숫자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각 연령별 무배우 무자녀 비율은 $\pi_{u,n}(0)$, 유자녀 무자녀 비율은 $\pi_{m,n}(0)$ 로 표시된다. 무배우 1자녀는 $\pi_{u,n}(1)$, 유배우 1자녀는 $\pi_{m,n}(1)$ 이다. 초기 14세(π_{14})의 상태는 (1,0,0,0,0,0,0,0) 이고, 기호 T_n 은 아래 식(4-2)와 같다.

식(4-2)는 [그림 4-1]의 과정을 수식화한 것이다. 각 연령별 동태 전이 확률을 해당 식에 대입하여 상태별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행×제 1열]의 $(1-P_{u,n}(1)-m_n)$ 은 전체 여성 중 무배우 무자녀 여성 비율로, 첫째 자녀 혼외 출산($P_{u,n}(1)$)과 혼인(m_n)전이확률을 제외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혼외출산은 없다고 상정했기에 $P_{u,n}(1)=0$ 을 대입하면 된다. 또한, [제 1행×제 2열]의 m_n 은 무자녀 유배우 비율로, 무자녀

상태로 혼인에 전이한 여성의 확률이다. Yip & Chen(2016) 모형에서는 동일 연도 내에서 결혼·이혼·출산 중 하나의 사건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므로, 동일 행 내에서 혼인과 동시에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 1자녀’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begin{pmatrix} 1-p_{u,n}(1)-m_n & d_n & 0 & 0 & 0 & 0 & 0 & 0 & 0 \\ m_n & 1-p_{m,n}(1)-d_n & 0 & 0 & 0 & 0 & 0 & 0 & 0 \\ p_{u,n}(1) & 0 & 1-p_{u,n}(2)-m_n & d_n & 0 & 0 & 0 & 0 & 0 \\ 0 & p_{m,n}(1) & m_n & 1-p_{m,n}(2)-d_n & 0 & 0 & 0 & 0 & 0 \\ 0 & 0 & p_{u,n}(2) & 0 & 1-p_{u,n}(3)-m_n & d_n & 0 & 0 & 0 \\ 0 & 0 & 0 & p_{m,n}(2) & m_n & 1-p_{m,n}(3)-d_n & 0 & 0 & 0 \\ 0 & 0 & 0 & 0 & p_{u,n}(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p_{m,n}(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m_n & d_n & \\ 0 & 0 & 0 & 0 & 0 & 0 & m_n & 1-d_n \end{pmatrix}.$$

식(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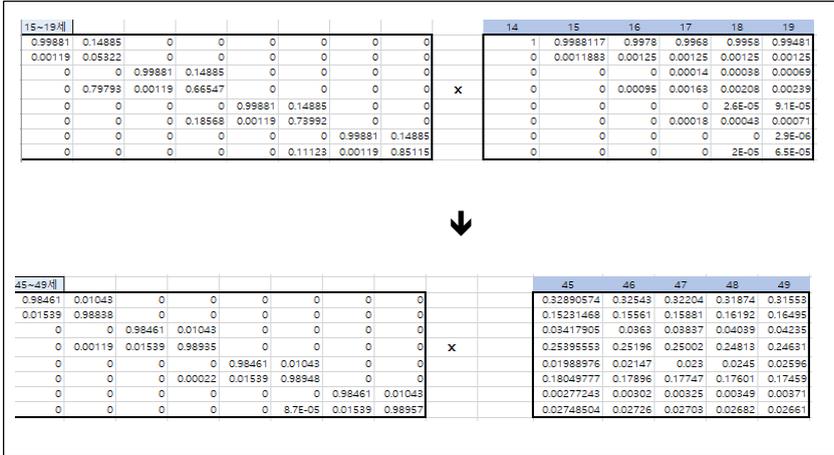
Yip & Chen(2016)은 여성의 가임연령을 15세부터 49세까지로 상정하고, 49세 시점에서의 합계출산율(TFR)을 아래 식(4-3)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는 49세 시점의 여성 분포가 자녀 수별 상태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TFR = (0,0,1,1,2,2,3,3)^T \times \pi_{49} = (0,0,1,1,2,2,3,3)^T \times T_{48} T_{47} \cdots T_{15} \pi_{14}.$$

식(4-3)

아래 [그림 4-2]는 2020년 전이확률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예시이다. 그림의 왼쪽 표는 5세 단위 연령구간별 전이확률 행렬(식 4-2)이다. 오른쪽 표는 산출 결과값으로, 연령별 여성의 혼인 및 자녀 상태별 분포 비율(식 4-1)을 나타낸다.

[그림 4-2] 전이확률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 산출 과정 도식화(2020년 예시)



출처: 연구진 작성

나. 연구자료 및 인구동태별 전이확률 산출

1) 연구자료 및 자료 정제(cleaning)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 마이크로 데이터), 인구총조사 전수(KOSIS), 인구총조사 여성·아동(20%표본, KOSIS), 인구총조사(2% 표본 인구, 마이크로 데이터),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연앙 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인구총조사(KOSIS)에서는 인구수를 5세 단위의 연령구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5세 단위로 자료를 정리하고 산출하였다.

한편, 분모에 해당하는 여성 인구수는 통계청 합계출산율 산출자료와의 정합성을 위해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활용하되, 연령별·출생아 수별·혼인상태별 하위 집단 인구수는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해당 세부 비율을 계산한 후 이를 주민등록연앙인구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세부 인구를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인구총조사에서 15세~19세 여성 인구와 20세~24세 여성 인구의 비율이 1:3으로 나타난 경우, 해당 비율을 주민등록연앙인구에 적용하여 각 연령집단의 인구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유배우 여성의 2자녀→3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경우 3자녀 이상(3+)으로 통합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우 3자녀 이상 출산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배우 자녀 수별 2자녀→3자녀 전이확률 산출 시, 해당 구간의 분자를 3자녀 이상 출생아 수로 계산하였다.

각 인구 동태 전이확률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표 4-2>에 요약하였다.

<표 4-2> 인구 동태 전이확률 산출 사용 자료

인구 동태 전이확률	변수		자료
혼인 전이확률(m)	분자	5세 단위 혼인 건수	인구동향조사(KOSIS)
	분모	5세 단위 무배우 여성 인구 수	인구총조사 전수(KOSIS), 주민등록 연앙인구
이혼 전이확률(dn)	분자	5세 단위 이혼 건수	인구동향조사(KOSIS)
	분모	5세 단위 유배우 여성 인구 수	인구총조사 전수(KOSIS), 주민등록 연앙인구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 (Pm,n(N))	분자	5세 단위 유배우 여성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인구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
	분모	5세 단위 유배우 자녀 수별 여성 인구 수	인구총조사 여성·아동(20% 표본, KOSIS), 주민등록 연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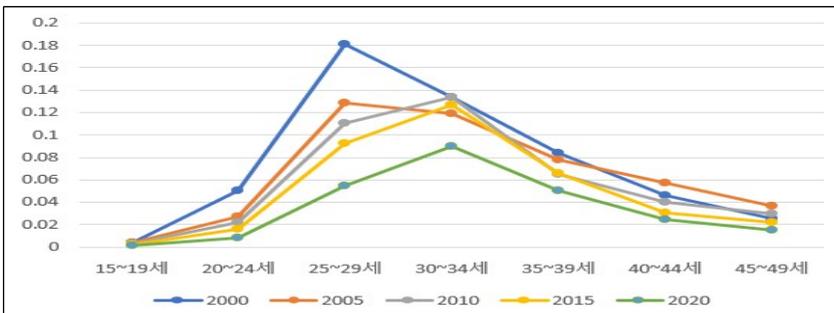
주: 2000년, 2010년의 경우 유배우 여성 인구 수를 KOSIS에서 내국인만 제공하고 있어 인구총조사(전수 인구,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외국인 자료를 산출하여 합산함.

2) 인구동태별 전이확률 산출

다음은 2000년~2020년 인구 동태별 전이확률을 산출한 결과값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을 중심으로 각 동태별 전이확률의 변화를 설명하였으며, 실제 수치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먼저 혼인 전이확률(무배우→유배우로 전이할 확률)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세~29세 연령층의 혼인 전이확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특히 2000년~2005년과 2015년~2020년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세~34세의 경우 2000년~2015년까지는 비교적 변동이 없었으나, 2015년~2020년 사이에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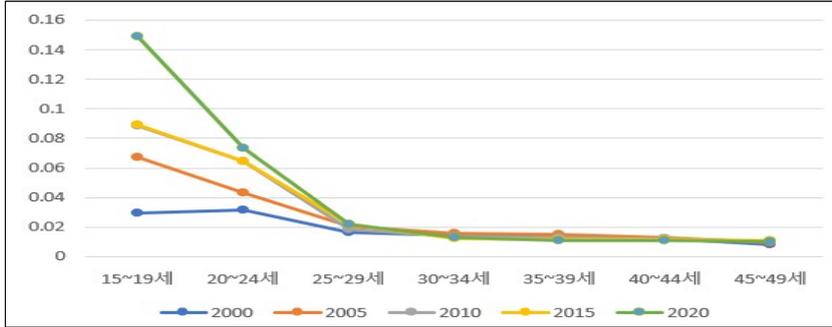
[그림 4-3]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혼인 전이확률



출처: 연구진 작성

이혼 전이확률(유배우 → 무배우로 전이할 확률)의 경우,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2005년 이후 15세~19세 및 20세~24세 연령층에서 이혼 전이확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해당 연령층의 경우 유배우 여성 인구와 이혼 건수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 변화라기보다 통계적 노이즈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4-4]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이혼 전이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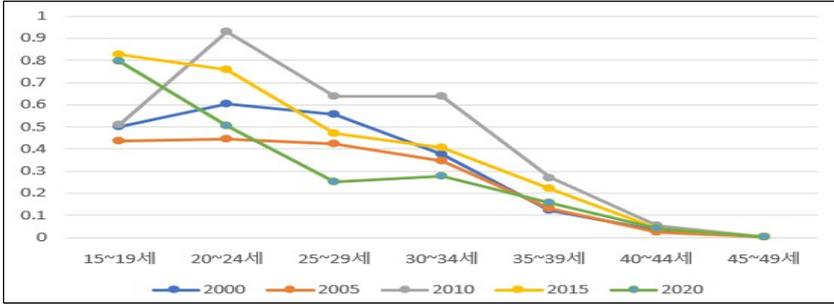


주: 15세~19세, 20세~24세의 경우 이혼 건수, 유배우 여성 인구수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 변화보다는 통계적 노이즈일 확률이 더 높아, 해석에 주의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유배우 여성의 자녀 수별 전이확률을 주 출산연령대인 25세~34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 자녀(0→1자녀) 전이확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25세~29세 연령층은 2015년~2020년 사이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30세~34세 연령층은 2010년~2015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한 뒤 2015년~2020년에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2010년에 첫째 자녀 전이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추측컨대, 2010년은 2005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시기로, 2010년의 첫째 자녀 전이확률 상승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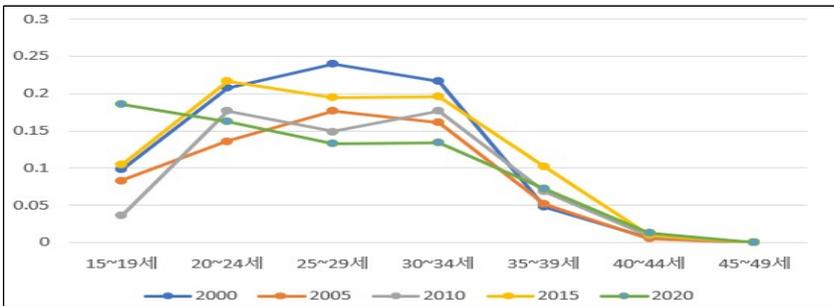
[그림 4-5]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유배우 첫째 자녀(0→1자녀) 전이확률



출처: 연구진 작성

유배우 첫째 자녀(1→2자녀)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주 출산연령대인 25세~34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히 25세~29세는 2000년~2005년과 2015년~2020년 사이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며, 30세~34세 역시 동일 기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6]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유배우 둘째 자녀(1→2자녀) 전이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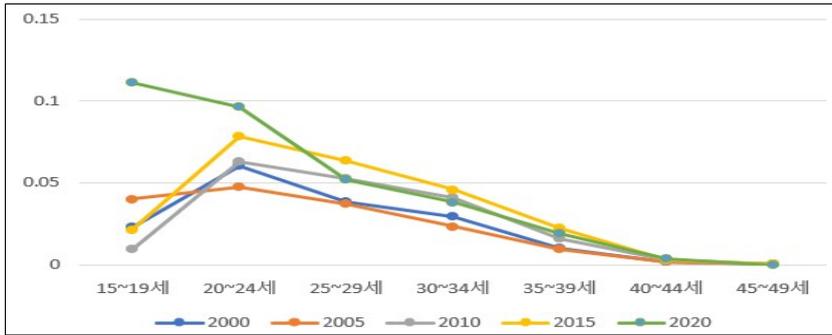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유배우 셋째 자녀 이상(2→3+자녀) 전이확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15세~19세 연령대에서 전이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해당 연령대의 사례수

74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 변화보다는 통계적 노이즈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된다.

[그림 4-7] 2000년~2020년 5세 단위별 유배우 셋째 자녀 이상(2→3+자녀) 전이확률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3〉 연도별·연령별 인구동태별 전이확률

(단위: 건, 명)

2000년	혼인 전이확률	이혼 전이확률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		
			1자녀	2자녀	3자녀+
15세~19세	0.0043	0.0295	0.5012	0.0975	0.0227
20세~24세	0.0504	0.0313	0.6039	0.2076	0.0606
25세~29세	0.1808	0.0161	0.5568	0.2393	0.0384
30세~34세	0.1334	0.0142	0.3769	0.2168	0.0295
35세~40세	0.0838	0.0137	0.1249	0.0475	0.0101
40세~44세	0.0465	0.0120	0.0322	0.0062	0.0017
45세~49세	0.0259	0.0080	0.0045	0.0005	0.0002
2005년	혼인 전이확률	이혼 전이확률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		
			1자녀	2자녀	3자녀+
15세~19세	0.0039	0.0675	0.4376	0.0832	0.0400
20세~24세	0.0272	0.0430	0.4450	0.1360	0.0476
25세~29세	0.1290	0.0207	0.4240	0.1771	0.0373
30세~34세	0.1193	0.0158	0.3471	0.1609	0.0233
35세~40세	0.0778	0.0147	0.1313	0.0517	0.0095

40세~44세	0.0574	0.0126	0.0258	0.0050	0.0015
45세~49세	0.0368	0.0096	0.0030	0.0002	0.0001
2010년	혼인 전이확률	이혼 전이확률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		
			1자녀	2자녀	3자녀+
15세~19세	0.0036	0.0883	0.5095	0.0360	0.0091
20세~24세	0.0222	0.0647	0.9288	0.1769	0.0628
25세~29세	0.1103	0.0186	0.6366	0.1490	0.0523
30세~34세	0.1340	0.0136	0.6400	0.1770	0.0410
35세~40세	0.0653	0.0128	0.2712	0.0678	0.0161
40세~44세	0.0404	0.0124	0.0534	0.0086	0.0026
45세~49세	0.0295	0.0102	0.0037	0.0002	0.0001
2015년	혼인 전이확률	이혼 전이확률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		
			1자녀	2자녀	3자녀+
15세~19세	0.0022	0.0895	0.8262	0.1048	0.0213
20세~24세	0.0160	0.0646	0.7587	0.2162	0.0784
25세~29세	0.0925	0.0220	0.4713	0.1944	0.0638
30세~34세	0.1270	0.0124	0.4079	0.1966	0.0458
35세~40세	0.0655	0.0117	0.2214	0.1015	0.0223
40세~44세	0.0306	0.0118	0.0395	0.0109	0.0030
45세~49세	0.0219	0.0109	0.0012	0.0003	0.0001
2020년	혼인 전이확률	이혼 전이확률	유배우 자녀 수별 전이확률		
			1자녀	2자녀	3자녀
15세~19세	0.0012	0.1488	0.7979	0.1857	0.1112
20세~24세	0.0081	0.0734	0.5037	0.1623	0.0967
25세~29세	0.0546	0.0220	0.2508	0.1325	0.0522
30세~34세	0.0903	0.0132	0.2776	0.1339	0.0381
35세~40세	0.0500	0.0110	0.1590	0.0720	0.0188
40세~44세	0.0248	0.0109	0.0400	0.0124	0.0036
45세~49세	0.0154	0.0104	0.0012	0.0002	0.0001

출처: 연구진 작성

3) 전이확률을 통해 산출한 연령별 여성 분포

다음은 전이확률을 통해 연령별 여성의 혼인·자녀 수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이다.

Yip & Chen(2016) 모형에서는 모든 여성이 초기 14세 시점에는 무배우·무자녀 상태에 있으며,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연령별 전이확률 행렬에 따라 매년 다음 상태로 이동한다고 가정하였다(식 4-1, 4-2 참조). 예를 들어, 14세에는 모든 여성이 100% 무배우·무자녀 상태에 있으나, 전이확률 행렬에 따라 다음 해인 15세에는 약 98%가 무배우·무자녀 상태 유지, 약 2%가 유배우·무자녀 상태로 전이, 16세에는 약 96%가 무배우·무자녀 상태, 약 3%가 유배우·무자녀 상태, 약 1%가 유배우·1자녀 상태로 전이할 수 있다. [그림 4-8]은 이러한 전이확률 행렬에 따라 연령별 여성의 혼인 및 자녀 수별 분포를 연도별로 도식화하였다⁴⁾. 본 그래프를 통해 여성의 혼인과 출산이 주로 어느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첫째, 무배우·무자녀(질은 파랑) 상태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여성 중 무배우·무자녀 비중(질은 파랑 면적)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24세를 기점으로 무배우·무자녀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4세를 기점으로 혼인의 본격적인 증가가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참고로, 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관측된 여성의 혼인·자녀 수별 분포와는 차이가 있으며, 전이확률을 기반으로 도출된 '가상적(또는 암시적) 분포(synthetic or implied distribution)'이다. Choi 외(2023)에서도 2019년 전이확률을 적용해 도출한 분포가 실제 관측치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전이확률로부터 산출된 분포가 해당 연도(예: 2019년)의 전이강도가 동일하게 지속될 경우 나타나는 잠재적 인구 구조(potential population structure)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반면 2020년에는 무배우·무자녀 비중이 24세에서도 감소세가 시작되지만, 전 연령대 중 29세에 가장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혼인 연령의 상승 추세를 반영한다.

둘째, 유배우·무자녀(주황) 상태의 비중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체 여성 중 유배우·무자녀 비중(주황 면적)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00년에는 26세(18.4%)에서 유배우·무자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2020년에는 32세(18.0%)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무자녀 비중의 확대와 혼인·출산 연령의 상승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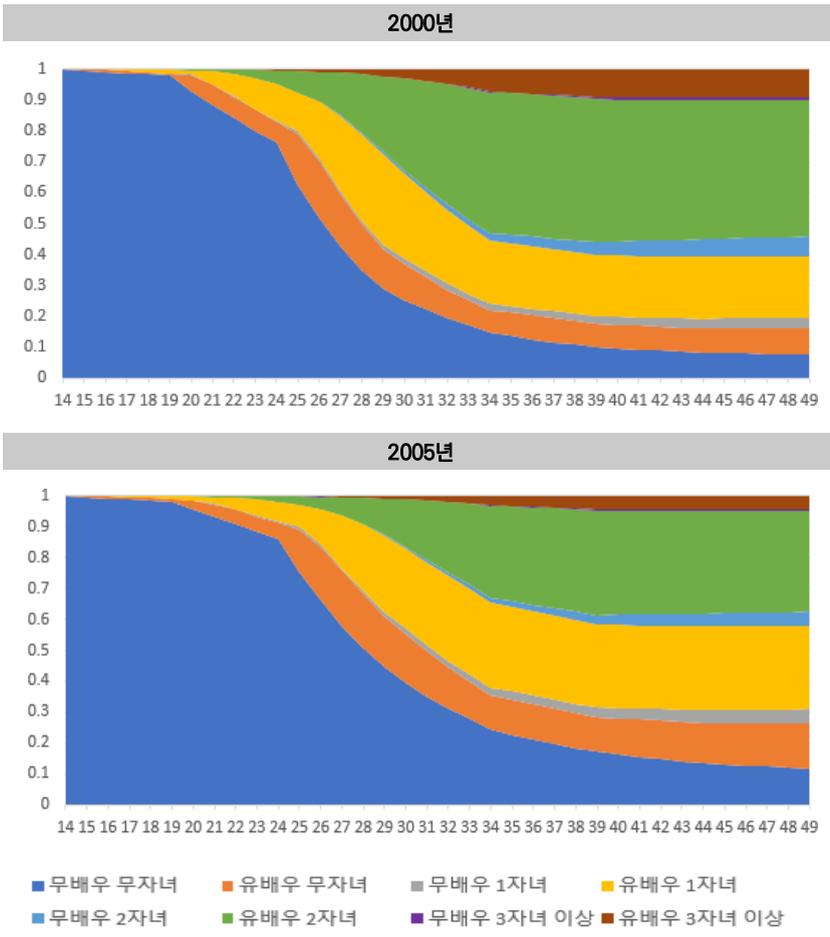
셋째, 1자녀(무·유배우)(회색+노랑)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여성 중 1자녀 여성의 비중(회색+노랑 면적)이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00년에는 29세(30.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뒤 감소하였고, 34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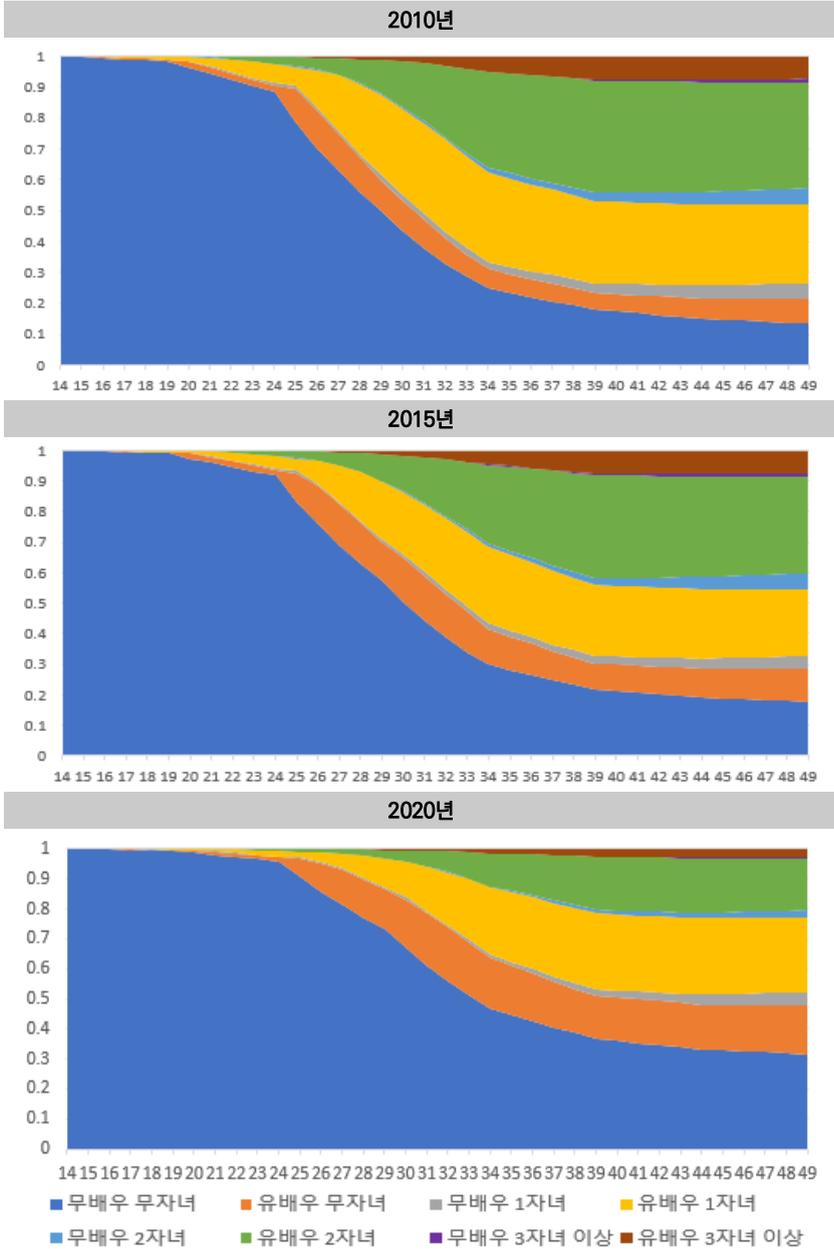
반면 2020년에는 30대 초반에 급격히 상승하다가, 30대 중반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이후에도 완만히 증가하여 가임기 종료 시점인 49세(28.9%)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2000년에는 둘째 자녀 출산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29세 이후부터 2자녀 여성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자녀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데 반해, 2020년에는 둘째 자녀 출산의 감소로 인해 1자녀 비중이 감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출산 연령 상승으로 40대에서도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넷째, 2자녀(무·유배우)(열은 파랑+초록) 상태의 비중도 2000년에 비해 2020년에는 감소하였다. 즉, 전체 여성 중 2자녀를 둔 여성의 비중(열은 파랑+초록 면적)이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00년에는 30대 초반에 2자녀(무·유배우)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30대 중후반부터는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44세(50.7%)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

다. 반면 2020년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뚜렷한 상승 구간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44세(20.0%)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의 경우 여성들이 30대 초반에 특히 둘째 자녀를 많이 출산한 반면, 2020년에는 둘째 자녀 출산 자체의 전반적 감소로 인해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반영한다.

[그림 4-8] 연령별(14세~49세) 여성의 혼인 및 자녀 수별 분포





출처: 연구진 작성

다. Yip & Chen(2016) 전이확률 모델 (합계)출산율 산출

이상의 인구 동태 전이확률 결과값을 토대로 Yip & Chen(2016)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였다. 통계청 합계출산율(15세~49세)⁵⁾ 결과와 비교 시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그림 4-9 참조).

〈표 4-4〉 전이확률 합계출산율 및 통계청 합계출산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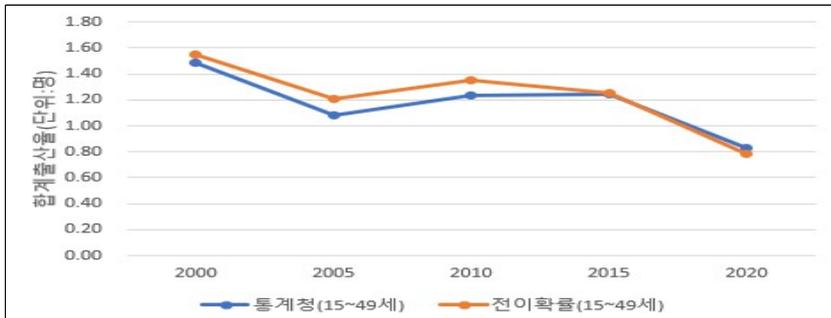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5	2020
통계청(15세~49세) ¹⁾	1.48	1.08	1.24	1.24	0.83
전이확률	1.55	1.21	1.35	1.25	0.78

주: 1)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합계출산율은 각세별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값으로,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5세 단위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해서 계산함.

2) 2010년→2015년 변화에서는 추세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해당 기간 출생아 수(약 47만 명→약 43만 8천 명), 조출생율(9.4명→8.6명) 및 일반 출산율(35.23명→34.26명)을 살펴보면 전이확률 값과 마찬가지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 측정 방식에 따라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해당 기간을 출산율 감소 추세로 보는 것이 실제 현상을 더 정확히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9] 전이확률 합계출산율 및 통계청 합계출산율



출처: 연구진 작성

5)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합계출산율은 각세별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한 값으로,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5세 단위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였다.

제2절 출산탄력성 분석

다음은 인구동태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탄력성 그리고 분해분석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제2절에서는 출산탄력성 분석을 통해 개별 인구동태가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1. 출산탄력성(Fertility Elasticity) 개념 소개

출산탄력성은 경제학의 가격 탄력성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혼인, 이혼,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 자녀 수별 무배우 출산율 등 개별 인구동태 요인(θ_i)이 1% 변화할 때, 합계출산율(TFR)이 몇 %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식 4-4 참조, Yip & Chen, 2016). 예를 들어, 혼인 전이확률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몇 % 변화하는지를 통해 해당 요인의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탄력성이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변화에 합계출산율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해당 요인이 출산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ext{Elasticity of TFR to } \theta_i = \frac{\Delta(\text{TFR})/\text{TFR}}{\Delta\theta_i/\theta_i} = \frac{\Delta(\text{TFR})}{\Delta\theta_i} * \frac{\theta_i}{\text{TFR}} = \frac{\partial(\text{TFR})}{\partial\theta_i} * \frac{\theta_i}{\text{TFR}} .$$

식(4-4)

출산탄력성(fertility elasticity)은 회귀분석에서의 표준화 회귀계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요인별·연도별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러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상

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요인별 영향력이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혼인율의 출산탄력성이 0.4였는데, 2020년에 0.7로 상승했다면, 혼인율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출산탄력성은 국가 간 비교 분석에 특히 적합한 지표이다. 제도적·사회적 환경 차이로 인해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절대 수준이나 변동 폭이 상이하더라도, 출산탄력성은 요인별 영향 구조를 표준화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전통적인 분해분석은 특정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변화에 각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국가별로 출산율 변화의 규모 자체가 크게 다른 경우 요인 간 상대적 영향력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 모두에서 2015년~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 A국은 하락폭이 크고 B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분해분석을 적용하면 각 국가 내에서 혼인율 하락, 유배우 출산력 감소, 이혼 증가 등이 출산율 하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출산율 감소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반면 출산탄력성을 활용하면 각 국가에서 혼인율, 출산력, 이혼율 등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된 계수로 제시할 수 있어, 국가 간 요인별 영향 구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탄력성은 국가 간 비교 연구나 시기별 출산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한 분석 도구라 할 수 있다.

2. 출산탄력성(Fertility Elasticity) 분석 결과

출산탄력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4-10], [그림 4-11], <표 4-5> 참조).

첫째, 혼인 전이확률(무배우→유배우)의 출산탄력성 계수(영향력)는 모든 연도에서 다른 요인들보다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20년에는 혼인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9] 참조). 2020년 모든 연령대에서 혼인 전이확률이 1%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 0.69% 상승(0.837명→0.842명)⁶⁾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결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30세~34세 연령대에서 혼인 전이확률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30세~34세의 출산탄력성 계수는 0.07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0.29로 약 4배 증가하였다([그림 4-10], <표 4-5> 참조). 즉, 2000년에 30세~34세의 혼인 전이확률이 1%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07% 상승(1.480명→1.481명)하는 반면, 2020년에는 0.29% (0.837명→0.839명)⁷⁾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혼 전이확률(유배우→무배우)의 출산탄력성 계수(영향력)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 4-9] 참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주 출산 연령대인 25세~29세, 30세~34세 연령대에서의 이혼 전이확률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셋째, 유배우 첫째 자녀(0→1자녀) 전이확률의 출산탄력성 계수(영향력)는 2020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이확률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약 0.35% 상승하는 것으로

6) 통계청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전이확률 기반 합계출산율은 0.781명→0.786명 상승한다.

7) 통계청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전이확률 기반 합계출산율은 2000년은 1.551명→1.552명, 2020년은 0.781명→0.783명으로 상승한다.

나타났다⁸⁾. 이전까지는 유배우 둘째 자녀(1→2자녀)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1자녀 전이확률과 비슷하거나 더 큰 수준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1자녀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이를 크게 상회하며 역전 현상을 보였다(그림 4-9 참조). 연령대별로 보면, 출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2020년에는 30세~34세와 35세~39세 연령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0, <표 4-5> 참조). 또한 주목할 점은 2010년에 유배우 1자녀 전이율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5년 대비 2010년에 합계출산율이 상승(전이확률 기반 합계출산율: 1.21명 → 1.35명, 통계청 5세 간격 합계출산율: 1.08명 → 1.24명)한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배우 2자녀 전이율의 출산탄력성 계수가 1자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그림 4-10 참조), 이는 해당 기간 출산율 증가가 주로 둘째 자녀 출산에 의해 견인되었음을 시사한다.

넷째, 유배우 둘째 자녀(1→2자녀) 전이확률의 경우, 연도별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참조).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출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34세~39세의 영향력⁹⁾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1, <표 4-5> 참조).

다섯째, 유배우 셋째 자녀 이상(2→3+자녀) 전이확률의 경우, 연도별로 영향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참조).

이상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합계출산율 결정에 있어 혼인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그 영향력이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둘째, 유배우 첫째 자녀(0→1자녀) 전이확률의 영향력 또한 2020년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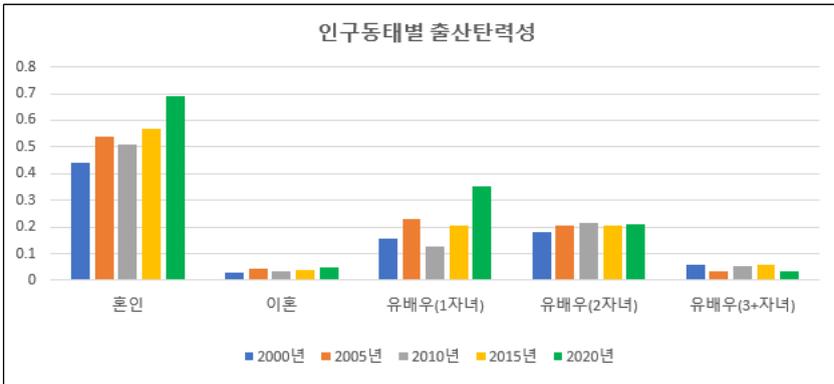
8)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5년 0.16% → 2010년 0.13% → 2015년 0.21% → 2020년 0.35%로, 2020년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9) 2000년:0.03 → 2005년:0.05 → 2010년:0.06 → 2015년:0.08 → 2020년:0.09

기점으로 유배우 둘째 자녀(1→2자녀) 전이확률의 영향력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셋째, 연령별로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지연됨에 따라, 30세~34세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2020년을 기점으로 혼인 전이확률 그리고 유배우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커지고, 연령별로는 30세~34세의 영향력이 상승하였다.

[그림 4-10] 연도별 인구동태 출산탄력성 분석 결과



주: 출산탄력성 계수를 연령별로 합산한 값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해당 인구동태 전이확률이 1%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몇 % 변화하는지를 의미함.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5> 연도별·연령별 인구동태 출산탄력성 계수

연령대	혼인	이혼	유배우 1자녀 (0→1 자녀)	유배우 2자녀 (1→2 자녀)	유배우 3자녀+ (2→3+ 자녀)
2000년					
15세~19세	0.0092	-0.0005	0.0006	0.0002	0.0000
20세~24세	0.0927	-0.0054	0.0095	0.0062	0.0013
25세~29세	0.2504	-0.0118	0.0551	0.0408	0.0101
30세~34세	0.0741	-0.0094	0.0614	0.0999	0.0285

86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연령대	혼인	이혼	유배우 1자녀 (0→1 자녀)	유배우 2자녀 (1→2 자녀)	유배우 3자녀+ (2→3+ 자녀)
35세~39세	0.0114	-0.0024	0.0225	0.0276	0.0142
40세~44세	0.0012	-0.0004	0.0072	0.0039	0.0024
45세~49세	0.0001	0.0000	0.0011	0.0003	0.0003
계	0.4392	-0.0299	0.1574	0.1788	0.0570

2005년

15세~19세	0.0121	-0.0013	0.0010	0.0003	0.0000
20세~24세	0.0794	-0.0069	0.0092	0.0042	0.0006
25세~29세	0.2925	-0.0157	0.0631	0.0352	0.0055
30세~34세	0.1282	-0.0136	0.0973	0.1098	0.0165
35세~39세	0.0217	-0.0042	0.0471	0.0515	0.0118
40세~44세	0.0023	-0.0006	0.0120	0.0054	0.0021
45세~49세	0.0001	0.0000	0.0016	0.0003	0.0002
계	0.5363	-0.0423	0.2313	0.2066	0.0367

2010년

15세~19세	0.0093	-0.0014	0.0005	0.0001	0.0000
20세~24세	0.0580	-0.0069	0.0052	0.0062	0.0008
25세~29세	0.2376	-0.0104	0.0270	0.0281	0.0058
30세~34세	0.1736	-0.0108	0.0487	0.1107	0.0241
35세~39세	0.0294	-0.0040	0.0325	0.0607	0.0186
40세~44세	0.0029	-0.0006	0.0102	0.0081	0.0034
45세~49세	0.0001	0.0000	0.0010	0.0002	0.0002
계	0.5109	-0.0342	0.1251	0.2142	0.0528

2015년

15세~19세	0.0079	-0.0011	0.0005	0.0002	0.0000
20세~24세	0.0556	-0.0063	0.0054	0.0041	0.0007
25세~29세	0.2595	-0.0129	0.0386	0.0221	0.0055
30세~34세	0.2077	-0.0122	0.0866	0.0874	0.0226
35세~39세	0.0341	-0.0054	0.0627	0.0803	0.0240
40세~44세	0.0021	-0.0007	0.0129	0.0097	0.0039
45세~49세	0.0000	0.0000	0.0005	0.0003	0.0001
계	0.5669	-0.0386	0.2072	0.2041	0.0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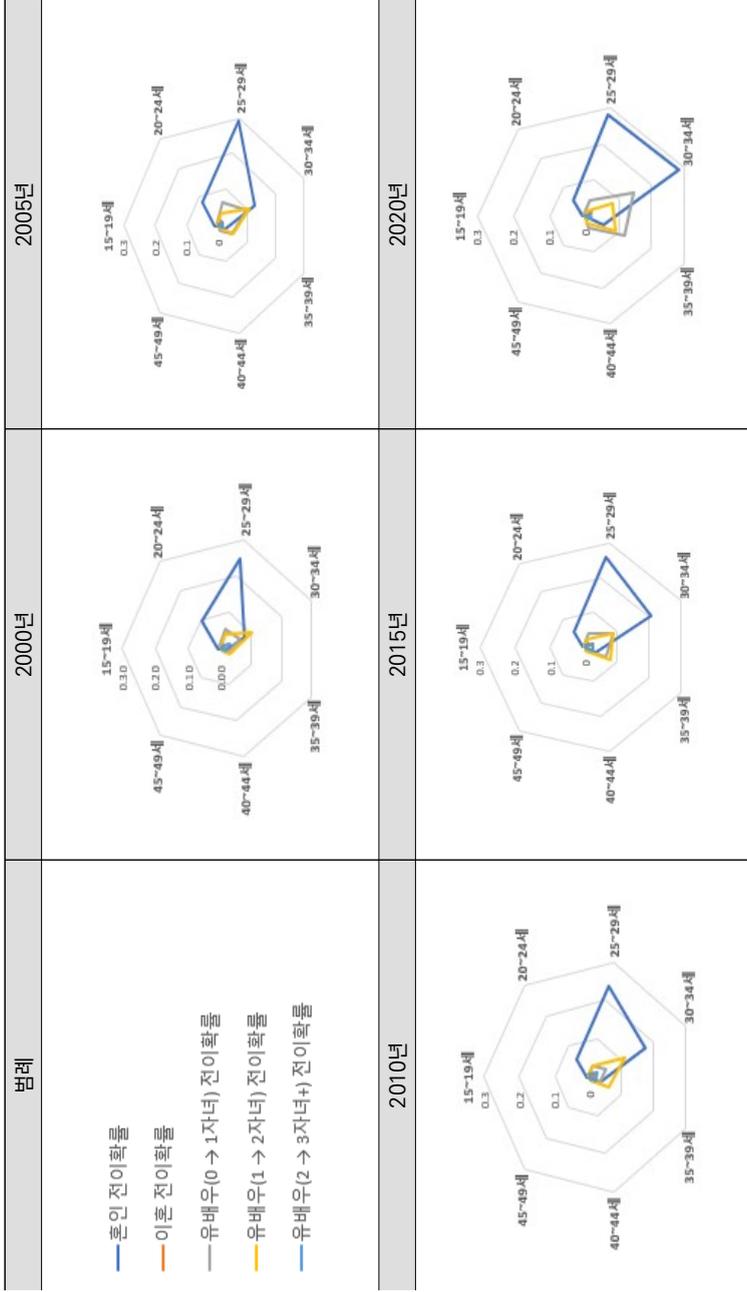
연령대	혼인	이혼	유배우 1자녀 (0→1 자녀)	유배우 2자녀 (1→2 자녀)	유배우 3자녀+ (2→3+ 자녀)
2020년					
15세~19세	0.0082	-0.0017	0.0010	0.0005	0.0000
20세~24세	0.0528	-0.0069	0.0073	0.0031	0.0006
25세~29세	0.2826	-0.0141	0.0453	0.0151	0.0024
30세~34세	0.2858	-0.0165	0.1444	0.0803	0.0113
35세~39세	0.0558	-0.0077	0.1191	0.0927	0.0154
40세~44세	0.0046	-0.0013	0.0345	0.0194	0.0040
45세~49세	0.0001	0.0000	0.0012	0.0004	0.0001
계	0.6901	-0.0483	0.3528	0.2115	0.0339

주: 1) 출산탄력성 값이 0.1 이상인 요인은 노란색으로 표시함.

2) “계”는 모든 연령대에서 해당 인구동태가 전이확률이 1% 올라갈 때, 합계출산율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냄.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1] 연도별·연령별 인구동태 출산탄력성 계수



출처: 연구진 작성

제3절 분해분석

1.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개념 소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은 두 시점 간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해, 개별 요인의 변화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분석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약 0.4명 감소하였다면, 그중 혼인 전이확률의 감소가 몇 %, 이혼 전이확률의 증가가 몇 % 기여했는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분해분석의 기본 원리는 특정 요인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상 합계출산율(counterfactual TFR)'을 계산한 뒤, 이를 실제 합계출산율과 비교하여 해당 요인의 기여도를 도출하는 것이다(식 4-5 참조). 예를 들어, 2015년의 혼인 전이확률이 2020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상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고, 이를 2020년 실제 합계출산율과 비교함으로써, 혼인 전이확률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동에 차지하는 기여분을 추정한다.

- 1단계: 시점 t 에서 요인 i 만 $t-1$ 수준으로 고정하고 나머지는 t 의 실제값을 쓰는 가상 TFR_i 산출: $TFR_i(t) = F(\theta_i(t-1), \theta_{-i}(t))$
- 2단계: 요인 i 의 수준 변화가 만들어낸 기여(수준기여) 산출: $C_i(\text{level}) = TFR_r(t) - TFR_i(t)$ (실제 합계출산율 TFR_r 에서 가상 합계출산율 TFR_i 뺀 값)
- 3단계: 실제 합계출산율 변화 산출: $\Delta TFR_r = TFR_r(t) - TFR_r(t-1)$
- 4단계: 기여분 $C_i(\%) = C_i(\text{level}) / \Delta TFR_r \times 100$ 식(4-5)

t : 시점, θ_i : 요인 전이확률, F : 전이확률을 통해 합계출산율(TFR) 산출 함수

분해분석은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나, 비교 연도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삼식 외(2005)에 따르면 1999년~2004년 합계출산율 감소에 유배우율 변화가 50.9%, 유배우 출산율 변화가 49.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2000년~2005년)를 분석한 이철희(2018)에 따르면 각각 77.7%, 11.6%로, 큰 차이를 보인다. 두 연구 모두 합계출산율 산출 및 분해분석 방법은 동일하지만, 비교연도 설정 차이로 인해 비슷한 시기여도 결과가 크게 차이났다.

또한, 분해분석은 각 요인의 ‘기여 비율’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절대 규모(수준 효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예컨대, 이철희(2023)는 1992년~2005년 유배우율(혼인)이 출생아 수 감소에 88.7%, 유배우 출산율이 14.3% 기여했고, 2012년~2021년에는 각각 48.2%, 40.6%를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를 혼인율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해분석은 전체 변화분(=100%)을 요인별로 나누는 상대적 분배이므로, 절대 규모 및 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혼인의 영향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분해분석은 특정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변화에 각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집단별(예: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또는 국가 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 모두에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였으나 A국의 하락폭이 크고 B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우, 출산율 감소 규모 자체가 상이하므로 분해분석 결과를 통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2절의 출산탄력성을 같이 분석하여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출산탄력성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

로 어느 연도를 기준연도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였다.

출산탄력성 분석은 연도별로 개별 인구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출산탄력성은 엄밀히 말해 출산율 ‘변화’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각 연도별 요인의 표준화된 영향 수준을 시점 간에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정책적으로 해석이 직관적이라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신 연도의 출산탄력성을 활용하면 현재 합계출산율이 어떤 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설계 시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정책 영역을 도출하고 정책 효과를 예측·극대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해분석과 출산탄력성 분석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표 4-6〉 출산탄력성 분석 및 분해분석 비교

구분	출산탄력성 분석	분해분석
기본 개념	개별 인구동태 요인이 1% 변화할 때 합계출산율(TFR)이 몇 %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직접적 영향력 지표	각 요인이 특정 기간 합계출산율 변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분해
분석 초점	연도별 요인의 영향력 수준	특정 기간 출산율 변화의 원인 규명
‘변화’ 측정 여부	변화의 기여도 자체를 측정하는 개념은 아님	변화의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측정
비교 가능성	요인별·연도별·국가 간 표준화된 비교 가능	집단별·국가별 비교 시 출산율 변화 폭이 다르면 직접 비교에 제약
해석 용이성	정책적으로 직관적이며 현재 출산율이 어떤 요인에 더 민감한지 파악 가능	과거 기간의 변화 원인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
정책 활용성	최신 연도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 정책 효과 사전 예측에 유리	과거 변화 설명에 적합
대표적 활용 예	“현재(또는 특정 연도) 합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000~2015년 출산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무엇인가?”

2. 분해분석 결과

분해분석은 2000년~2020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이후 (1) 2000년~2015년과 (2) 2015년~2020년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이전 시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가. 2000년~2020년 분해분석

먼저, 2000년~2020년 기간 합계출산율은 0.77명(전이확률 기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감소에 개별 인구동태 전이확률 변화가 기여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첫째, 2000년~2020년 혼인 전이확률 감소가 합계출산율 감소에 79.5%로 가장 크게 기여했다.

둘째, 이혼 전이확률의 증가¹⁰⁾가 합계출산율 감소에 0.6%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의 변화는 합계출산율 감소에 5.2% 기여했다. 그중에서도 첫째 자녀(0자녀→1자녀) 전이확률 감소가 5.2%로 가장 크게 기여했고, 이어 둘째 자녀(1자녀→2자녀) 전이확률 감소가 1.4% 기여했다. 한편, 셋째 자녀 이상(2자녀→3+자녀) 전이확률의 경우 오히려 해당 기간 증가하여 합계출산율 감소를 1.5%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2000년~2020년 합계출산율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10) <표 3-6>에서 여성 일반 이혼율은 2000년~2020년 감소했으나, 이는 15세 이상 여성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로, 이혼 전이확률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혼은 혼인한 유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나, 일반 이혼율의 산출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이태열, 2022).

혼인 전이확률의 감소로, 약 80%를 설명한다. 그다음으로는 유배우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로 약 5%, 둘째자녀 출산 전이확률이 약 1%, 이혼 전이확률이 약 0.6%로 나타난다.

〈표 4-7〉 2000년~2020년 합계출산율 분해분석

(단위: 명, %)

	2000년~2020년(합계출산율: ∇ 0.77명)		
	2000년 동태율 유지 시 가상 TFR	실제 TFR(0.78명)과의 차이	변화 기여분(%) ^{1),2)}
혼인 전이확률	1.39	-0.61	79.5
이혼 전이확률	0.79	-4.97e-3	0.6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 (합계)		-0.04	5.1
1자녀	0.82	-0.04	5.2
2자녀	0.79	-0.01	1.4
3자녀+	0.77	0.01	-1.5

주: 1)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그 합이 100% 되지 않음. 이철희 (2018) 합계출산율 분해분석에서도 기준연도에 따라 합계가 54%~94%임(p.19의 표1 참조).

2) 기여분 음수(-)는 해당 요인이 합계출산율 하락을 일부 상쇄하여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함.

출처: 연구진 작성

나. 2000년~2015년 vs 2015년~2020년 분해분석

다음은 2000년~2015년 그리고 2015년~2020년으로 나누어 해당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에 인구동태요인 변화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고, 2000년~2015년과 2015년~2020년을 비교하였다(〈표4-8〉, 그림 [4-12] 참조).

먼저, 2000년~2015년까지 합계출산율은 약 0.30명(전이확률 기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혼인 전이확률로, 2000년 대비 2015년 혼인 전이확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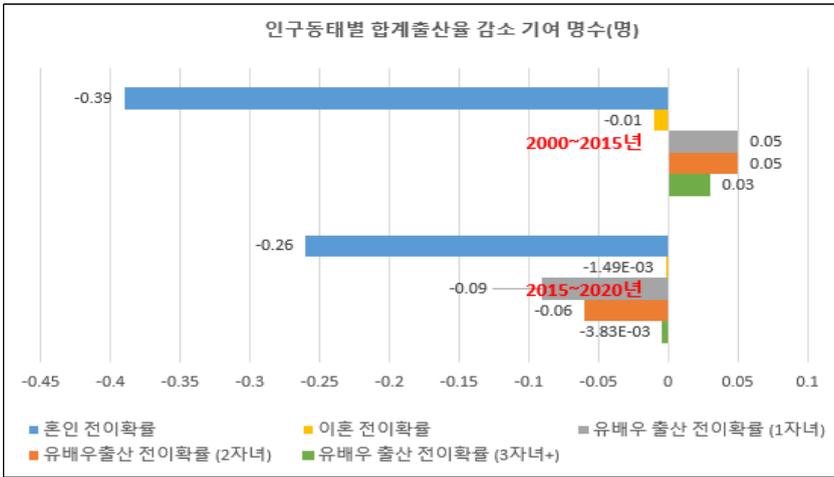
하락이 합계출산율 감소에 약 132.5%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만약 혼인 전이확률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면 합계출산율이 약 0.39명이 덜 감소했을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기간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은 증가하여, 혼인 전이확률 감소 효과를 약 43.6%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을 보면, 주 출산 연령대인 30세~34세의 전이확률은 오히려 2000년보다 2015년에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도 2000년 대비 2015년의 유배우 출산율이 뚜렷하게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13> 참조). 즉, 해당 기간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의 증가는 혼인 전이확률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 순위별로는 첫째(16.3%), 둘째(15.8%), 셋째(11.6%) 자녀 전이확률 순으로 상쇄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2015년~2020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약 0.47명(전이확률 기준) 감소하였다. 이는 앞선 2000년~2015년 기간(약 0.30명 감소)보다 훨씬 짧은 기간(5년) 동안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마찬가지로 혼인 전이확률로, 합계출산율 감소에 약 55.9% 기여했다. 이는, 만약 혼인 전이확률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면 합계출산율이 약 0.26명이 덜 감소했을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 기간 유배우 자녀 출산 전이확률 감소 역시 합계출산율 감소에 약 31.0% 기여하였다. 이는 만약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면 합계출산율이 약 0.15명이 덜 감소했을 것을 의미한다. <표 4-3>을 보면, 15세~19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주 출산연령대인 30세~34세의 전이확률의 경우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도 2015년 대비 2020년의 유배우 출산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13> 참조). 자녀 수별로는 첫째(18.8%), 둘째(11.6%), 셋째(0.8%) 자

녀 전이확률 순으로 하락 기여도가 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2015년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 기간 유배우 출산율은 오히려 상승하여 혼인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2020년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 감소가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에 더해 유배우 자녀출산율 하락 또한 합계출산율 감소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전 시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4-12] 2000년~2015년 vs 2015년~2020년 인구동태별 합계출산율 감소 기여(명수)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8〉 2000년~2015년 및 2015년~2020년 합계출산율 분해분석

(단위: 명, %)

	2000년~2015년(합계출산율: ▽0.30명)			2015년~2020년(합계출산율: ▽0.47명)		
	2000년 동태율 유지 시 가상 TFR	실제 TFR(1.25명)과의 차이	변화 기여분(%) ^{1),2}	2015년 동태율 유지 시 가상 TFR	실제 TFR(0.78명)과의 차이	변화 기여분(%) ^{1),2}
혼인 전이확률	1.65	-0.39	132.5	1.05	-0.26	55.9
이혼 전이확률	1.26	-0.01	2.2	0.78	-1.49e-3	0.3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합계)		0.13	-43.6		-0.15	31.3
1자녀	1.21	0.05	-16.3	0.87	-0.09	18.8
2자녀	1.21	0.05	-15.8	0.84	-0.06	11.6
3자녀+	1.22	0.03	-11.6	0.78	-3.83e-3	0.8

주: 1)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그 합이 100% 되지 않음. 이칠희(2018) 합계출산율 분해분석에서도 기준연도에 따라 기여 합계가 약 54%~94%로 100%에 미치지 못함.

2) 기여분 음수(-)는 해당 요인이 합계출산율 하락을 일부 상쇄하여 오히려 상승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함.
출처: 연구진 작성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Yip & Chen(2016) 전이확률 모델을 활용해 합계출산율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2020년 동안 5년 주기별로 주요 인구동태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출산탄력성 분석과 분해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혼인, 이혼,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유배우 출산율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으나, 이를 혼인과 이혼 그리고 자녀 수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분해분석만을 사용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출산탄력성과 분해분석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출산탄력성 분석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주요 인구동태 요인들의 영향력 추세에서 뚜렷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혼인 전이확률의 경우 모든 연도에서 합계출산율 결정에 그 영향력이 가장 컸으나,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에 그 영향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유배우 첫째 자녀(0→1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영향력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2020년 전이확률 탄력성 계수(영향력)는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둘째 자녀(1→2자녀) 출산 전이확률이 더 크거나 비슷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어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다. 한편, 출산 및 혼인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연령대별 영향력에도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전에는 25세~29세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면, 최근으로 올

수록 30세~34세 연령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에는 30세~34세 혼인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처음으로 25세~29세를 앞질러, 주 출산·혼인 연령대가 명확히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해분석 결과, 2000년~2015년 사이의 합계출산율 하락과 2015년~2020년 사이의 합계출산율 하락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2015년 사이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 전이확률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고, 해당 기간 유배우 출산율은 상승하여 오히려 혼인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2015년~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 하락의 경우 혼인 전이확률 감소(약 56%)가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유배우 자녀 출산율도 동시에 하락하여 합계출산율 하락에 상당 부분(약 3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출생순위별로는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감소가 가장 크게 기여(약 1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인이며,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5년 대비 2020년 유배우 출산율, 그중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영향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어, 과거 출산율 하락 양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이전에는 혼인이 줄어도 유배우 출산율이 높아 합계출산율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해주었다면, 2015년 이후에는 혼인율 하락과 유배우 출산율(특히 첫째 자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완충 장치가 소멸하게 되어 합계출산율이 급락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 혼인·출산 연령대가 2020년을 기점으로 25세~29세에서 30세~34세로 본격적으로 이동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띠며, 따라서 정책적으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 혼인 및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우선 순위에도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혼인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 청년 세대의 일자리 지원 등이 보다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자녀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의 지원 강화에 대해 고려가 더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 공제액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공제액이 확대되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또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에, 첫째 자녀 출산을 지원하고 초기 출산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확대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은 제5장 전문가 조사와 연계해서 제6장 결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인구동태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 5 장 인구동태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 조사

제5장에서는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인구동태 요인의 변화 원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1절 조사 개요

전문가 조사는 인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총 19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앞선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의 원인,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동태적 요인들이 급격히 하락한 배경, 그리고 향후 인구동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는 데 있다.

- 조사 대상: 인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19명
- 조사 방법: 이메일 서면조사
- 조사 기간: 2025년 9월 23일~2025년 9월 30일
- 조사 내용: 혼인 감소 요인, 출산 감소 요인,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급감 이유, 정책 방향(혼인·출산 이행 제약 완화 정책) 등

〈표 5-1〉 전문가 조사 패널 특성

구분	소속 기관	전공 분야
A	연구원	일가정 양립
B	대학교	인구, 사회계층
C	연구원	교육
D	대학교	가족(혼인, 출산 등)
E	연구원	노동, 일가정 양립
F	대학교	인구, 노동
G	연구원	노동
H	연구원	보육, 돌봄, 일가정 양립
I	연구원	돌봄, 가족
J	연구원	인구
K	대학교	인구
L	연구원	주거
M	연구원	인구
N	연구원	인구
O	대학교	인구
P	연구원	가족, 돌봄, 젠더
Q	연구원	일가정 양립, 돌봄, 젠더
R	연구원	일가정 양립
S	대학교	인구

제2절 조사 결과

1. 혼인 감소 원인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제4장 실증분석 결과, 혼인 전이확률의 하락이 합계출산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혼인을 감소의 원인과 그 구체

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먼저, <표 5-2>의 요인에 대해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좋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평균이 8.26점으로 혼인을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8.11점),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7.53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7.16점),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사·돌봄 노동 분담”(7.0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혼인 감소 요인 (10점 척도)

요인	평균
1.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의 부족 (청년층의 취업·취직의 어려움, 불안정 고용 증가 등)	8.26
2.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	8.11
3.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혼인의 필수성 인식 약화 및 동거 수용 증가 등)	7.53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휴직 사용 제약 및 경력복귀 어려움, 장시간 근로 등)	7.16
5.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사·돌봄 노동 분담 (여성의 독박 육아 등)	7.00
6. 경력(커리어) 구축을 우선시하는 성향 강화	6.84
7. 노동시장에서의 혼인·출산에 따른 성차별(경력단절 위험, 성별 임금격차, 채용·승진 시 차별 등)	6.79
8. 수도권 집중화 현상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강화로 인한 지방 성비 불균형 등)	6.63
9.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경제 불안 등)	6.58
10. 고학력화 (대학원 진입 등 교육 수준 증가)	5.89
11. 결혼비용 부담 (예식장, 혼수비 등)	5.05

주: 1점(전혀 영향 없음)~10점(매우 큰 영향)

가. 1순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의 부족”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1순위 요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좋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메커니즘을 전문가 심층 의견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정규직·비정규

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수준 및 고용 안정성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안정적 일자리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혼인이 지연되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즉,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혼인 결정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고 분석하였다. **☞ 노동 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혼인 이행 기간 장기화 및 포기 현상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혼인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판단됨.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결혼확률 격차가 1.65배에 달할 정도로 고용형태가 결혼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청년층의 취업시기 지연과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결혼 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결혼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함. 소득 불안정성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 기반 마련을 어렵게 만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제계획 수립이 어려워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됨.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확률이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43배 높은 것은 일자리 질이 혼인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전문가 R)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좋은일자리 부족 자체가 결혼 선택을 제한했다기보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좋은일자리 부족이 청년들의 학업 후 노동시장 이행 시기를 지연시킴. 여기에 더해 결혼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늦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비용 부담을 위해 결혼으로 이행하기까지 한참 동안 시간이 소요되게 됨.” (전문가 Q)

“안정적 일자리로의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예전 출생코호트보다 긴 편이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비중도 예전 코호트보다 적음. 이는 남성 및 여성 청년 모두 혼인 전 학교-노동시장 이행 및 안착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며 청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전문가 F)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 노동시장의 구조 하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혼인 및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높은 기회비용을 수반하고, 특히 여성들에게 혼인은 안정적 일자리로의 안착과 경력 형성에 부정적(결혼 패널티)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포기하거나 충분한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 연기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진단하였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특히 초기 청년 시기 혼인·출산 기회비용 상승시켜, 혼인 지연 효과 유발**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고, 안정적 고용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미래전망으로 인해 가족형성에 필요한 자원 축적이 어렵고, 결혼·출산·돌봄 등 삶의 선택에는 높은 기회비용 발생으로 인식하여 혼인 결정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됨.” (전문가 P)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로 일자리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 노동시장 초기-중기에 이르기까지의 경력형성 과정이 생애 일자리의 경로를 결정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 혼인은 일자리 안착 실패, 노동시장 상향 이동 저하 등 노동시장의 경쟁력 하락을 의미하게 됨.” (전문가 G)

또한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남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혼인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맞벌이의 보편화로 인해 배우자의 경제적 준비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남녀 모두에게 혼인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남성의 혼인 결정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층 전반의 혼인을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안정적 일자리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맞벌이 확산으로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의 안정적 일자리 혼인 주요 결정 요인으로 부상, 안정적 일자리의 중요성 과거보다 증가**

“현재는 단일 소득으로 가구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맞벌이가 사실상 보편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제적 준비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혼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양질의 일자리 제한은 안정적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혼인 감소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음.” (전문가 P)

나. 2순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지적한 요인은 “주택 가격의 상승 및 주거비 부담”이다.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 주택 마련은 결혼의 직접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특히 한국처럼 ‘결혼 시 주거 마련’을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문화에서는 주거비 상승에 따라 결혼 지연 및 포기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실제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주거비 상승과 혼인 간의 강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 한국처럼 ‘결혼 시 주거 마련’을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문화에서 주거비 상승은 혼인 이행 어려움 가중

“2015년 이후 급감하는 혼인건수 및 혼인율 추세와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추세의 시점과 양상이 매우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10년여간의 혼인건수 및 혼인율 급감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주택가격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전문가 E)

“한국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독립된 주거 마련이 문화적으로 강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주택가격 급등과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혼인 진입에 직접적 장벽이 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모 지원 없이는 주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혼인율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 K)

“주택가격과 혼인건수 간의 강한 역상관관계(-0.94)가 통계적으로 입증됨. 2008~2023

년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63.3% 상승하는 동안 혼인건수는 40.9% 감소함. 무주택 신흥부부 비중이 58.0%로 증가하고, 대출잔액 중앙값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 연령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는 주로 주거비 부담과 직결 됨."(전문가 R)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에서 주택(또는 주거 지위)은 사회계층을 상징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불안정한 주거 상태나 열악한 주거 환경은 혼인 이후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혼인을 미루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 주택을 사회적 계층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문화 속에서 안정적 주거 마련 전까지 혼인 지연 또는 포기 경향 강화**

“주택은 그 자체로 혼인생활의 시작을 의미하여 주택비용은 혼인 자체를 성사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요인. 더불어 계층 구분의 핵심 요소로 미래의 불안과 계층 재생산의 인식을 높임.” (전문가 M)

2. 출생 감소 원인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다음은 출생 감소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5-3〉 출생 감소 요인에 대해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평균이 8.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8.11점),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의 부족”(7.74점),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7.68점),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사·돌봄 노동 부담”(7.6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 출생 감소 요인 (10점 척도)

요인	평균
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력단절,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 장시간 근로 등)	8.37
2.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	8.11
3.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의 부족 (청년층의 취업·취직 어려움, 불안정 고용 증가 등)	7.74
4.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7.68
5.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사·돌봄 노동 부담 (여성의 독박 육아 등)	7.63
6.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 (교육비 포함)	7.37
7. 노동시장에서의 혼인·출산에 따른 성차별(경력단절 위험, 성별 임금격차, 채용·승진시 차별 등)	7.16
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경제 불안 등)	7.16
9. 경력(커리어) 구축을 우선시하는 성향 강화	6.89
10.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돌봄 기관(어린이집) 및 서비스(아이돌보미)의 부족	6.84
11. 수도권 집중화 현상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강화로 인한 지방 성비 불균형 등)	6.68
12. 혼외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보호 부족	5.68

주: 1점(전혀 영향 없음)~10점(매우 큰 영향)

가. 1순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1순위 요인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과거보다 크게 향상된 오늘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기회비용이 더욱 높아졌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 환경은 출산·육아와 경력 형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구조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출산·육아 포기 현상이 높아졌다고 진단하였다. **☞ 노동시장 내 여성의 위치 향상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 확대됨.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 환경은 양자택일 강요하는 구조**

“과거에 비해 (1)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 형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2)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출산 및 육아를 위해서는 맞벌이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환경은 출산·육아와 경력 형성 중 하나를 양자택일하게 하는 요인이며,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 출산으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소득활동 및 경력 형성을 계속할 때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을 커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오늘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매우 커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문가 E)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임금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 재취업에 있어서의 낙인효과 야기. 장시간 근로관행과 유연근무제 활용 제한으로 출산/양육기 노동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 G)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 자녀까지는 가족을 활용한다거나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며, 시간빈곤/정서적고갈 등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나, 두 자녀 이상을 맞벌이 하면서 양육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고되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두 자녀 이상 있는 경우,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 ‘외벌이’로 감당이 가능할 때 두 자녀를 출산하거나, 맞벌이를 유지하는 경우, 회사의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제도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양육을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에 의존하여 양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는 두 자녀를 출산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의 기회비용은 추가된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 비용+엄마가 직장을 잃거나 소득을 줄여야 하는 기회비용까지 가중된 상당히 높은 기회비용임을 인지해야 한다.” (전문가 Q)

또한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여건이 열악할수록 출산을 지연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결국 가임 가능 시기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충분한 경력이 쌓여 노동시장 내 위치가 탄탄하기 전까지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진단하였다.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울수**

특 안정적 경력 형성 전까지 출산 지연, 가임 가능 기간 단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실제 결혼하여 자녀 계획을 지연하게 되는 요인일 수 있음. 자녀 출산을 계획하였다더라도, 당장 일가정 양립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 출산을 지연하게 되고, 이는 생물학적으로 가임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것과 연결됨.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선택은 기혼 여성뿐 아니라 기혼 남성에게서도 확인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됨(청년들이 워라밸을 중요시하여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맥락).” (전문가 F)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일·가정 양립 제도는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 **현행 일가정 양립 제도 부족**

“점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유연한 근무 환경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행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정채하면서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S)

나. 2순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출생 감소 요인으로 중요하게 지적한 요인은 “주택 가격의 상승 및 주거비 부담”이다.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 주거비는 가계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주거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 관련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즉, 주거비 지출 증가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양육비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출산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하였다. ❖ **주거비 상승으로 가계 소비 여력 감소하고, 양육비 부담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출산 포기 현상 확대

“현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과 관련된 가계 부채로 인해 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첫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여도 하루빨리 맞벌이 상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자녀 이상의 선호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전문가 Q)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이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감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최근 15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63% 상승하는 동안 혼인건수는 40% 감소했으며,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 준비를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임. 주택 마련이 결혼 및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면서 높은 주거비가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함.” (전문가 R)

“생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이며, 교육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의 주거비가 비싸 혼인과 출산을 꺼리게 됨.” (전문가 H)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주택(특히 주거의 위치와 형태)은 사회계층을 반영하는 지표로, 불안정한 주거 및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회피하려는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출산 이후 자녀에게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불이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려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과 주거 위치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현상은 더 강하다. ▣ 주택을 사회적 계층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문화 속에서 안정적 주거 마련 전까지 출산 지연 또는 포기 경향

“주택은 그 자체로 혼인생활의 시작을 의미하여 주택비용은 혼인 자체를 성사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요인. 더불어 계층 구분의 핵심 요소로 미래의 불안과 계층 재생산의 인식을 높임.” (전문가 M)

3.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급격한 하락 이유 전문가 의견 조사

제4장 실증분석 결과,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에는 혼인 그리고 유배우 출산율(특히 첫째 자녀 출산) 하락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결과를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2015년 이후 어떠한 주요 사건 및 요인들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가지 이상의 요인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총 19명의 전문가 중 9명(47.3%)이 2015년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다음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가속화”와 “젠더 갈등 심화”를 각각 4명(21.1%)의 전문가가 지목하였다. 그리고 “청년세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사회 불안감 증가”, “SNS 이용 확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확대”, “가치관 변화” 등이 각각 3명(15.8%)의 전문가에 의해 언급되었다.

〈표 5-4〉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급락 원인 (중복 가능)

요인	응답
1. 부동산(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	9명 (47.3%)
2. 수도권 집중화 현상 가속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가속)	4명 (21.1%)
3. 젠더갈등 심화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2018년 미투 운동 등)	4명 (21.1%)
4.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로 인한 청년세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본격화	3명 (15.8%)
5. 사회 불안감 증가 (헬조선 담론 확산, 메르스 및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세월호 참사 등)	3명 (15.8%)
6. SNS 이용 확산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확대	3명 (15.8%)
7. MZ세대 가치관 변화	3명 (15.8%)
8.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	2명 (10.5%)

주: 개방형 질문으로, 연구진이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여 분류함.

가. 1순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가장 많은 전문가들(총 19명 중 9명)은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합계출산율의 급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실제로 〈표 5-5〉를 보면,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약 10년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2019년에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0.3%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듬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

〈표 5-5〉 연도별 주택매매가격 지수 (2021.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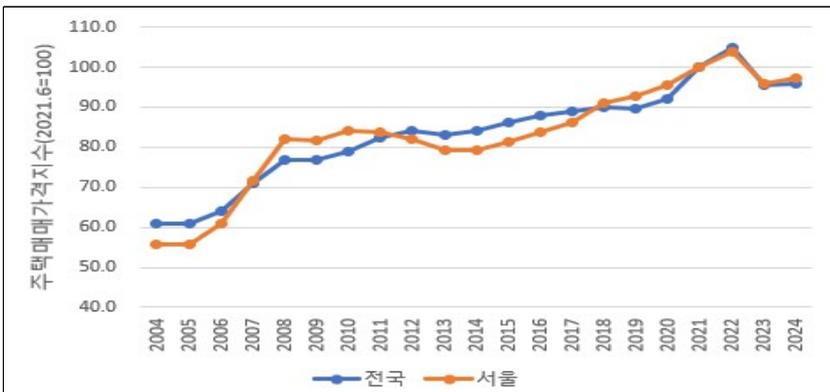
연도	전국		서울	
	주택매매가격 지수	전년대비 증감율	주택매매가격 지수	전년대비 증감율
2004	60.8	-	55.6	-
2005	60.8	0.0%	55.8	0.4%
2006	64.0	5.3%	60.8	9.0%
2007	71.0	10.9%	71.5	17.6%
2008	76.8	8.2%	82.1	14.8%
2009	76.7	-0.1%	81.7	-0.5%

116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연도	전국		서울	
	주택매매가격 지수	전년대비 증감율	주택매매가격 지수	전년대비 증감율
2010	78.9	2.9%	84.1	2.9%
2011	82.4	4.4%	83.9	-0.2%
2012	84.2	2.2%	82.1	-2.1%
2013	82.9	-1.5%	79.1	-3.7%
2014	84.0	1.3%	79.1	0.0%
2015	86.3	2.7%	81.3	2.8%
2016	87.8	1.7%	83.7	3.0%
2017	88.8	1.1%	86.3	3.1%
2018	90.1	1.5%	90.9	5.3%
2019	89.8	-0.3%	92.7	2.0%
2020	92.1	2.6%	95.4	2.9%
2021	100.0	8.6%	100	4.8%
2022	104.8	4.8%	103.7	3.7%
2023	95.6	-8.8%	95.7	-7.7%
2024	95.8	0.2%	97.1	1.5%

출처: 한국부동산원, 2025,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0에서 2025.11.02. 인출함.

[그림 5-1] 연도별 주택매매가격 지수 (2021.6=100)



출처: 한국부동산원, 2025,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0에서 2025.11.02. 인출함.

전문가 심층 의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경부터 ‘내 집 마련’에 대한 이른바 패닉 바잉(panic buying)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또한 증가¹¹⁾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 및 양육비 부담 여력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합계출산을 하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2015년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 확산 및 가계 부채 증가**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2017년부터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증과 내 집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패닉바잉이 나타나는 등 주거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크게 증가하였음. 결국 부동산 가격의 급증은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가족을 형성하거나 늘리는 (결혼, 출산) 선택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했다고 생각함. 앞서 지적한 여러 요인들(가치관 변화, 일자리 문제 등)도 물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당장 생활에 크게 와닿는 주거비의 문제가 직접적이었음.” (전문가 A)

“부동산 가격폭등(2016년 이후)으로 결혼에 있어 전제조건 중 하나인 주거 안정성 약화, 주거비 인상으로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함.” (전문가 G)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비중의 증가가 출산을 당장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 (전문가 Q)

특히,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특히 첫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적되었다.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주거 등 제반 환경을 새로 구축해야 하므

11) (2015년 가계 대출 전년 대비 약 11% 큰 폭으로 증가(출처: 한국은행, 2025, 통화금융 통계.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F0140>에서 2025.11.02. 인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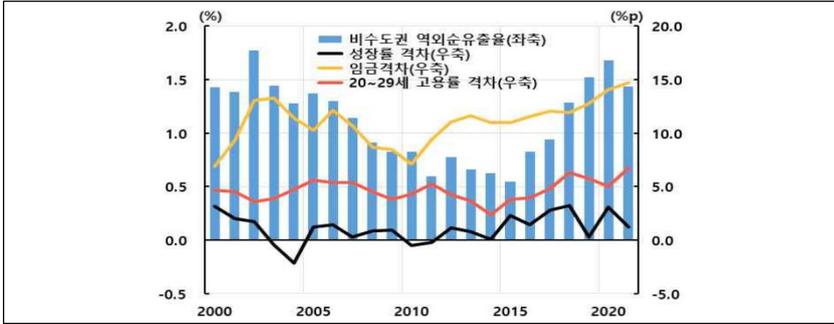
로 초기 비용 부담이 크지만,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이미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추가 양육비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특히 유배우 첫째 자녀 출산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은 주거 마련 등 초기 준비 비용이 많이 드는 첫째 자녀 출산에 특히 부정적 영향**

“첫째 자녀를 낳으려면 세 식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 및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적합한 환경 및 부모의 경제적 안정 등이 필요함. 첫째 자녀를 낳을 때 큰 비용이 드는 요소들을 갖추면 둘째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비용이 드는 양육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사립유치원비, 아이돌보미 비용 등만 부담됨. 혼인 부부가 수도권 집중 및 수도권 집값 상승, 저성장 등 미래의 경제적 상황을 낙관하지 못함으로써 주거 및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 → 첫째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전문가 H)

나. 공동 2순위: “수도권 집중화 현상”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다음으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급감의 공동 2위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꼽았다. 실제, 아래 [그림 5-2]를 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임금, 고용률, 성장률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 유출이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정민수 외, 2023).

[그림 5-2] 연도별 비수도권 순유출 및 수도권과의 격차



출처: 정민수 외(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2023-29, p.10.

전문가 심층 의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새롭게 뚜렷하게 관측된 변화는 수도권 집중 현상(특히 청년층)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교육 경쟁 등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이며, 2015년 이전에도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 및 경쟁을 경험한 시기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2015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강화된 현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OECD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 한국보다 더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한 국가들도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요인인 반면, 2015년 이후 새롭게 관측된 뚜렷한 변화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2015년 이후 어느 정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새로운 패턴을 보인 현상이 기존의 추세와 다르게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된 것임(특히 청년층). 비록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화가 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한국 사회가 그간 발전해 온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문가 J)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혼인율 및 출산율을 감소시켰다고 많이

지적되나 OECD 다른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한국보다 더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한 국가들도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문가 C)

전문가들은 2015년을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2차 벤처 붐이 형성되면서 여성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 여성의 수도권 진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방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중화학 공업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지방 여성 청년의 이탈률이 남성보다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의 혼인 및 출산 연령대 인구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여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지방 여성 청년 이탈률 남성보다 높음에 따라, 혼인·출산 연령 성비 불균형 이슈 발생**

“2015년을 전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2벤처 붐이 생겨나면서 여성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지면서 지방 여성의 수도권 진출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의 결혼과 출산을 낮추고 수도권의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전문가 S)

다. 공동 2순위: “젠더갈등 심화”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다음으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급감의 공동 2순위 요인으로는 “젠더 갈등의 심화”가 언급되었다.

전문가 심층 의견 결과, 2015년 이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2016년 5월), 4B 운동(2016년~2019년), 미투 운동(2018년)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성별 간 인식의 대립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젠더 갈등의 심화가 2015년 이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 2015년 이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 해당 시기 일련의 사건들 젠더 갈등 촉진·심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안티페미니즘의 강화 혹은 소위 말하는 청년층의 ‘젠더 갈등’ 심화 등이 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문가 B)

“2015~2016년은 한국사회 전반에서 여성주의 운동이 급부상한 시기임. 예컨대 2016년 10월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2018년 전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같은 해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지역별로 제시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킴. 이 두 사례 모두 2016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사회 전반의 성 격차 문제, 정책 담론에서의 여성 도구화·주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누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기점이 2016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전문가 P)

또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여성계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고,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6년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지역별로 제시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을 전후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행동과 사회적 담론이 본격화되었다 진단하였다. 이에, 이러한 정책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에코세대의 출산 연령 진입이나 코로나19 이후 템포 효과에 따른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지속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 2016년 전후로 정부 저출산 정책 여성을 출산의 도구화로 본다는 비판 본격화. 정책 메시지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 출산율 반등 어려움.

“2016년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지역별로 제시하면

서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킴. 여성 도구화·주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누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기점이 2016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정책의 주요 목표 ‘아이’, ‘출산’, ‘결혼’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정책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인구구조적 특성(예: 에코세대의 출산 연령 진입)이나 코로나19 이후 템포 효과에 따른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지속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전문가 P)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2015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연도임을 지적하였다. 2000년~2024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실제 2014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2014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1.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여, 2000년~2024년 기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국가데이터처, 2025q). 또한, 주 출산연령대인 30대 고용률(50.1%)을 살펴보면, 2015년에 처음으로 50%를 넘겼다(국가데이터처, 2025q). 이에, 2015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와 가정 내 불평등한 가사·돌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사회 및 정책 이슈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및 가정 내 성차별에 대한 논의 본격화

“2015년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변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결혼, 출산, 양육의 기회비용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S)

4. 혼인으로의 이행 지연·포기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다음은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혼인으로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하

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8.26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7.53점)과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7.53점)가 공동 2위로 나타났다. 이어서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7.47점), “성평등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적 지원”(7.37점) 순이었다.

〈표 5-6〉 혼인 이행 지연·포기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 중요도 (10점 척도)

요인	평균
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격차 완화)	8.26
2.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취업지원제도, 사업대출 지원 등)	7.53
3.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 주택 공급 확대	7.53
4.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7.47
5. 성평등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적 지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	7.37
6.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7.26
7.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강화	7.05
8.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성별근로공시제도 등)	6.68
9. 교육과 고용의 연계 강화 (교육훈련, 직업상담 등)	6.47
10. 혼인 세계 공제 확대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1주택 간주기간 확대 등)	5.79
11. 결혼준비 및 자금 지원 (결혼 지원금, 예식장 지원 등)	5.21

주: 1점(전혀 영향 없음)~10점(매우 큰 영향)

가. 1순위: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전문가들은 혼인으로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완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는 앞서 혼인을 감소의 주요 원인(〈표 5-2〉)으로 해당

요인이 가장 많이 지목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전문가 심층 의견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학업-일자리-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사건의 순차적 이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혼인과 출산을 지연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한국은 학업-일자리-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사건의 순차적 이행이 중요한 문화적 특성 존재,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는 혼인 지연**

“생애 사건의 순차적 이행이 주도적인 한국 사회에서 혼인과 관련한 제약은 대체로 교육이나 노동시장과 관련이 클 것으로 이해됨.” (전문가 J)

어예, 정책적으로 이러한 생애사적 순차 이행을 완화(탈표준화)하거나 이행의 제약을 해소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한다. 먼저, 완화(탈표준화)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자녀를 충분히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취업, 결혼, 출산의 시기나 순서가 유동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로, 공공 보육 서비스 및 아동 수당 확대 등이 해당된다. 스웨덴의 경우 청년세대가 가정을 쉽게 꾸릴 수 있도록 결혼자금 용자지원 등을 도입하고 있다(신영규 외, 2024). 둘째, 이행의 제약을 해소하는 정책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이 포함된다. **☞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학업-일자리-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이행 탈표준화 및 해소 중요**

“물론 노동시장을 통해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그 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역시 중요하고 이 두 영역이 균형 있게 형성되어야 함.” (전문가 A)

또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대기업(250명 이상) 일자리 비중은 14%(2021년 기준)로 굉장히 낮은데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혼인 및 가족 형성 기준이 소수의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약 15% 미만에 불과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인식)를 개선·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혼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혼인 문화 개선·전환 필요**

“우리 사회에서 고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혼인에 대한 기준이 소수의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맞추어져 있다고 판단됨. 이로 인하여 많은 청년 세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 혼인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D)

“우리나라 청년의 약 85%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15%만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및 처우 격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5%에 불과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가 S)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지위별 임금 및 복리후생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낮은 고용지위에 있더라도 높은 고용지위로 이동할 수 있는 상향 이동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

12) 여타 OECD 국가 대기업 비중은 미국 58%, 영국 46%, 스웨덴 44%, 독일 41%로 한국 보다 높음(고영선, 2024)

직-비정규직 간 격차 축소 및 상향 이동 기회 확대 필요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격차가 크고 좋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고용형태나 기업규모에 따른 고용지위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며, 낮은 고용지위라 하더라도 높은 고용지위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야 함.” (전문가 A)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형태의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에서는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를 제고하고 있다(강민정, 2024). 또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분배를 실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의 한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방식 및 정책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필요**

“계속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나누기의 형태로 가야 할 수도 있음. 실제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을 늘려나갔음(물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음). 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나누고, 주거, 교육 등 노동시장 외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수밖에 없음.”(전문가 A)

나. 공동 2순위: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전문가들은 혼인으로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이어, “청년세대

를 위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공동 2위)을 꼽았다. 이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맥을 같이 한다. 실제 전문가 심층 의견을 살펴봐도, 많은 의견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 심층 의견을 살펴보면, 학업-일자리-혼인-출산이라는 순차적 이행이 중요한 문화에서는 청년세대의 일자리 정책이 중요하고, 따라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한국 학업-일자리-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사건의 순차적 이행 문화 강화. 혼인 이행을 위해 이전 단계 청년 세대 일자리 정책 중요**

“생애 사건의 순차적 이행이 주도적인 한국 사회에서 혼인과 관련한 제약은 대체로 교육이나 노동시장과 관련이 클 것으로 이해됨.” (전문가 J)

“청년세대의 노동시장의 안정적 지위는 생애단계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 (전문가 F)

“혼인으로의 이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자리와 주거로 요약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일자리와 주거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면 일자리가 먼저라고 판단됨. 그 이유는 일단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전문가 D)

다. 공동 2순위: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 주택 공급 확대”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다음으로 공동 2순위로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 주택 공급 확대”가 선정되었다.

정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해 ① 공공주택 확대(7.53점) ② 주택 구입·전세 대출 지원 확대(7.26점) ③ 결혼 특별세액 공

제 지원 확대(5.79점) 등을 예고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이 중 전문가들은 특히, 공공주택 확대에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전문가 심층 의견 분석 결과, 많은 전문가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시 입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공공주택 계획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일자리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며, 수도권 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은 입지가 불리하거나 주거의 질(quality)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공공주택 확대 시 입지에 대한 부분 고려 중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따라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공공 주택 공급 확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공주택은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거의 퀄리티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입지와 퀄리티 등을 개선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S)

“주거 안정성은 한국 사회에서 혼인과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하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 부담은 청년층의 혼인 진입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전문가 K)

“1차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수도권에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지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전문가 E)

또한 추가 의견으로, 해당 정책은 사실혼에서 법적 혼인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 부부가 각각 1인 가구로 간주되어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

될 경우 혼인 신고를 할 유인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완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이 상승하면서, 현행 소득 기준 하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확대는 혼인 신고를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완화 고려할 필요 있음**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의 확대 정책은 사실혼에서 법적 혼인상태가 되는 걸림돌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일 가능성이 큼.” (전문가 F)

“입주자격 연령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커뮤니티 조성·주거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의 종합 주거 지원 패키지를 도입하면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됨.” (전문가 R)

5. 출생으로의 이행 지연·포기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다음은 출생으로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8.68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성 평등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 지원”(8.32점), “돌봄 및 보육 서비스 인프라 지원 확대”(8.11점),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7.79점),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순이었다.

상위 3개의 정책은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공통된 목표를 지닌다. 가정 내 성평등은 여성의 ‘독박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

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 확충은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도와준다. 한편, 4위와 5위는 주거 지원 관련 정책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앞서 출산 감소 요인 순위(〈표 5-3〉 참조)와 일맥상통한다. 전문가들은 출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을 꼽았다.

〈표 5-7〉 출생 이행 지연·포기 요인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 중요도 (10점 척도)

(단위: 점)

요인	평균
1.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8.68
2. 성 평등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 지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등)	8.32
3. 돌봄 및 보육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아이돌봄사업 등)	8.11
4.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7.79
5.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7.68
6. 교육 경쟁 완화 (공교육 신뢰 제고 등)	7.68
7.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 및 중소기업 격차 완화)	7.42
8.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7.05
9.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성별근로공시제도 도입 등)	6.89
10. 수도권 집중화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강화	6.79
11.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취업지원제도, 사업대출 지원 등)	6.74
12. 난임 치료 및 보조생식기술(ART) 지원 확대	6.68
13. 다양한 가족형태 및 아동(예: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6.63
14. 자녀 세제 공제 확대	6.58
15.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6.26

주: 1점(전혀 영향 없음)~10점(매우 큰 영향)

가. 1순위: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전문가들은 출산으로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을 해

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전문가 심층 의견에 따르면, 제2차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가 확대되면서, 여성도 경제활동의 주체로 자리 잡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서는 부모가 일하면서 일정 정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의 보장’이 출생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중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 오늘날 맞벌이 사회에서는 부모가 일하면서도 일정 정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보장” 출생의 중요한 전제 조건**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혼인의 선제조건이었다면, 출생의 선제조건은 엄마아빠가 자녀 돌봄과 직장이 병행될 수 있는 환경임.” (전문가 F)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돌봄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전문가 A)

이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시간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특히,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의 부모권을 보장하고 가정 내 돌봄 양성평등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남성의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제고 필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도 남녀 모두 돌봄과 가사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돌봄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그리고 이는 남성들에게 더 중요함.” (전문가 A)

“일가정 양립 여건이 확대되는 근무환경 그리고, 가정 내 돌봄의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적극적인 돌봄참여 장려가 필요함. 제도적 확대를 통한, 문화개선도 필수적임.” (전문가 F)

“육아 관련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념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를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전문가 E)

또한 전문가들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문화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3년 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0시간)보다 약 130시간 더 길다(OECD, 2023). 즉, 장시간 근로문화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며, 퇴근 후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시간 근로문화에 대한 개선 병행 필요**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 등 현행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에 대한 노력 절실하다고 판단한다.”(전문가 F)

나. 2순위: “성 평등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적 지원”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전문가들은 혼인으로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 2순위로 “성평등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적 지원”을 꼽았다.

전문가 심층 의견 분석 결과, McDonald(2013)에 따르면 (초)저출산은 가정 내 성평등과 사회(노동시장 및 제도) 내 성평등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즉, 직장 및 법 제도 등에서의 남녀 기회가 동등하더라

도 가사 및 돌봄의 역할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사회일수록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으로 저출산이 발생하며, 가정 내 성평등과 사회(노동시장 및 제도) 내 성평등 불일치가 심할수록 저출산이 심하다고 하였다. 2019년 한국 맞벌이 가구의 여성 평균 가사·돌봄 시간은 3시간 7분인데 반해, 남성은 그 1/3 수준인 54분으로 집계되어, 가정 내 성불평등이 크다(통계청, 2020). **저출산은 가정 내 성평등과 사회적 성평등 간 불균형에서 비롯. 두 영역 간 차이가 클수록 저출산 현상 심화**

〈표 5-8〉 2019년 맞벌이 가구 남녀 시간 사용

(단위: 시간: 분)

항목		맞벌이 남성	맞벌이 여성	격차
필수 시간	수면	7:54	7:53	0:01
	식사 및 간식	1:59	1:55	0:04
	기타 개인 유지	1:18	1:24	-0:06
의무 시간	일(구직활동 포함)	5:50	4:37	1:13
	학습	0:04	0:03	0:01
	가사돌봄	0:54	3:07	2:13
	이동	1:58	1:37	0:21
여가 시간	교제 및 참여	0:42	0:54	-0:12
	문화 및 관광	0:03	0:03	0:00
	미디어 이용	2:14	1:49	0:25
	스포츠 및 레포츠	0:30	0:18	0:12
	기타	0:34	0:20	0:14

출처: 통계청(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p.29에서 인용

“McDonald(2013)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 정도와 가정 밖의 성평등 차이만큼 출산율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음. 한국의 경우 노동 시장이나 교육 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으로 엄격하게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다고 판단됨.” (전문가 D)

그동안 가정 내 성평등은 상대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정책적으로 외면받아 왔다. 최근에 들어서, 배우자의 가사·양육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6+6 육아휴직제도 등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저조하다. 2023년 출생아 100명당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3.2%인데 반해 남성은 7.4%에 불과하다(국가데이터처, 2024). 이에 정책의 지원과 더불어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 ❖ **정책 지원과 더불어 문화 개선 중요**

"가정 내 돌봄의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적극적인 돌봄참여 장려가 필요함. 제도적 확대를 통한, 문화 개선도 필수적임." (전문가 F)

문화 개선에는 조직문화, 정책적 담론 등이 포함된다.

먼저,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한 임금격차, 승진 차별 등의 출산 패널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임금이 낮은 여성이 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선제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관리자패널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오히려 여성 근로자가 직장 내 급여, 승진, 인사고과에서 인식하는 성차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선 외, 2024).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승진목표제, 육아휴직기간의 승진 소요기간 산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직 내 성차별 관행과 문화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 **조직문화 측면에서 성차별 및 출산 패널티 관행 및 문화 해소 중요**

“여성이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위험, 임금격차, 승진 차별 등의 출산 패널티가 없도록 하는 정책 방향 필요함.” (전문가 N).

다음은 정부의 정책적 담론 개선 관련 전문가 의견이다. 한국 정책 담론에서의 여성의 도구화·주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누적되어 왔다. 2016년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지역별로 제시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시각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성은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성불평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국가가 여성을 인구 조절·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책에 강한 반감을 보여 왔다. 실제로 여성의 결혼·출산 의향은 남성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전문가는 여전히 저출생 정책 대부분은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직접 겪는 주체이자 정책 당사자인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아이’, ‘출산’, ‘결혼’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담론에서도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전환(예: 삶의 질 향상, 선택권 보장¹³⁾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책 담론에서도 여성의 출산 도구화 관점을 탈피하고, 삶의 질과 선택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여전히 저출생 정책 대부분은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직접 겪는 주체이자 정책 당사자인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정책의 주요 목표는 ‘아이’, ‘출산’, ‘결혼’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정책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인구구조적 특성(예: 에코세대의 출산 연령 진입)이나 코로나19 이후 템포 효과에 따른 일시적 상승을 제외하고는 구조적·지속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전문가 P)

13) 여기서 ‘선택권 보장’은 자녀를 갖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가 그 제약을 해소하여 출산 선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6. 다자녀 중심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다음은 보다 세부적으로 정부의 다자녀 중심 출생 및 양육지원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현재 우리 나라 출생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형 제도와 자녀 수 또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제도로 나누어진다. 아동수당¹⁴⁾, 부모급여¹⁵⁾, 가정양육수당제도¹⁶⁾는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들이다. 반면, 첫만남이용권, 자녀세액공제, 주택특별공급 등은 자녀 수 그리고 출생순위에 따라 급여 수준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은 대부분 출생 순위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책이 더 많다(〈표 5-9〉 참조).

하지만, 제 4장 실증 분석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2015년 대비 유배우 첫째 자녀 출산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둘째 자녀 출산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하고(그림 4-10) 참조), 무자녀 부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출생 및 양육지원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14)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지급)

15) 0세~1세 아동 현금 지급(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16) 가정 양육 만 24개월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대상 24~86개월 월 10만 원 현금 지급

〈표 5-9〉 정부 다자녀 자녀 지원 정책 현황

소관 부처	정책 구분	사업명	자녀 수	연령	기타	차등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인정지원(6개)	주택특별공급	두 자녀		태아·임양자 포함	경쟁 시 가점	
		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두 자녀		태아 포함 소득·자산 요건	경쟁 시 가점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지원	두 자녀	미성년	소득·자산 요건	금리 우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 자녀	미성년	태아 포함 소득·자산 요건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두 자녀		소득·자산 요건	금리 우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	두 자녀		소득·자산 요건	대출한도 상향	
		철도 운임 할인	두 자녀	25세 미만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두 자녀	막내 15세 이하			
		전기요금 감액	세 자녀				
		도시가스요금 할인	세 자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요금감면(8개)	지역난방비 경감	세 자녀				
		국립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두 자녀	막내 13세 미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세 자녀	19세 미만			
		문화시설 이용 요금 할인	두 자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지원(2개)	국가장학금	세 자녀		소득, 성적 요건 미준, 연령 요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세 자녀		소득, 학점 이수 요건 연령 요건		

소관 부처	정책 구분	사업명	자녀 수	연령	기타	차등 지원
기획재정부	세제 혜택(3개)	자녀 세액공제	두 자녀		임양자-위탁아 포함	공제액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세 자녀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두 자녀			감면 세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두 자녀			
보건복지부	육아 지원(3개)	찾민남 이용권	두 자녀			찾뎡아 200만 원 돌뎡아 이상 300만 원
		기저귀 지원 사업	두 자녀		소득 요건	
	연금(1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두 자녀		2008년 이후 돌뎡 이상 자녀 출산자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출처: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배혜원, 2025, 보건복지포럼 343, p.91.

전문가 조사 결과, “기타”의견이 44.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 주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27.78%로 많았다. 이어서 “현행처럼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 주는 방향 유지”가 22.22%, 그리고 “1자녀(외동)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첫째아에 추가 혜택 제공” 5.56%로 조사되었다.

〈표 5-10〉 다자녀 중심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	
항목	비율
① 현행처럼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 주는 방향 유지	22.22
②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 주는 방향으로 재설계: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급여액 및 포인트 혜택 제공 (예: 자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동일 첫만남 이용권 급여액 지급, 자녀 수별로 주거 지원 포인트 지급)	27.78
③ 1자녀(외동)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첫째아에 추가 혜택 제공 (예: 첫째아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더 많이 지급)	5.56
④ 기타	44.44
합계	100.00%

가. 1순위: “기타”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기타”의견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의견 분석 결과, ‘현행보다 첫째 자녀 출산 혜택 증대하되,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현행보다 첫째 자녀 출산 혜택 증대하되,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제일 많았음**

관련 세부 의견 및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첫째 자녀 출산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그에 따라 정책 방향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시되었다. 일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비금전적 지원(예, 주거 지원 등)은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와 동일하게 하되, 금전 지원의 경우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체감) 양육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현행 주거 지원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우대하거나 지원 자격 요건이 부여되는데, 자녀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금성 지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용이 증가하므로, 차등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비금전적 지원(예: 주거 지원 등)은 보편주의로 전환하되, 금전적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반영 차등 지원 유지**

“현금성 지원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다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배려할 필요가 있음. 다른 많은 국가도 현금 지원은 다자녀 가구에 차등 증액하는 사례가 많음.” (전문가 O)

“1자녀 가구도 주거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혜택의 정도를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 이유는, 1자녀 가구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추가 출산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임. 한편,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체감하는 양육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차등화하여 다자녀 가구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I)

반면, 이와 반대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금전적 지원은 자녀 복지의 평등성 관점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별을 두지 말되, 일·가정 균형과 같은 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현금성 지원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자녀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되, 일·가정 균형 지원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

록 ‘시간 빈곤’(time poverty)과 돌봄 부담이 누적되는 점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기간(예: 추가 6개월 등) 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금전적 지원은 복지 평등성 관점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폐지 하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돌봄 부담 누적 반영 차등 지원**

“기본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지원은 자녀의 복지 관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당 지급이 맞는 방향으로 보임. 하지만 고용안정/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이슈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다자녀 선택과 맞벌이 선택은 뗄 수 없는 선택이면서, 다자녀일 때 맞벌이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개인의 시간빈곤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차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가산한다거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가산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손실의 기회비용이 더 큼(소득손실 자체+자녀로 인한 비용증가).” (전문가 Q)

또한, 추가 의견으로는 자녀 수별 차등지원보다는 자녀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과 개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은 그 금액이 극적으로 크지 않는 이상, 1인당 수십만 원 수준의 지원 규모 확대만으로는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녀 수별 차등 지원의 실효성은 적다. 이에, 자녀 수별 차등 지원보다는 보편적 수당인 아동 수당 등의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연령을 상향조정하며, 생애주기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 **자녀 수별 차등지원보다는 자녀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자녀 수별 보너스 지급보다, 아동 연령대 확대 등 실제 필요에 기반한 지원 범위 확충이

보다 중요함. 다자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지, 혹은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설령 다자녀 인센티브를 도입하더라도 현금성 수당만이 아니라 세제 감면, 소득 상한 완화 등 다양한 지원 방식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수당을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극적으로 크지 않는 한(예: 일부 지자체의 1억 원 출산장려금과 같은 극단적 사례 제외), 수십만 원 수준의 지원은 실제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따라서 자녀별 차등 지급을 출산 장려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상식적으로도 출산은 개인과 가정의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선택이므로, 일부 금액 인상만으로 출산 여부가 좌우되기는 어려움.” (전문가 P)

나. 2순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 주는 방향으로 재설계”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기타” 다음으로, 27.78%의 전문가들은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관련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평등’ 및 ‘행복’에 기반한 아동의 기본권을 근거로 하였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정책의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 두어야 하며, 각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표이다. 다자녀 중심 정책은 경제 성장 또는 국가 유지라는 목적에서 출산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지극히 국가 중심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저출생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출생아 수 증가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목표)을 고려할 때,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지원체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즉,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다자녀 정책보다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국가**

는 모든 아동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자녀 정책보다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재설계 필요

“자녀마다 각각 혜택이 있다면 1자녀건 2자녀건 그 이상이건 그 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함. 가족 단위에서 구성원 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동 각각을 잘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임. 둘째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지극히 국가중심적 관점임.” (전문가 A)

“저출산 정책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웰빙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됨.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증대될 때 비로소 출산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보여짐. 이렇게 볼 때 현행처럼 다자녀 가구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보다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전문가 D)

다. 3순위: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 주는 방향 유지” 관련 전문가 심층 의견

한편, 3순위로는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 주는 방향 유지”가 22.22%로 2순위(27.78%)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전문가 심층 의견 분석 결과, 대다수의 이유는 다자녀 가구는 한자녀 가구보다 더 많은 양육비용 및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 지원을 출생순위별로 차등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자녀 가구는 한자녀 가구보다 더 많은 양육비용 및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에,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원 유지

“다자녀 지원 자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한정된 소득을 고려할 때 자녀 증가에 따

라 자녀 양육 이외 가처분소득 규모가 크게 감소함.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하는 원칙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M)

“다자녀 가구는 한자녀 가구보다 더 높은 양육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이 큰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다자녀를 유도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입니다.” (전문가 S)

또한, 부가 의견에 따르면 기혼 무자녀 부부의 경우 출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반면, 이미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비교적 자녀에 대한 선호도가 큰 집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다자녀 가구를 보다 세밀하게 분리하여 지금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기혼 무자녀 집단의 경우 자녀 선호도 낮은 반면, 이미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선호도 더 높을 가능성 존재.** 즉, 유자녀 가구의 정책 민감도 더 높다는 점을 고려 차등 지원 유지

“기혼 무자녀 부부는 출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거나 기회비용이 큰 가구일 것이므로, [표 2]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부가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는 접근은 혜택(정책의 비용) 대비 출산을 제고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집단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은 일-가정 양립, 부동산 정책, 교육개혁 등 구조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이미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비교적 출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거나 출산의 기회비용이 작은 가구일 것이므로, 이 집단이 [표 2]와 같은 금전적 지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E)

또한 기타 의견으로, 향후 무자녀 비중의 증가는 가치관 변화로 불가피하게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유럽의 사례를 보면 무자녀 여성 비율은

15%~30% 수준(국가에 따라 편차 존재)으로, 한국보다 높음에도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둘째, 셋째, 넷째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출산율이 보완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둘째 자녀를 둔 가정과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동일하게 간주함으로써,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양육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자녀 지원을 현행보다 더 확대하고, 둘째 자녀와 셋째 이상 자녀를 구분하고,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질적·양적 부담 차이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가치관의 변화로 무자녀 비중 증가 불가피. 유럽의 경우 무자녀 비중 한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높음. 자녀 수별 차등 지원 유지하고, 자녀 수 증가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지원체계 필요**

“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혼·비혼 인구뿐 아니라 생애 무자녀로 남는 여성의 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면 생애 무자녀 여성 비율은 대체로 15~30% 수준에 이르며 국가별 편차가 크다. 현재 한국의 무자녀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지만,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첫째아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는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당수 여성들이 둘째, 셋째, 넷째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출산율이 보완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사회는 둘째아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여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식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는 둘째 자녀를 둔 가정과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동일하게 간주함으로써,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양육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 가정을 구분하고, 자녀 수에 따른 질적·양적 부담 차이를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원치 않는 여성을 출산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이미 자녀를 둔 가정이 추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차등화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출산율 개선을 위한 보다 전략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전문가 K)

〈표 5-11〉 전분기 조사 주요 결과 요약

문항	결과 ¹⁾	1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2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p>1. 혼인 감소 요인</p> <p>(순위)</p> <p>1순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 부족 (8.26점)</p> <p>2순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8.11점)</p> <p>3순위: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7.53점)</p> <p>4순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7.16점)</p> <p>5순위: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사돌봄 노동 부담 (7.00점)</p> <p>※ 10점 척도(1점: 전혀 영향 없음~10점: 매우 큰 영향)</p>	<p>• 노동시장 이중 구조 → 안정적 일자리 확보까지 상당 기간 소요 → 혼인 지연 및 포기</p> <p>• 노동시장 이중 구조 → 초기 청년 시기 혼인·출산으로 경력 중단 기회비용 상승 → 혼인 지연</p> <p>• 맞벌이 확산 →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의 안정적 일자리 혼인 결정의 주요 요인 → 안정적 일자리 중요성 과거보다 커짐</p>	<p>• 노동시장 내 여성의 위치 향상 → 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 상승 → 일가정 양립 어려운 근로 환경 양자택일 강요 → 출산 포기</p> <p>• 일가정 양립 어려운 근로 환경 → 안정적 경력·형성 전까지 출산 미룸 → 가임 기간 단축</p>	<p>• 한국 결혼 시 주거 마련을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문화 존재 → 주거 혼인비용에서 큰 비중 차지 → 주거비 상승 → 주거비 마련까지 혼인 지연 및 포기</p> <p>• 주택을 사회적 계층으로 인식하는 문화 존재 → 안정적이고 좋은 주거 마련까지 혼인 지연 및 포기</p>
<p>2. 출생 감소 요인</p> <p>(순위)</p> <p>1순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8.37점)</p> <p>2순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8.11점)</p> <p>3순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 부족 (7.74점)</p> <p>4순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7.68점)</p> <p>5순위: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사돌봄 노동 부담 (7.37점)</p> <p>※ 10점 척도(1점: 전혀 영향 없음~10점: 매우 큰 영향)</p>	<p>• 노동시장 내 여성의 위치 향상 → 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 상승 → 일가정 양립 어려운 근로 환경 양자택일 강요 → 출산 포기</p> <p>• 일가정 양립 어려운 근로 환경 → 안정적 경력·형성 전까지 출산 미룸 → 가임 기간 단축</p>	<p>• 주택비 상승 → 주택 관련 부채 증가 → 가계 소비 여력 감소 → 양육비 부담 여력 감소 → 출산 감소</p> <p>• 주택을 사회적 계층으로 인식하는 문화 존재 → 자녀에 대해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물려줄 기피 → 안정적이고 좋은 주거 마련까지 출산 지연 및 포기</p>	<p>• 주택비 상승 → 주택 관련 부채 증가 → 가계 소비 여력 감소 → 양육비 부담 여력 감소 → 출산 감소</p> <p>• 주택을 사회적 계층으로 인식하는 문화 존재 → 자녀에 대해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물려줄 기피 → 안정적이고 좋은 주거 마련까지 출산 지연 및 포기</p>

문항	결과 ¹⁾	1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2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p>3. 2015년 이후 합계 출산율 급감 이유</p>	<p>(순위) 1순위(부동산(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 (47.3%) 2순위(공통): 수도권 집중화 심화 (21.1%) 3순위(공통):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로 청년세대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 본격화 (15.8%) 3순위(공통): 사회 불안감 증가 (헬조선 담론, 세월호 참사,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 (15.8%) 3순위(공통): SNS 이용 확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확대 (15.8%) 3순위(공통): MZ세대 가치관 변화 (15.8%) ※ 중복 응답 가능</p>	<p>• 현행 일가정 양립 제도 부족 → 출산 포기 및 지연</p> <p>•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부동산 가격 약 10년간 계속 상승 → '내 집 마련' 패닉 바잉 시작 → 주거 불안 확대</p> <p>• 2014년 이후 부동산 가격 계속 상승 → 가계 부채 증가 (주택담보 대출 등) → 가계 소비 여력 감소 및 양육비 부담 여력 감소 → 출산 감소</p> <p>• 2014년 이후 부동산 가격 계속 상승 → 주거 등 초기 준비 비용이 많이 드는 첫째 자녀 출산에 특히 부정적 → 첫째 출산율 감소</p>	<p>(수도권 집중화)</p> <p>• 2015년 이후 새롭게 뚜렷하게 발견된 현상은 수도권 집중화</p> <p>• 지방 제조업 및 중화학 공업 노동시장 중심 → 여성 일자리 부족 → 여성 청년 이탈률 높음 → 지방 혼인·출산 연령 대 성비 불균형 문제 발생 (젠더갈등)</p> <p>•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2016년), 4B 운동(2016~2019년), 미투 운동(2018년) 일련의 사건 발생 → 젠더 갈등 확산 심화</p> <p>• 2016년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지역별로 제시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논란 → 정부 의 저출산 정책이 여성을 출</p>

문항	결과 ¹⁾	1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2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p>4. 혼인 지연·포기 요인 해소 정책</p> <p>(순위) 1순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정책 (8.26점) 2순위(공동):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정책 (7.53점) 2순위(공동):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 주택 확대 (7.53점) 3순위: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7.47점) 4순위: 성 평등한 맞벌이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적 지원 (7.37점)</p> <p>※ 10점 최고(1점: 전혀 영향 없음~10점: 매우 큰 영향)</p>		<p>• 한국 [학업-일자리-혼인-출산] 순차적 이행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 안정적 일자리 얻기 전까지 혼인 지연</p> <p>• 생애사적 순차 이행을 ①원화(탈표준화) 및 ②이행의 제약 해소해주는 정책 중요함. - ①원화 정책: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자녀를 충분히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구축(예: 아동수당 확대 등) - ②이행의 제약 해소 정책: [일자리-혼인]의 이행 제약 해소시켜주는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p>	<p>신의 도구로 보고, 저출산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비판 → 관련 사회적 담론 본격화</p> <p>• 2015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급격하게 증가 → 맞벌이 가구 증가 → 노동시장 및 가정 내 성차별 및 성 불평등에 대한 논의 본격화</p> <p>(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정책)</p> <p>• [학업-일자리-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사건의 순차적 이행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혼인으로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중요</p> <p>(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확대)</p> <p>• 임지에 대한 고려 중요함.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 확대 필요</p> <p>•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는 사실혼에서 법적 혼인신고 유도 효과 → 맞벌이</p>

문항	결과 ¹⁾	1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2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p>5. 출생 지연·포기 요 인 해소 정책 관련</p>	<p>(순위) 1순위: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8.68점) 2순위: 성 평등한 맞벌부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 지원 (8.32점) 3순위: 돌봄 및 보육 서비스 및 인프라 지원 확대 (8.11점) 4순위: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7.79점) 5순위(공동):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공공 주택 공급 확대 (7.68점) 5순위(공동): 교육 경쟁 완화 (공교육 신뢰 제고 등) (7.68점) ※ 10점 척도(1점: 전혀 영향 없음~10점: 매우 큰 영향)</p>	<p>격차를 축소, 상향 이동 기회 확대 등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임 수준의 임금과 고용 안전성을 혼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혼인 문화 존재 → 문화 개선·전환 필요 •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 현실적으로 한계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방식 고려 필요 (예: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등) 	<p>부부의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 증가함에 따라 정책효과 높이기 위해서 소득기준 완화 고려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가정 내 성평등과 사회적 성평등 간의 불균형에 서 비롯 →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으나, 가정 내 성 불평등 여전히 높음 • 정책 지원과 더불어 문화 개선 중요 • (조직원화 개인)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한 임금격차, 승진 차별 등 출산 패널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 →

문항	결과 ¹⁾	1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2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p>6. 다자녀 출생 및 양육 지원 중심의 정책의 타당성</p>	<p>(순위) 1순위: 기타 (44.44%) 2순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 주는 방향으로 재설계 (27.78%) 3순위: 현행처럼 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추가 혜택 주는 방향 유지 (22.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의견”으로는 ‘차별 출산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음 • 구체적 방안과 관련 일부는, 	<p>가정 입장에서는 임금이 높은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 합리적 → 여성의 경력 단절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 → 이에,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선제적으로 필요 → 양성평등채용부채제, 여성관리자승진목표제 등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성차별 관행 및 문화 개선 중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담론) 정책 담론에서도 여성을 출산의 도구화로 보는 관점 탈피하고, 삶의 질과 선택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정책의 단위는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 두어야 함 → 다자녀 중심 정책은 경제 성장 또는 국가 유지라는 목적에서 출산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지극히 국가 중심적 접근에 대한 비판

문항	결과 ¹⁾	1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2순위 관련 심층 의견 (주요 메커니즘 및 내용)
	<p>4순위: 1자녀(외동)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예: 첫째아 출산 시 혜택 더 제공) (5.56%)</p>	<p>비금전적 지원(예: 주거 지원 등)은 보편주의로 전환하되, 금전적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반영 차등 지원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대 의견으로는, 금전적 지원은 복지 평등성 관점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 폐지 하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돌봄 부담 누적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가산 기간 제공 등) 이외 의견으로는, 자녀 수별 차등지원보다는 자녀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등' 및 '행복'에 기반한 아동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혜택 주는 것 타당

주: ¹⁾ 지면의 한계상 상위 5개까지만 제시함.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인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혼인 및 출산 감소 원인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이소영 외, 2019; 이윤경 외, 2020; 김은정,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는 많았으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연구(이소영 외, 2019; 이철희 외, 2023)는 매우 드물다. 본 전문가 조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혼인 및 출산 하락의 요인과 그 메커니즘, 그리고 향후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결과¹⁷⁾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율 하락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 좋은 일자리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가 심층 분석에 따르면, 한국처럼 [학업→일자리→혼인→출산]의 생애사건적 순차적 이행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전까지 혼인을 지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또한,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안정적 일자리는 비단 남자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혼인의 주요 조건으로, 안정적 일자리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혼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문화가 존재하여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화시켰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혼인 지연·포기 해소 정책으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학업→일자리→혼인→출산]의 생애사건적 순차적 이행을 ①완화(탈효준화) 및 ②이행의 제약을 해소시켜주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①완화(탈효준화) 정

17) 전문가 조사 주요 결과 요약은 <표 5-11>을 참조해주길 바람.

책은 좋은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자녀를 충분히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정책으로, 아동수당 확대,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 등이 해당된다. 즉, 취업, 결혼, 출산의 시기나 순서가 유동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②이행의 제약을 해소시켜주는 정책은 [일자리→혼인]으로의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상향 이동의 기회(일정기간 근무시 정규직 전환 의무화 및 관련 제도 개선)를 확대하는 정책이 해당된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한다. 독일 및 네덜란드의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제도가 좋은 사례이다.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제도는 일·가정 균형을 촉진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평가된다(OECD, 2017).

셋째, 출산율 하락과 관련한 전문가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된 요인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었다. 전문가 심층 분석에 따르면, 노동시장 내 여성의 위치가 향상됨에 따라, 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이 상승하였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 환경은 여성에게 커리어와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구조라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출산 지연·포기 해소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꼽았다. 오늘날 맞벌이 사회에서는 부모가 일하면서도 일정 정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보장’이 출산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 제도뿐 아니라, 장시간 근로 문화 및 관행에 대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8년 연속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실증 분석 결과 동기간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특히 첫째 자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이러한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약 10년간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¹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 2025). 전문가 심층 의견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주택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를 자극, 이른바 ‘패닉 바이킹(panic buying)’을 촉진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 담보대출 등 가계 부채를 증가시켜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고, 자녀 양육비 부담 여력을 감소시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첫째 출산에 특히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주거 등 새로 생활 기반을 구축해야 하므로 초기 준비 비용 부담이 둘째 자녀 출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실증분석 결과 유배우 출산율, 그중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의 영향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은 출생 순위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다자녀 중심이다. 이에,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기타”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첫째 출산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 의견 심층 분석 결과,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마다

18) 2019년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0.3%로 일시적 하락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서울은 전 기간 동안 하락 없이 상승함.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는 주거 등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비금전적 지원(예: 주거 지원 등)은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되, 금전적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반영해 차등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금전적 지원은 복지 평등적 관점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돌봄 부담 누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자녀 수에 따라 가산 기간 제공 등)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외 의견으로는, 자녀 수별로 차등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자녀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연령별 돌봄·교육비 부담의 차이를 반영한 연령별 차등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전문가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혼인 및 출산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혼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출산), 부동산 가격(2015년 이후 출산율 하락)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그리고 이외에도 젠더갈등 및 성차별,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을 꼽았다. 따라서, 저출생 정책은 노동, 주거, 젠더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향후 정부의 출생 및 양육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다자녀 차등지원 체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으나, 전문가마다 어떤 정책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보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따라서, 어떤 영역을 보편주의로 확대하고, 어떤 영역은 차등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자녀 차등 지원 정책이 출산을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가 중심적 정책으로, 오늘날 '평등'과 '행복'에 기반한 아동의 기본권에 저촉된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관련 법적·가치관적 논쟁들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제2절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 6 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는 (1) 2000년~2020년 혼인, 이혼, 유배우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2) 전문가 조사를 통해 혼인 및 출산율 감소의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 합계출산율 하락 양상은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출산탄력성 분석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인인데, 특히 2015년 대비 2020년 그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유배우 첫째 자녀 출산 전이확률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해분석 결과, 2000년~2015년 사이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으나, 해당 기간 유배우 출산율은 상승하여 혼인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2020년 사이 합계출산율 하락은 혼인율 하락과 유배우 출산율(특히 첫째 자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완충장치가 소멸하게 되어 급락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혼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좋은 일자리 부족”,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꼽았다. 실제로 해당 기간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약 10년간 주택가격이 연속적으로 상승하여 주거

불안 및 '패닉바이잉(panic buying)'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빈, 2024). 그리고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특히 첫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한다. 왜냐하면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주거 등 새로 생활 기반을 구축해야 하므로, 초기 준비 비용 부담이 둘째 자녀 출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자녀 출생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전문가가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다자녀 차등지원 체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는 비금전적 지원(예: 주거 지원 등)은 보편주의로 확대·전환하되, 금전적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금전적 지원은 복지 평등적 관점에서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을 폐지하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돌봄 부담 누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 수별 차등지원보다는 자녀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급여 유형별 차등지원 및 보편화의 적정 범위에 대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자녀 정책이 '평등'과 '행복'에 기반한 아동의 기본권에 저촉된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법적·가치관적 논쟁들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출산 경로를 동태적으로 분석, 혼인, 이혼, 자녀 수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2000년~2020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유배우율(전체 여성 인구 중 유배우 여성 비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오진호, 2019; 이삼식 외, 2005; 이철희, 2018), 혼인과 이혼, 그리고 자녀 수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가 크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출산탄력성과 분해분석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개별 인구동태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오진호, 2019; 이삼식 외, 2005; 이철희, 2018)들은 대부분 분해분석만을 사용하여 개별 인구동태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분해분석은 첫째, 비교 연도 설정에 따라 그 결과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분해분석은 전체 변화분(=100%)을 인구동태 요인별로 상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요인의 절대적 기여도가 아니라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한다. 때문에, 혼인의 실제 영향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인의 기여도가 상승하면 혼인의 영향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탄력성 분석을 병행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였다. 출산탄력성 분석은 연도별로 개별 인구동태 요인이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표준화된 회귀분석과 동일한 의

미를 가진다. 따라서, 요인별, 연도별로 영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신 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어떤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정책 설계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동안 담론적 수준에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에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은 많았으나, 이를 실증자료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2000년~2020년 합계출산율을 분석하여, 2015년의 합계출산율 하락의 인구학적 요인 변화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넷째, 본 연구는 전문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혼인 및 출산 하락, 그리고 2015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이소영 외, 2019; 이윤경 외, 2020; 김은정,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는 많았으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연구(이소영 외, 2019; 이철희 외 2023)는 매우 드물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혼인 및 출산 하락의 요인과 그 메커니즘, 그리고 향후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한국에서 합계출산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혼인이다. 한국의 경우 혼외 출산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혼인과 출산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정부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혼인으로 이행을 지연 및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해소해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본 전문가 조사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혼인의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만 19세~49세 전국민 대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조사”에서 저출산 완화 정책의 우선순위로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못하는 원인 해소(경제적 불안정, 주거 마련)”를 가장 많이 뽑은 것보다도 일맥상통한다(김은정, 2024).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20대~30대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18년에는 74.2%였으나, 2024년 68.8%로 감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 2025r).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인데, 2021년 한국 비정규직 비율은 28.3%로 OECD 평균(11.8%)의 2배를 상회하고, 대기업 일자리 비중(250명 이상)도 약 14%로 미국(58%), 영국(46%), 스웨덴(44%), 독일(41%) 등 주요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영선, 2024).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구조¹⁹⁾와 연결되어 그 해법이 매우 어렵고 저출생 정책 측면에서 다루기도 어렵다(이성희 외, 2022).

이에 대안적으로 저출생 정책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가 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학업→일자리→혼인→출산]의 생애사건적 순차적 이행을 완화(탈표준화) 해주는 것이다. 즉,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

19) 전병유 외(2018)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공정한 시장규칙 정착, 둘째,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경직성 완화하는 임금·근로 시스템 구축, 셋째, 저임금·비정규직 근로 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해야 한다고 함.

했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자녀를 충분히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다. 아동수당,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 등이 해당된다. 즉, 취업, 결혼, 출산의 시기나 순서가 유동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형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독일 및 네덜란드의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제도가 좋은 사례이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합의한 ‘바세나르 협약’을 계기로 시간제 고용이 빠르게 확산됐다. 당시 협약 내용은 네덜란드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 인상 억제’와 ‘일자리 재분배’였다(박상은, 2024). 그리고, 1996년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 등을 금지하는 ‘동등대우법’을 제정했고, 2000년에는 근로자의 시간 조정 권한을 인정하는 ‘근로시간조정법’이 도입됐다(박상은, 2024).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제도는 일·가정 균형을 촉진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평가된다(OECD, 2017). 따라서, 향후 해외 심층 사례연구 등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첫째 자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되어, 출산 진입의 시작과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주택 공급과 주택 자금을 대한 대출 지원으로 나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2월 발행 예정). 대상별로는 2006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이후 2008년 신혼부부, 2016년 청년²⁰⁾으

20) 청년에 대한 지원은 2011년부터 있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3차부터이며 2016년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시작됨.

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계속해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의 경우 2020년 주택 매입·전세 대출 지원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2023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신혼부부의 경우 당초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유자녀가 대상이었으나 2010년 임신 중까지 확대, 2016년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였으며 2018년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2월 발행 예정).

주거 지원 정책 평가 및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 규모는 양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되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2월 발행 예정), 2023년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5.9배,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8.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4). 또한,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경우 입지가 중요한데, 수도권 지역의 신혼부부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충분성에 대한 평가도 지역별로 엇갈린다. 둘째, 신혼부부 주택 자금지원 정책의 경우, 2023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지원제도에서 대상 주택가격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 5백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이는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총 40만 가구, 연간 약 8만 가구 수준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이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시장 상황과 정책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2월 발행 예정). 따라서, 제도 개선의 영역은 여전히 높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50.3%)’, ‘전세자금 대출지원(29.0%)’,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5.7%)’ 순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4). 즉, 공공주택보다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하기에, 그보다는 대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사실혼 관계의 법적 혼인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가구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자녀 출생 및 양육 지원 정부 정책은 다자녀 중심으로 설계되었다(〈표 5-9〉 참조). 중앙정부의 다자녀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9년부터 한 해 동안 9건의 조례가 제정되며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한 제정 속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후 매년 8건~10건 내외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3년에는 24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증가하였다(이유주, 2025). 이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의견으로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현행보다 확대하되, 다자녀 차등지원 체계 유지’가 제시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첫째 자녀 양육 경험은 둘째 자녀 출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정은희, 최새은, 2016). 때문에, 후속 출산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에서부터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하나부터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둘, 셋 낳을 생각을 할 수 있다”, “한 아이를 위해서도 국가가 함께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진다(이유주, 2025). 정은희와 최새은(2016)에 따르면 “첫째

자녀 양육 지원체계는 둘째자녀 계획의도를 조절”(p.146)하기 때문에 “출산지원정책의 방향은 현재의 다자녀 지원 중심에서 첫째 자녀 양육지원으로 확대”(p.152)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만, 앞서 제 1절 주요 결과 요약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문가마다 어떤 정책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보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주거 지원은 확대하되, 현금성 지원은 현행처럼 다자녀 중심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있다. 따라서, 급여 유형별 차등지원 및 보편화의 적정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다자녀 차등 지원 정책이 아동의 기본권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법적·가치관적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2000년~2020년까지의 합계출산율 변화만을 분석했는데, 2025년 결과를 갱신(update)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0.73명→0.75명)하였고, 2025년에도 2년 연속 상승하여 0.8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강인선, 2025)이 있는 만큼, 2025년의 출산율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5년 인구총조사자료는 2026년에 제공될 예정이다.

둘째, 인구총조사가 5년 주기로 제공됨에 따라, 본 연구는 5년 단위로 합계출산율을 분석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

준으로, 연도별 변동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추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대안적으로 내삽(interpolation)²¹⁾ 기법을 활용하여 그 사이값들을 추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우선 탐색적으로 5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내삽(interpo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1년 단위 추정치를 산출하여, 연도별 변화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는데, 향후에는 지역별로 그리고 인구집단(소득, 교육수준 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 등 추가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별 분석을 통해 지자체별 정책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인구집단별 분석은 목표 집단(target group)을 설정하는데 정책적으로 유용한 기초 및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사별은 분석하지 못했고, 자녀 수별 개별 혼인 및 이혼 전이확률 대신 평균 혼인 및 이혼 전이확률을 사용하였다. 현재 인구동향조사에서는 배우자 사별 그리고 자녀 수별 혼인 건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모형의 정밀성과 정확도가 다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재혼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계청은 해당 자료들의 생산·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반복 횡단 자료를 활용했는데, 개별 개인을 동태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 자료가 모형에 더 적합하다. 다만, 현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의 경우 출산 사례수가 너무 적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충분한 출산 사례 등을 확보한 인구동태 전용 패널조사의 자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21)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범위 내에 있는 값을 추정하는 기법으로, 두 지점 사이에 있는 값을 선형적으로 잇거나 더 복잡한 곡선으로 연결하여 계산

서, 2025년 통계청이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을 다루기 위해 개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는 매우 고무적이다. 향후 인구동태패널통계가 충분히 축적된 후,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혼인, 이혼, 재혼, 자녀 수별 출산율 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문헌]

- 강민정. (2024). 독일과 네덜란드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시사점. **KWDI Brief**, 제93호, 1-9.
- 고영선. (2024).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KDI FOCUS**, 130. 1-12.
- 김은정. (2024.12.20.).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제36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포럼** [발표자료].
- 민인식, 유예림. (2020). 출산량과 출산지연 효과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기여도 분해: Das Gupta 분해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25(2), 24-48.
- 배혜원. (2025). 다자녀 지원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343. 86-104.
- 신영규, 조성호, 변영환, 남윤재, 김우성. (202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진호. (2019). 더블딥 출산을 요인 규명과 향후 추이. **응용통계연구**, 32(4), 463-483.
- 이동선, 조선미, 박송이, 이진숙, 임연규, 고영우, 김근태, 이혜정. (2024). **2024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윤경, 변수정, 김은정, 진화영, 주보혜, 남궁은하, 김주현, 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박중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희, 정진호, 김동배. (202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관계 혁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소영, 장인수, 이삼식, 이철희, 신손문, 신성호, 박현경, 손인숙, 손호성, 오수영, 최용성. (2019).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

- 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이철희. (2023). 1992~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46(3), 79-110.
- 이철희, 김정호, 이소영, 민규량. (2023).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위원회.
- 이태열. (2022.10.4.). 이혼율 왜곡 현상에 대한 논의. **KIRI 리포트 이슈분석**. 보험연구원.
- 이후빈. (2024). 패닉바잉 시기 청년세대 주택구매자의 자금조달 분석. **부동산분석**, 10(3), 135-154.
- 전병유, 황인도, 박광용. (2018).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은행.
-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2023).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2023-29.
- 정은희, 최새은. (2016). 둘째 자녀 출산 포기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28(3).131-161.
-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 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6, 14-4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6년 2월 발행 예정). 「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 마련 지원」 **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구학회. (2016). **인구대사전(전면개정판)**. 통계청.

[국외문헌]

- Bongaarts, J., & Feeney, G.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 Caswell, H. (2001). *Matrix Population Models: Constru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2nd Ed). Sunderland, MA: Sinauer Associates.

- Chen, M., Yip, P. S. F. & Yap, M. T. (2018a). Identifying the most Influential Groups in Determining Singapore's Fertility. *Journal of Social Policy*, 47(1), 139-160.
- Chen, M., Lloyd, C. J. & Yip, P. S. F. (2018b). A new method of identifying target groups for pronatalist policy applied to Australia. *PloSONE*, 13(2).
- Choi, S., Kwan, D., & Kye, B. (2023). The COVID-19 pandemic and fertility responses: TFR simulation analysis using parity progressions in South Korea. *Demographic Research*, 49(32), 849-864.
- Das Gupta, P. (1993).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of Rates: A User's Manual*.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23-186.
- Kitagawa, E. M. (1955).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0(272), 1168-1194.
- McDonald, P. (2013). Societal Foundations for Explaining Low Fertility: Gender Equity. *Demographic Research*, 28, 981-994.
- Schoen, R. (2006). Insights from parity status life tables for the 20th century US. *Social Science Research*, 35(1), 29-39.
- Yip, P. S. F., & Chen, M. (2016). An elasticity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ronatalist measures in Taiwan. *Asian Population Studies*, 12(3), 273-293.
- Yoo, S. H. & Sobotka, T. (2018). Ultra-low Fertility in South Korea: The Role of the Tempo Effect. *Demographic Research*, 38(22), 549-576.
- OECD. (2017). *Dare to Share: Germany'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통계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1). 인구총조사(연령별/출생자녀 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 이상- 시도)[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F2001에서 2025.11.02. 각 연도 자료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4a). 사회조사(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60R에서 2025.7.1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4b). 사회조사(재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80R에서 2025.7.28.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4c). 사회조사(이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에서 2025.8.2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4d).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에서 2025.8.2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4e). 인구동향조사(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에서 2025.7.3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4f). 사회조사(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13세 이상 인구))[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에서 2025.8.2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a). 인구동향조사(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에서 2025.11.02.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b). 인구동향조사(혼인건수, 조혼인율)[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3

- 에서 2025.6.26.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c).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에서 2025.6.2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d). 인구동향조사(시도/성/연령별 혼인율)[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에서 2025.6.26.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e). 인구동향조사(시도/부부의 혼인종류별 혼인)[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1에서 2025.7.21.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f). 인구동향조사(시도별 평균초혼연령)[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에서 2025.11.01.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g). 인구동향조사(이혼건수, 조이혼율)[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4에서 2025.7.28.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h). 인구동향조사(시도/성/연령별 이혼율)[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9에서 2025.8.2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i). 인구동향조사(시도/평균 이혼 연령)[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11에서 2025.11.01.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j). 인구동향조사(시도/혼인지속기간(동거기간)별 이혼)[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6에서 2025.7.28.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k). 인구동향조사(시도/미성년자녀 수별 이혼)[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7에서 2025.7.28. 인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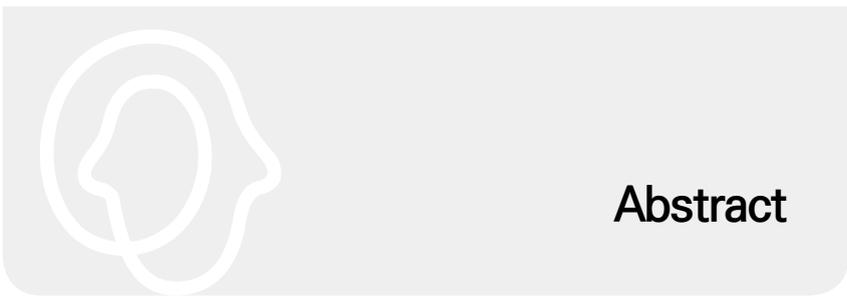
- 국가데이터처. (2025l).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23~))[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_1에서 2025.8.2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m). 인구동향조사(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에서 2025.7.30.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n). 신혼부부통계[데이터 세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sub/showStblGams3.do?stts_cd=H003001에서 2025.11.01.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o). 인구동향조사(시도/출산연령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에서 2025.11.01.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p). 합계출산율. https://kostat.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289에서 2025.11.02.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q).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에서 2024.11.02. 인출함.
- 국가데이터처. (2025r).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I2에서 2024.11.02. 인출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a). 가족과 출산조사(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 수)[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304에서 2025.7.23. 인출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b). 가족과 출산조사(기혼여성(19~49세)의 이상자녀 수)[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I038에서 2025.7.23. 인출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c). 가족과 출산조사(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

- 요성)[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1N308&conn_path=I2에서 2025.7.23. 인출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d). 가족과 출산조사(기혼여성(19~49세)의 본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BI029에서 2025.7.23. 인출함.
- 한국부동산원. (2025).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40에서 2025.11.02. 인출함.
- 한국은행. (2025). 통화금융통계.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F0140>에서 2025.11.02. 인출함.
- Human Fertility Database. (2025). Total fertility rate (By birth order)[데이터 세트]. <https://www.humanfertility.org/Country/Country?ctr=KOR>에서 2025.7.30. 인출함.
- OECD. (2023). Hours worked (Hours/worker, 2023).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hours-worked.html>에서 2025.11.02. 인출함.

[보도자료, 기사]

- 강인선. (2025.6.25.).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올해 합계출산율 0.8명 이룰수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352007>
- 국가데이터처. (2024.12.18.). **2023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보도자료].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4&list_no=434241&act=view&mainXml=Y
- 국가데이터처. (2025.9.3.).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보도자료].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38375

- 국토교통부(2024.12.27.).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3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10.5.).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224&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pageIndex=30>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4.6.19.).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 분야 총력지원+사회인식 노력강화**.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pageIndex=2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4.5.2.).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03&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
- 박상은. (2024.6.18.). 시간도 장소도 내맘대로"... 네덜란드·독일의 놀라운 워라벨.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14078>
- 이유주. (2025.06.23.). “다자녀 혜택만 계속 늘어나”...저출산 정책에 소외감 느끼는 외동 부모들. **베이비 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237>
- 통계청 (2020.7.3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1d14134bd2ed11f716f4bdf2f7d15>



Abstract

Population Dynamics and Total Fertility Change

Project Head: Kim, Eun Jung

In 2024, Korea's total fertility rate (TFR) was 0.75 births per woman. Korea has experienced a sustained decline in fertility since the early 2000s, with a particularly sharp downturn beginning in 2015. From 2015 to 2023, Korea's TFR fell continuously for nine consecutive years, and between 2015 and 2020 alone it declined by approximately 37.9 percent—the most rapid five-year decrease observed since 2000.

While Korea's fertility decline has been well documented, much of th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on socioeconomic or attitudinal determinants, with comparatively limited attention to the demographic mechanisms underlying the decline. In particular, few studies have quantitatively examined how declines in marriage, increases in divorce, and reductions in parity-specific fertility rates have contributed to the overall decline in fertility.

To address this limitation, the present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changes in marriage rates, divorce rates, and parity-specific fertility rates contributed to changes in Korea's TFR between 2000 and 2020.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the 2015–2020 period, when fertility decline intensifie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from 2000–2015 to assess whether the drivers of fertility change differ across periods and to identify potential structural shifts in demographic dynamics.

Drawing on the stochastic transition process model developed by Yip and Chen (2016), the study first establishes a mathematical function to calculate the TFR. It then employs two complementary analytical approaches—fertility elasticity analysis and decomposition analysis—to assess the effects of marriage, divorce, and parity-specific fertility rates on the TFR.

Fertility elasticity is defined as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TFR associated with a one percent change in a given parameter. For example, if marriage rates—defined as the number of marriages divided by the number of unmarried women—increase by one percent, fertility elasticity indicates the corresponding percentage change in the TFR. A higher elasticity implies that the TFR is more sensitive to changes in that parameter and that the parameter plays a more influential role in shaping fertility outcom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TFR was most sensitive to changes in marriage rates throughout the study period, with this sensitivity increasing markedly after 2015. In addition, the elasticity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to first birth (parity 0→1)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2015, highlight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first births in shaping re-

cent fertility trends in Korea.

Decomposition analysis further clarifies the changing drivers of fertility decline across periods. Between 2000 and 2015, the reduction in the TFR was driven primarily by declining marriage rates. During this period, however, marital fertility rates increased, partially offsetting the negative impact of reduced marriage on overall fertility. In contrast, the decline in the TFR between 2015 and 2020 was characterized by both continued reductions in marriage rates—which remained the dominant contributor, accounting for approximately 56 percent of the total decline—and simultaneous declines in marital fertility rates, which contributed about 31 percent. Notably, the decline in the transition probability to first birth (parity 0→1) accounted for the single largest share, contributing approximately 19 percent of the overall decline in the TFR.

Taken together, the fertility elasticity and decomposition analyses indicate that, first, marriage remain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in Korea, reflecting the country's very low prevalence of non-marital childbearing. Second, prior to 2015, relatively high levels of marital fertility partially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declining marriage rates on the TFR. After 2015, however, this compensatory mechanism weakened as marital fertility—particularly first-birth fertility—also began to decline, thereby accelerating the overall fertility downturn.

In addition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conducted an expert survey involving 19 specialists in demography and related fields to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declines in marriage and fertility. Experts most frequently identified labor market dualism as the primary driver of declining marriage rates, while difficulties in balancing work and family life were most commonly cited as the main cause of declining fertility. The sharp fertility decline observed since 2015 was also widely attributed to the rapid escalation of housing prices.

In response to the pronounced decline in first births, a plurality of experts (27.78 percent) argued that benefits for first births should be expanded beyond current levels, while maintaining differentiated support for higher-order births. However, experts expressed divergent views regarding the appropriate design of such policies. Some advocated for the universal provision of non-monetary support—such as housing assistance—alongside birth-order-differentiated monetary benefits, whereas others favored equalizing monetary benefits across birth orders while differentiating work–family balance policies to reflect cumulative caregiving burden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demographic assessment of Korea's fertility decline by integrating fertility elasticity analysis, decomposition analysis, and expert survey evidence. I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the first study to empirically and systematically examine the sharp fertility decline that began in

2015, thereby identifying a clear structural shift in the mechanisms underlying fertility change.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wofold. First, given that marriage remains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of the TFR, fertility policy should prioritize addressing the structural factors that delay or discourage transitions into marriage, including labor market insecurity, housing constraints, and work-life balance difficulties. Second, as the importance of first births has increased substantially in recent years, reducing the burden of childrearing from the first birth onward is essential for facilitating subsequent births. However, existing childbirth and childrearing policies remain largely oriented toward multi-child famil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child and family policy framework requires fundamental reassessment and that more systematic, forward-looking debates are needed regarding its future direction.

Key words: Total fertility rate, Marriage, Divorce, Parity-specific fertility rate, Fertility elasticity analysis, Decomposition analysis, Expert survey